



HOMO MIGRANS

Vol.13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15

Nov.

Homo Migrant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13 (Nov. 2015)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김용우(교원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용일(대구교대)
학술이사 김유정(한국외대)
권윤경(서울여대)
나혜심(성균관대)
마은지(송실대)
재정이사 문종현(한양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오영인(성균관대)
편집위원 고유경(원광대)
김정욱(인천대)
신동규(창원대)
양재혁(성균관대)
이경일(경성대)
이선희(충북대)
이찬행(성균관대)
정용숙(대구대)
홍용진(고려대)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

회비 10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3호(2015년 11월)

발행일 2015년 11월 30일

지은이 이주사학회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015년 11월
ISSN: 2093-3061

<논문>

집시와 국민국가: 프랑스의 차별원리를 중심으로 — 문종현	05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 19세기말 바레스를 중심으로 — 마은지	30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 오정은	60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 박 단	83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 김 주 은	103
日本市民による植民地支配の記憶の試み :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を事例に ————— 大和 裕美子	124
<연구회 회보>	145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148
<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151
<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155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Nov. 2015
ISSN: 2093-3061

<Article>

Rom and nation state: Discrimination in modern French history
————— Jong-hyun MOON 05

The nation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between myth and reality
: focusing on Maurice Barrès in the late 19th century.a ——— Eun JI MA 3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immigration sentiments and
Public support for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in Europe — Jung-eun OH 60

The Charlie Hebdo Incident and Minorities in France
: Muslims, Jews, and the French Republic ————— Dahn PARK 83

Ontology of Love: A Critical Review on Love of the Present Time
————— Joo-eun KIM 103

The Building of a Memorial in Japanese Society
: Through The Case in Fukuoka Prefecture ————— Yumiko YAMATO 124

<Bulletin> 145

<Ethic Rules> 148

<Submission Rules> 151

<Editing Rules> 155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논문 ■

집시와 국민국가
-프랑스의 차별원리를 중심으로-

문 중 현

I. 들어가며

유대인과 집시는 유럽의 대표적 소수민족이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사회적 금기로 확고히 자리 잡았지만 집시를 향한 편견의 시선과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나치의 집단학살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의 죽음은 쇼아(Shoah)로 역사화되고 기억되는 반면, 50만~80만으로 추정되는 집시에 대한 집단학살은 아직 구별되는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이 실행한 집시 절멸작전은 동유럽에서 유랑·정주하던 모든 집시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즘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동안 약화되었던 집시에 대한 공격과 차별은 오늘날 중부와 동부유럽에서 사회주의 몰락 이후 강화된 민족주의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 더불어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집시에 대한 추방과 배제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의 집시 추방정책은 여전히 강하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95%이상의 집시인구가 정주생활을 영위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집시를 유랑하는 민족으로 간주하는 낡은 스테레오타입이 여전히 강하게 존속되고 있다. 2013년 10월 전임 사르코지 정부에 비해 온건적인 이민자 정책을 약속한 사회당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의 지지를 하락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해법으로 동유럽 출신 집시추방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였다. 프랑스 북부 릴 시에서 집시 캠프 2곳이 전격적으로 철거당하면서 어린이 60여명을 포함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다. 파리 19구에서는 160여명이 거주하는 집시 캠프가 철거당했고 리옹에서는 240여명의 집시가 루마니아로 비행기로 강제송환 되었다. 이러한 사회당 정부의 전국적인 규모의 집시 추방은 내무부 장관인 마누엘 발스(Manuel Valls)에 의해 추진되었다. 발스는 “비위생적인 집시촌은 수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¹⁾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프랑스 인들이 발스의 정책을 지지하였다.²⁾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다수 프랑스 인들이 가진 집시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절도와 범죄를 일삼아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비루하고 누추한 민족-은 집시 추방정책의 대중적 지지기반이자 공공안전과 위생을 둘러싼 여론의 쟁점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집시를 향한 서구가 지닌 편견의 근저에는 우선적으로 집시를 종족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집시에 대한 실체론적 관점에서 종족(ethnic)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집시라고 불리는 종족 집단의 기원을 밝히고 집시에 관한 전체적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집시를 인종과학과 민족국가 형성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타성(異他性:alterité)을 부여받아 만들어진 혹은 발명된 집단으로 간주한다. 먼저 집시에 대한 종족적 분류에 대한 이른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집시라는 인구집단이 종족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통치술을 발전시킨 프랑스가 집시를 배제하고 정주화시키며 동화, 통제하려 수립하였던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집시에 대한 추방정책은 15세기 집시가 프랑스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집시에 대한 추방과 억압 정책은 프랑스가 절대왕정을 형성하

1) “Dehors les Gitans!”, *Courrier international* (30 septembre 2013)
2) 주영재, 「프랑스 집시 추방 “선거용 희생양”」, 『주간경향』 (2013년 10월 8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rtid=201310011829111> (검색일: 2015년 9월 12일)

고 근대 국민국가로 변모하면서 점차 그 성격이 변해갔다. 집시에 대한 정책은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면서 인구를 통치해야 했던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다른 인구 집단과 차별되는 성격을 부여한 바 여기에서는 집시에 대한 이타성이 말들어지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럽의 집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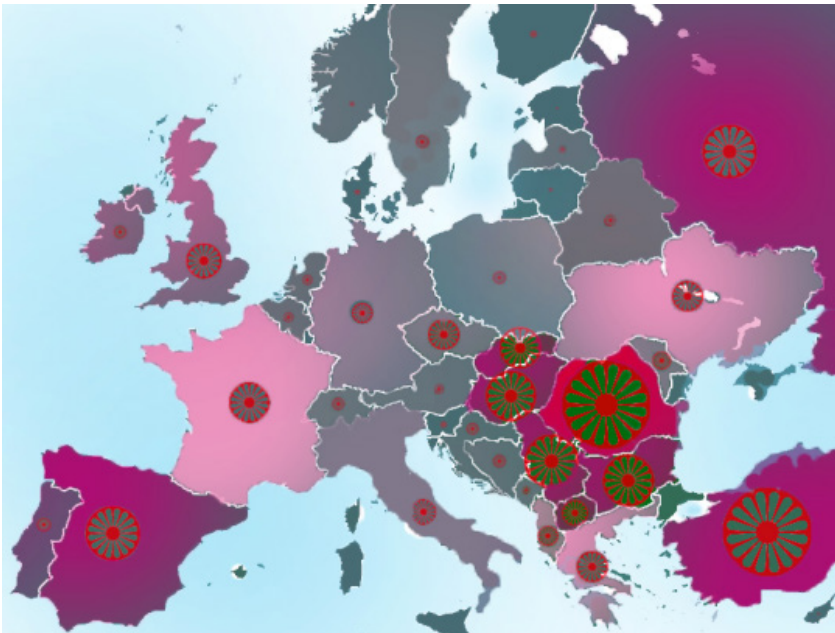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흔히 ‘집시(Gypsy)’라고 부르는 유럽의 ‘유랑 민족’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약 7백만~9백만)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집시는 인도에서 기원해 다양한 형태로 변이된 집시어(chib romani)를 사용하고 주변의 인구집단들과는 가족, 육아, 사유재산 등의 일상적 생활방식과 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중세 이래 집시에게 부여된 유랑민족이라는 이미지는 이러한 정의가 형성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였다. 여전히 노마드적 생활을 영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몇몇 소규모 집시 그룹과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집시집단의 이주는 집시에 대한 노마드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집시 인구집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구통계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즉 ‘집시’라는 인구집단의 정의에 따라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때로는 5배에 이르기 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집시 인구수는 아직까

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다.³⁾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집시인구수는 1965년 148,000명에서 1992년에는 313,000명으로 증가하고, 헝가리에서는 1971년과 1993년 통계사이에는 대략 50%의 증가율을 보인다. 또한 루마니아⁴⁾에서는 1977년과 1992년 사이에 집시인구가 80%가 증가하는 반면 체코에서는 1980년과 1992년 사이에 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나타난 이러한 빠른 인구규모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무엇이 이러한 통계의 오류를 발생시켰는가? 그것은 ‘집시’라는 인구집단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고 오직 ‘명칭’으로만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

- 3) 전 지구적으로 추정되는 집시인구 1400만 중 700~900만이 거주하는 유럽의 집시 분포도
“Council of Europe website” at the Wayback Machine (archived February 21, 2009). European Roma and Travellers Forum (ERTF). 2007. http://en.wikipedia.org/wiki/Romani_people#cite_note-140 (검색일: 2014년 12월 14일)



- 4)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집시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집시가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족적 범주화(catégorie ethnique)로 집시의 인구집단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조사자에 의한 설문방식과 조사대상이 가진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전자는 조사자의 ‘객관적 범주화’에서 출발하고 후자는 피조사자의 ‘주관적 범주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두 조사 방법의 차이는 당연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집시라는 문화적 재현의 범주를 객관적 인구집단의 수로 전환하는 데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활용된 객관적 범주화 방식은 먼저 실제적 종족단위로 집시를 정의한 이후 이 기준에 따라 인구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1993년 루마니아 인구통계 조사에서는 선거인 명부와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는 기준을 통해, 그리고 1993년 헝가리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방식에서는 인구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삶의 방식(style de vie)’이라는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1995년 불가리아에서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시’라고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범주화 1970년과 1980년 체코 정부는 언어, 삶의 방식, 자녀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류학적 지수(indices anthropologiques)’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⁵⁾

이와 같은 객관적 범주화 방식과는 달리 주관적 범주화 방식은 보다 민주적 인구조사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 방식에서는 설문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이 ‘롬(rom 혹은 roma)’과 ‘치간느(Tsigane)’라는 범주를 혼동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중요시해 더 이상 자신에게 ‘집시’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무엇보다 설문 문항에 대한 대답이 가져다줄 미래의 이익 혹은 불이익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기피할 수도 있다. 주관적 범주화 방식으로 대표적인 집시인구 조사는 1991년 체코 정부가 시행한 인구 조사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집시라고 밝히는 32,903명 가운데 집시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50.5%에 불과한 반면 집시어를 사용하는 24,294명 중 자신을 집시라고 인정한 사람은

5) Mathieu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aris: L'Harmattan, 2010), pp. 10-11.

68.5%에 불과 했다.⁶⁾

위에서 살펴본 동유럽 국가의 인구통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시’라고 불리는 인구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한 정량적 결과들은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구조사의 중요한 출발점, 즉 “역사적으로 ‘집시’라고 불린 집단을 하나의 객관적 종족(ethnie)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가?”라는 전제가 가진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오랜 시간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치간느(Tsigane), 롬(Rom), 유랑민족(Gens du voyage), 지탕(Gitan), 보헤미안(Bohemien)등으로 불렸던 집단은 하나의 객관적 단일체가 아니다. ‘집시’라는 명칭은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일 뿐 집시 스스로에게는 관계없는 이름이었다. 집시를 지칭하는 이름들은 혼용되면서 하나의 대상에 다양한 이름이 부여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름이 다양한 그룹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집시 집단 내부에서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도 여러 가지다. 다른 유럽인들이 집시를 불렀던 명칭 그리고 집시들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불렀던 명칭은 대부분 집시들의 직업과 관련된 단어에서 파생하였다.

프랑스에서 ‘치간느’ 동유럽에서 ‘찌간닌(Ciganin, Tigan, Tiganin, Cigany)’⁷⁾로 불린 집시들은 지역적 다양성과 더불어 시간적으로도 다양하게 불렸다. 중세 이래 서유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집시들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경유하면서 여러 이름을 갖게 된 것이

6) Roma and Stastics, Project on Ethnic Relations, Strasbourg, 22-23 may 2000, <http://www.per-usa.org/Reports/PERStrasbourg.pdf> (검색일: 2015년 8월 30일)

7) 오승은, 「포스트 사회주의 동유럽의 새로운 집시 대중문화」, 『역사와 문화』, 19호(2010), 161쪽.

집시와 국민국가

다.⁸⁾ 집시들 중 19세기 후반 루마니아의 몰다비아(1855년)과 발라키아(1856년) 노예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유럽과 아메리카까지 이주한 집단은 자신들은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집시’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스스로 Rom 또는 Roma로 부르며 다른 집시집단과 달리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1971년 국제집시회의(World Romani Congress)를 통해 성립된 ‘롬국제연합(IRU)’은 민족을 드러내기 위해 도시 로마와 혼동될 수 있는 롬(rom)이 아닌 롬(rrom)으로 명칭을 표기하였다. 이는 자신의 민족적 기원을 인도로 공식화하면서 힌두어 ‘돔바(Domba)’ 또는 도마(Doma)에서 파생된 ‘로마니’ 혹은 ‘롬’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근대 프랑스의 법률에서 집시는 노마드(nomades) 혹은 유랑민족(gens de voyage)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적 범주인 유랑민족이 종족적 집단인 ‘집시’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집시들은 정주적(sédentaire)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유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 다수는 집시가 아닌 프랑스인들로 주로 계절 농업노동자 혹은 서커스, 공연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1세기 프랑스에서 동유럽에서 이주해 온 집시들은 프랑스인이 아닌 미등록 체류인(sans papiers)으로 행정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절도, 범죄,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켜 세계적인 관광도시 파리의 공공 치안과 미관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배척받고 있다.

8) 집시의 명칭과 분류

사람들 → 집시		
어원	명칭	
그리스어	프랑스	치간느 (또는 보헤미안)
	독일	치고이너
	이탈리아	징가리
	동유럽	찌가닌
이집트인	영국	집시
	스페인	히타노

이 표는 김희경, 『프랑스의 집시와 이동의 문제』, 『프랑스학연구』, 61권 (2012), 186쪽에서 인용하면서 변용한 것입니다.

III. 집시의 탄생

먼저 집시의 기원에 관한 학설을 살펴보자. 집시는 한때 이스라엘의 사라진 부족에서 그 기원을 찾는 성경적 전통이 중세에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집시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두 가지 학설로 구성된다.

1)프랑스에서 15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까지 지속된 이집트 기원설이다. 1427년 8월 17일 최초로 프랑스 영토에 나타난 백여 명의 남성과 여성, 아동으로 이루어진 집시에 대한 기록은 『르 주르날 땡 부르주아 드 파리(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에서 나타난다.⁹⁾

“저지 이집트에서 왔으며, 매우 독실한 기독교도를 자처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기독교인이었으나 사라센인들에게 정복당해 잠시 배교한 상태에서, 다시 기독교인에게 정복당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죽었다.”

여기에서 집시는 이집트 출신의 기독교 순례자들(pélerins)로 이집트인을 뜻하는 ‘에집시앵(Egyptiens)’으로 지칭되었고 검은 피부로 인해 프랑스인에게 대단히 낯선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집시들이 교황으로부터 고해의 순례를 명령받은 집단으로 알려지면서 파리의 대주교는 이들을 환대하였다. 집시의 복장, 피부색, 귀걸이와 특히 이들이 행하는 점술(손금보기)은 파리 시민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집시가 행하는 주술적 행위들이 대주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대주교는 점성술사와 점성술사의 고객들을 파문하기에 이르러 집시는 파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전되던 민담이나 전설에 기댄 집시에 대한 이집트 기원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집시에 대한 신비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de Paris)』(1831), 1875년 조르주 비제에 의해 오페라로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진 메리엔느의 소설 『카르멘』(1845)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집시여인은 낭만적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9) *Le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17 août 1427)

2)18세기 언어학과 인종학의 발달과 더불어 성립된 인도 기원설이다. 인도 기원설에서 집시는 언어적으로 유사한 인도의 종족인 “Cingar, Cengar”에 기원한 종족집단으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집시는 인도 남부의 하층민인 파리아(Paria)보다는 좀 더 상위계급으로 법도 없고, 춤추고 노래하고, 흠치고 속임수를 쓰는 유랑민족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집시는 공동체에는 필요하지만 힌두교에서 금하는 ‘불순한’ 직업에 종사했던 백정, 정육업자, 무두장이, 묘지기, 냥마장수, 세공장인, 곡예사, 광대, 등으로 인도사회에서 정주하는 생활이 금지된 카스트 외부의 신분집단으로 생각되었다. 10세기 인도에서 출발한 집시들이 이란고원과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며 몽골제국을 섬기다가 몽골제국 몰락이후 14세기에는 비잔틴 제국에까지 도달, 이후 유목민의 길을 따라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

이집트 기원설과 달리 인도 기원설은 언어학과 인종학적 가설에서 출발했으나 인도의 로하라(Lohara), 반디자라(Bandijara), 산사(Sansi), 그리고 상가르(Cangar, Cingar, Cengar) 언어는 몇몇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집시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언어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¹¹⁾ 언어학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많고 수레바퀴 문양을 사용하는 인도 북동부 란치(Ranchi) 지방의 사드리(sadri)족은 집시와는 달리 정주하는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집시의 기원 종족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롬국제연합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규정한 돤바 혹은 롬바(Romba)족 역시 마찬가지이다. 돤바 혹은 롬바족은 인도 북부의 여러 소수 종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돤바족을 아리안족의 침입 이후에도 유지된 인도 토착 문명의 후예들로 생각하는 학설도 있으나 이런 학설은 인도 고대사에 대한 비약적인 해석일 뿐이다. 결국 오늘날 집시의 인도기원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돤바족과 집시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한편 집시의 인도 기원론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주로 아라비아, 페르시아인들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들에서 지아트(Djat), 조트(Zott), 카울리(Kauli), 루리(Luri) 등으로 표기된 중앙

10) 집시의 기원에 관한 동유럽 학자들의 성과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박정오, 「집시의 기원과 유럽 이주 그리고 루마니아」, 『동유럽발칸학』, 2호 (2005), 382~388쪽.

11) Marcel Courthiade, “Rom”, *Encyclopédie Universalis*, 2013.

아시아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은 집시라는 종족과는 상관없이 인도에서 이주한 모든 인구를 지칭하는 용어였을 뿐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집시들을 다시 이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로 이주한 ‘집시’들이 도마니(Domani) 혹은 나와르(Nawar)이고 아르메니아 지역에 안착한 집시를 로마니(Lomani) 혹은 포사(Posa), 그리고 유럽으로 계속 이주해간 집단이 로마니(Romani)이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집시의 기원, 이주 원인과 이주 경로는 불분명 하다. 하지만 집시가 18세기 이후 인도북부에서 기원해 유럽으로 이주한 하나의 단일한 종족집단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이것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학문은 당시의 비교언어학으로 집시의 언어, 즉 로마니아어(romani)를 북부 인도 지역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계열의 언어로 정의하였다. 18세기 언어학에서 집시의 언어는 인도계 주민의 이산의 결과로 다양한 방언 속에서 나타난 단어와 문법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로 간주되었다. 독일의 역사학자인 그렐만(Grellmann, Heinrich Moritz Gottlieb:1756-1804)은 이러한 비교언어학에 바탕을 두고 집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가 1783년 출간한 『집시(Die Zigeuner)』는 1810년 프랑스에서 『보헤미안인들의 역사(Histoire des Bohémiens, ou tableau des moeurs, usages et coutumes de ce peuple nomade)』로 번역되었을 정도로 유럽의 집시연구에 있어서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그렐만의 연구 이전에도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의 유목민족이 사용하는 방언의 유사성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인정되는 학설이었다. 그의 업적은 이러한 언어적 학설을 통해 보헤미안, 치간느, 징가리, 이집트인, 집시 등으로 불리던 이동 집단이 하나의 종족을 구성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¹³⁾ 따라서 그렐만 연구 이후 집시는 인도인이라는 종족적 기원을 가지고, 공통의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다른 인구집단과 구분되는 동질적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보헤미안들의 기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어느 나라의 인

12) *Ibid.*

13)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 21.

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이자 필수적인 연구에서는 보헤미안의 언어가 토착민의 언어로 사용되는 곳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인도(힌두스탄)일 수밖에 없다.”¹⁴⁾

그렐만의 저작은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집시학이라는 종족학이 성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연구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면서 영국에서는 1888년 ‘집시 연구회(Gypsy Lore Society)’가 창립되었다. 하지만 그렐만의 연구는 주로 잡다하면서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과도한 일반화 근거한 것이었다. 그의 연구가 헝가리와 트란실베이니아 지역의 몇몇 집시 가족의 언어가 지닌 산스크리트어와의 유사성을 조사한 헝가리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호르티스(Samuel Augustini ab Hortis:1729~1792)의 관찰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이후 집시연구자들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 당시의 집시연구는 오로지 몇몇 문헌에 의존해 해석을 추구한 전형적인 ‘골방의 학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집시 연구자들은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문헌적 근거와 경험적 연구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진정한 ‘집시’는 더 이상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에서도 한편으로는 실제적 집시집단을 찾아 나서기도 하면서 현실과 이론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집시 연구들은 집시의 시원적 요소로 항상 인도를 바탕으로 두고 집시를 본질화하였다. 18세기 유럽에서 인간과 민족의 기원을 인도에서 찾는 인도 기원설은 헤르더로 대표되는 독일 낭만주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던 견해였다. 당시 많은 역사가와 지식인들이 인도를 인류문명의 모태, 즉 ‘어머니 인도(Mère Inde)’로 상정하는데 있어 언어학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¹⁵⁾ “언어학은 아리안족을 몽골족과 챔족(cham)의 후예, 그리고 셈족(sémites)에 대비되는 조상으로 설정”¹⁶⁾할 수 있게 해주

14) 앙리에뜨 아쎬오, 김주영 역, 『집시, 유럽의 운명』 (서울: 시공사, 2003), 115쪽에서 재인용.

15) Léon Poliakov, *Le mythe aryen. Essai sur les sources du racisme et des nationalismes* (Bruxelles: Edition Complexe, 1987), p. 212.

16) *Ibid.*, p. 214.

었다. 또한 인류가 아닌 오로지 특별한 인종, 즉 아리아 인종을 역사와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아리안 신화의 출발점이었다. 그뿐만이 교수로 재직하였던 독일의 괴팅겐(Göttingen) 대학은 인류 인도기원설에 근거해 비교언어학과 역사를 연결시키려는 지식의 중심지였다.

1788년 영국의 시인이자 법률가인 윌리엄 존스(Williams Jones)가 만든 인도유럽어족이라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와 유럽의 유랑민족 사이에서 발견되는 친족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어, 라틴어와의 친족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대부분의 동양학자들이 존스의 학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서 서구의 역사가, 작가들은 인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독일 낭만주의 운동의 선구자인 프리드리히 쉐르겔(Friedrich Schlegel: 1772~1829)은 인종과 언어의 친족성을 인류학 위에 정초하였다. 그는 ‘인도-게르만 언어’에 ‘인도-게르만 인종’이라는 과학적 실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유럽인종’이라는 개념을 선호하기도 하였지만 ‘인도-게르만 인종’ 신화는 문학과 역사학에서 대중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프랑스에서도 이 신화는 영향을 미쳐 미슐레(Michelet)는 『로마사(Histoire roamine)』(1830)에서 “태양의 운행과 지구의 자성을 따라 인간의 기나긴 이주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에서 프랑스로 ... 인종과 종교의 모태인 인도에서 서유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18세기 유럽에서 집시의 인도기원설은 비상식적 학설이 아니었다.¹⁷⁾

19세기 학문적 관심의 변화와 더불어 유럽에 국민국가가 완성되기 시작하고 인종학이 대중화되면서 유럽의 소수민족이었던 집시와 유대인은 완벽한 타자로 차별받기 시작하였다. 유대인은 셈족의 후예로 정의된 집시는 ‘인도유럽인종’과 ‘아리아인종’의 후예와는 정반대의 기원을 가진 민족 집단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배척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집시가 다른 한편에서는 인종학적 유럽의 기원을 밝혀줄 매혹적인 집단이 되었다. ‘진정한 집시(vrai tzigane)’가 유럽인의 조상을 찾기 위한 열쇠가 된 것이다. 집시를 혐오하면서도 집시의 신체가 지닌 아름다움, 생명력과 건

17) *Ibid.*, p. 227에서 재인용.

장함이 찬양되었고 노동을 회피하는 게으름은 비참한 생활 조건 속에서도 가지는 여유와 낙천성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시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가 곧 집시의 박해가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시(Tsigane asocial)’와 ‘좋은 야만인 집시(Tsigane bon sauvage)’라는 집시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는 항상 공존하였다.¹⁸⁾

19세기 인류학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인종’이라는 개념은 ‘집시’라는 종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유럽의 인류학자들에게 먼저 발견해야 할 인간들은 비유럽인이자 타자였고 다른 세계였다. 먼저 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다른 대륙의 주민까지 유럽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했고 나아가 인간과 민족들에 대한 인종과학을 만들어 나아갔다.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는 이러한 인종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었다. 이제 유럽의 인종론자에게 집시는 먼저 자신들과 다른 인종적 분류의 대상이었고 다음으로 여러 개의 종족적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나뉠 수 있는 내부의 언어적, 생물학적 차이를 가진 종족집단이 되었다. 그래서 집시는 전통적인 집시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유랑 생활을 지속하며, 표준적인 집시어(romani)에서 파생된 단어를 포함하는 방언 사용하는 예니쉬(Yeniche), 타타르(Tatara), 토크르(Tinker) 혹은 퀸키스(Quinquis)로 나뉘어졌다. 인종론자들은 집시 내부의 이러한 하위 집단은 혼혈화된 집시간의 결혼과 집시와 집시가 아닌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설 위에 혈통의 순수성에 따라 범주화 하였다.¹⁹⁾ 하지만 오늘날 집시 연구자들에게 집시는 어떤 그룹도 다른 그룹을 대표하지 못하는 모자이크와 같이 파편화된 다양한 그룹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집시에 대한 인종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집시들의 피부색에 관한 것

18) Will Willems, *In Search of the True Gypsy. From Enlightenment to Final Solution* (London: Frank Cass Publishers, 1997), p. 223.

19) 앵거스 프레이저는 오늘날까지 집시를 종족적으로 분류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에게 타타르는 족보상으로는 집시에 속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집시피의 순수성이 덜한 집단으로, 퀸키스는 고립된 집시 분파의 후손으로 다른 집시들과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인 유사성이 없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Angus Fraser, *The Gypsie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p. 299.

이다. 인종론자들에게 피부색은 생리학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식별의 표시였다. 하얀 피부와 대비 되는 검은 피부를 보유한 집시는 동유럽에서 흑인으로 불렸다. 따라서 그들에게 검은 피부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유랑하는 전통적인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얀 피부를 보유한 집시는 자신을 집시로 표명할 지라도 사람들은 집시로 인정하지 않았다.²⁰⁾

IV. 집시와 국민국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종론적 편견과 함께 집시가 영위하는 유랑적 생활방식은 이들에 대한 혐오의 주된 근거였다. 1418년 프랑스에 처음 집시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유랑은 프랑스인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어가면서 유랑은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배척되며 국가에 의해 금지, 통제되어야 하는 생활방식이었다. 집시의 유랑적 생활방식에 대해 집시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엄격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집시를 국가의 영토에서 추방시키는 배제(exclusion), 다음으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집시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처벌(réclusion), 마지막으로 배제와 징벌을 가하는 정책들의 실패로 인해 새로운 집시에 관리방식으로 모색되는 포섭(inclusion)으로 변모되어갔다. 한편,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 대해 실행했던 유럽 국가들의 방식과 흡사한 양태를 지닌다. 근대 유럽의 역사에서 유대인 차별정책은 유대인의 개종과 정체성의 포기를 강요하는 동화 정책과 이러한 동화정책이 실패할 경우 이어서 나타나는 추방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명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절멸정책으로 변화되어 왔다.

프랑스 역사에서 집시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네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504년에 시작되어 대략 반세기 동안 지속되는 집

20) Jean-Pierre Liégeois, "Les Roms au coeur de l'Europe", *Minorités à l'est: variations sur la reconnaissance identita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5), p. 37.

집시와 국민국가

시에 대한 배제 원리에 기초해 수립된 추방정책이 실시된 시기, 다음으로 1561년 이후에는 형벌을 통해 교화하려는 포섭정책으로 변모한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정주화와 동시에 강제수용소로의 이주 정책이 실시된 시기, 마지막으로 1969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는 집시들의 삶의 방식을 전향시키려는 동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배제원리에 기반을 둔 프랑스 집시의 추방정책은 중세 프랑스 왕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504년 루이 12세는 자신의 왕국에 “유랑하는 불청객(Intrus vagabonds)” 이자 “정체불명의 사람들(Personnages inconnus)” 혹은 ‘이집트인’이라고 불리는 집시의 존재를 우려해 루앙(Rouen)의 대법관에게 이들을 사냥하고 강탈하듯 쫓아내라는 왕명을 내렸다. 1510년 국정자문회의(Grand Conseil)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집시에 대해 “이집트인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해 프랑스 왕국은 교수형”이 아닌 추방을 권고하였다. 1539년 프랑수아 1세는 보다 광범위한 집시의 추방령을 내렸다. 여기에서 집시는 “결코 왕국으로 들어오거나 머무를 수 없는” 집단으로 정의되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추방정책은 국가권력에게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 16세기 전반 프랑스는 주권이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권력은 전 프랑스 영토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지역의 사법과 행정을 중앙권력이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절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후 주된 국가의 관심사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집시에 대한 추방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웠다.

이후 집시에 대한 추방은 포섭의 원리에 기초한 감금(réclusion)으로 대체되었다. 19세기까지 지속된 이 정책에서 ‘보헤미아인’, ‘이집트’인으로 불린 남성 집시는 노역장으로 파견되어 강제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착수한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고 여성과 아동은 함께 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 감금되었다. 1561년 샤를 9세는 최초로 집시에 대한 노역형을 칙령으로 선포하였다. 칙령은 “만일 집시가 발견되거나 되돌아오면 2달 내에 판사는 즉각적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남자들은 수염과 머리를 자르고, 여자와 아동은 머리를 자른다. 그리고 남자는 노역장의 대

21)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 45.

장에게 인도해 3년 동안 복무하게 하라”²²⁾라며 프랑스 내의 집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1666년 루이 14세의 칙령으로 실행된 노역형을 통한 구금정책은 집시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귀족의 토지를 몰수하는 형벌을 가할 만큼 강력히 적용되었다. 이 칙령을 통해 집시는 어떠한 형태의 법적 절차도 필요 없이 체포, 감금된 다음 노역장으로 보내어졌다. 1682년 노역형이 불가능한 아동을 구빈원에 감금하는 왕령이 발표되었고 1764년 왕령은 다시 구금의 범위를 아동과 여성 그리고 지체부자유자까지 확대시켰다.²³⁾ 법률의 조항에 명시된 법 적용의 대상은 ‘집시’라는 종족집단으로 정의되어 있었지만 형법적 처벌은 집시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법률은 유랑민, 도시의 유랑하는 걸인과 사회 규범에서 이탈하는 프랑스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노역형과 감금은 19세기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병역과 공공 노역으로 변환되었다. 감금의 장소도 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서 빈민수용소(dépôt de mendicité)로 대체되었다.

제 3공화국인 성립된 19세기 후반, 유랑생활에 대해 적대적인 프랑스 정부는 집시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집시들은 유랑하는 생활방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랑의 범위는 줄어들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집시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집시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잠재적 피의자로 집시는 경찰의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다. 또한 동유럽에서 농노제가 폐지되기 시작하면서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다양한 집시 그룹의 이국적인 외양, 관습 그리고 이들의 빈곤은 프랑스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집시인구를 통치하는 포섭(inclusion)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1895년 3월 3공화국은 프랑스 국내의 모든 ‘노마드, 보헤미안, 부랑자’에 대한 인구 조사(recensement des nomades, bohémiens et camps

22) François Vaux de Foletier, *Les Tisganes dans l'ancienne France* (Paris: Connaissance du Monde, 1961), p. 49.

23)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도 절대왕정 체제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집시는 정착과 동화를 프랑스와 비슷하게 강요당했다.

volants)’를 실시하였다. 근대 국가의 통치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집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07년 프랑스 정부는 ‘호랑이 기동대(Brigades du Tigre)’라는 별명으로 불린 ‘경찰기동대(Brigades mobiles de police)’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프랑스 유랑인들과 집시를 외양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1895년 인구조사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유랑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신분증명서를 1912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 발급하였다.²⁴⁾ 이 법률에 따라 유랑인은 ‘인체특징기록수첩(carnet anthropométrique d’identité)’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1907~1908년에 발송된 내무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부랑자 종족, 로마니첼, 보헤미안, 치간느(vagabonds à caractère ethnique, Romanichels, Bohémiens, Tsiganes)’에 대한 상세한 사진기록이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사진기록의 분류에는 베르티용식 인체측정법(système Bertillon)이 적용되었다.²⁵⁾ 이 분류방식은 키, 피부색, 신체적 특징, 지문 등으로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인체 측정법이다. 이것은 범죄자의 얼굴 전면 사진과 측면사진을 찍어서 피의자의 신체 특성을 기록하는 경찰의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키, 상반신의 길이, 팔의 폭, 머리의 길이와 넓이, 광대뼈의 반지름, 오른쪽 귀의 길이, 가운데 손가락의 길이, 왼쪽귀의 길이, 왼쪽 팔꿈치의 길이, 눈의 색깔, 지문과 정면 측면의 사진”²⁶⁾ 등의 정보가 인체특징기록수첩 속에 기록되어야 했다. 집시의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고 기록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는 분명 생리학적 지표를 기준으로 인종을 분류해 내던 전형적인 근대 인종주의 담론의 효과였다. 비록 1912년 법률은 노마드의 범주에 프랑스인 행상과 유랑민도

24) ‘행상 직업과 노마드들의 통행규제와 관련한 1912년 7월 16일 법’

행정적 법제	명칭
1912년 법	노마드(nomades)
1969년 법	유랑하는 사람들(Gens du voyage)

김희경, 같은 논문, 186쪽.

25) François Vaux de Foletier, *Les Bohémiens en France au 19e siècle* (Paris: J-C Lattés, 1981), p. 171.

26) Félix Challier, *La nouvelle loi sur la circulation des nomades: loi du 16 juillet 1912*, (Librairie de jurisprudence ancienne et moderne, 1913), p. 359.

포함시켰지만 이들과 달리 집시들은 로마니첼(Romanichels), 보헤미안, 티간느로 불리는 노마드, 즉 생물학적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비록 인종적 특성이 의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률제정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인종은 당연한 과학적, 생물학적 인간 분류의 기준이었다.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집시들에게 보장된 평등한 시민권에 대해 인종적인 차별 근거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집시는 다시금 일반적인 프랑스 시민에서 분리된 다른 종족집단으로 국가에 의해 가시화되어 근접감시(étroite surveillance)의 대상이 되었다. 처벌과 정주하는 삶에 대한 강요, 인구조사와 경찰의 감시는 모두 동일한 정치적 원리에서 성립되었다. 이전 시기 집시를 영토에서 추방하던 배제의 정치가 아닌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섭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이후 60여 년간 유지되던 이 법률은 1969년 법²⁷⁾에 의해 변경 되었다. 하지만 69년 법률에서는 노마드라는 명칭이 ‘여행하는 사람들’로 변경되고 신체특징기록수첩이 ‘통행허가증(livret de circulation)’으로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국가가 이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의지와 정주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은 포기되지 않았다. ‘통행허가증’은 의무적으로 소지되어야 했고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상의 범죄행위로 처벌 받았다.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에 대한 가장 가혹한 탄압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집시에 대한 나치의 인식은 모순적이었다. 나치당과 행정부의 지도자들은 집시를 퇴화된 노마드로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Himmler)로 대표되는 나치의 정통 인종론자들은 집시를 게르만의 조상인 인도유럽인종의 순수성을 가장 잘 보유한 인종, 즉 보호해야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1938년 12월 히틀러는 명령서 「집시의 재앙에 맞선 투쟁」에서 집시인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출발한 집시문제를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혼혈화된 집시를 집시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순수한 집시와 혼혈된 집시를 구분하는 새로운 신분증 발급하였다. 1935년 뉘른베르그 인종법은 유대

27) ‘이동직업과 고정적 주거지 없이 프랑스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1969년 1월 3일 법’.

인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정책은 집시를 위한 인종 법이었다. 내무부 소속 인종우생학과 인구생물학 연구소의 로베르 리터(Robert Ritter)는 전체 집시인구 중 약 10%를 순수한 혈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반사회적 요소(éléments asociaux)’로 규정하면서 순수한 집시는 유랑생활을 보존시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혼혈집시는 동유럽 식민지인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으로 이주시키고 강제적인 불임수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1942년 히틀러가 서명한 집단수용소로의 강제이주 명령에서 순수한 집시와 혼혈 유대인을 사회에 통합된 집단으로 간주되어 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일에 거주하던 2만 6천의 집시 중 2만 명이 이 정책에 해당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실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이송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한 집시가 13 08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많은 집시들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화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²⁸⁾

나치의 집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던 1940년 프랑스 제3공화국은 “노마드의 멈추지 않는 이주는 적국 스파이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도시에서 일체의 집시의 이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감옥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집시를 강제수용소에 이주시키는 것 보다는 거주지지정(assignation à résidence)명령을 통해 감시와 통제에 대한 인력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선호하였다. 1940년 7월 독일의 프랑스를 점령 이후 비시정부가 수립되자 집시는 새로운 상황에 놓였다. 독일군 중령 한스 스피델(Hans Speidel)은 프랑스 점령군 사령부에 보낸 편지에서 각 지역 행정 관료의 결정에 따라 점령지의 집시를 프랑스 경찰이 감시하는 수용소로 이송시킬 것과 독일 점령지역으로 이주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군의 요청은 프랑스에서 규정한 집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 지방행정관은 독일에서 규정된 종족집단으로서의 집시보다는 1912년, 1940년 법률에서 규정된 유랑민을 독일군에서 제안한 집시로 해석하였다. 1940년 법률에서 노마드는 “로마니첼로 종족적 특성 보이는, 직업을 활동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고정된 직업이 없는”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독일 점

28)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p. 68-70.

령군 사령부가 정의한 집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유랑민의 법률적 정의에는 시장의 노점상인들과 방랑자들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프랑스 지방행정관들은 독일군의 요청에 노마드나 집시가 아닌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부랑자 같은 ‘기피인물(indésirables)’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2차세계대전기 프랑스 점령지역의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골칫거리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계기로 점령군 사령부의 명령을 활용한 것이다. 1994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현대사 연구소는 1940년과 1946년 사이 프랑스 노마드의 수가 3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며, 노마드에 대한 독일과 폴란드로 강제이송은 실행되지 않았고 실제 이 시기에 프랑스 내 집단수용소에서 사망한 100여 명은 기근 속에서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²⁹⁾ 이것은 3만여 명의 집시가 프랑스에 기록되었으며, 이 중 16명에서 1800명까지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기존 연구에 비해 그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중 27개의 수용소가 있었고 그 중 22 곳의 수용소는 집시만 수용했거나 혹은 대다수 수용된 사람들이 집시였다. 이러한 수용소의 렌(Rennes)지방의 몇 십 명 단위 수용소에서부터 1000여 명을 수용한 몽트뢰-벨레(Montreuil-Bellay)수용소까지 매우 다양 규모로 설치되었다. 내무부가 관리하는 수용소의 소장은 장교나 하사관, 예비군, 경찰에서 충원되었고 수용소 경비 임무는 경찰(gendarme)이 담당하였다. 어린이는 제외되었지만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은 수용소 내부의 사역뿐만 아니라 기업체,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다. 수용소는 태업과 도주를 비롯한 수용된 사람들의 저항과 운영하는 행정력의 미비함으로 인해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초 집시가 유럽으로 이주했을 때 이들은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유랑하는 삶의 방식과 이교도적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29) Denis Peschanski, *Les Tisganes en France: 1939~1946* (Paris: CNRS, 1994), pp. 133-134.

두려움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집시는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봉건적 사회가 해체되어 감에 따라서 집시는 혼욕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 국가에 강제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형성된 시기에는 국민으로서 통합의 대상이 되어 정주하는 삶의 방식을 강요당하였다.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해 다른 인구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집시가 인종화된 것은 18세기 부터였다. 막연히 로마니첼, 티간느 등으로 불리며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주민으로 간주되던 집시는 언어학과 인종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을 통해 인도-유럽 언어와 인종 학설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종족으로 대상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집시에 대한 인종화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시행된 절멸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집시는 인종화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유랑민 집단들 중의 일부였다. 독일 점령군 사령부가 주도한 강제수용소로의 이주정책은 프랑스 지방행정의 미비와 집시에 대한 다른 법률적 정의로 인해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동유럽에 거주하던 절멸정책의 대상이던 집시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미미한 희생을 낳았다.

오늘날 집시들은 하나의 정해진 공간이자 정치적 공동체인 유럽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날의 박해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양립되기 어려운 두 가지 상반된 정치적 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하나는 각 국가 안에서 시민권을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전역에서 소수 민족 집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라는 약속의 땅을 찾아 동구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 집시'와 17세기부터 서구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자리 잡게 된 집시들 사이에 커지고 있는 잠재적인 갈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하는 집시들의 정치적 갈등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³⁰⁾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Mathieu Plésiat, *Les Tsiganes, Entre nation et négation*, p. 143.

롬 민족주의자	롬 비민족주의자
문화적 롬의 해방	빈민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주의	사회보장
롬 종족의 해방	사회적 배제에 맞선 투쟁
문화적 장	사회적 장
롬은 존재한다	롬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민족	사회집단
롬언어	sociolecte
롬은 동일한 공동체	모든 빈곤한 사람
사회적 문제	정치, 사회 문제

동구에서 새롭게 이주해온 집시는 민족정체성에 입각한 차이의 정치학보다는 동등한 시민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화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에서 태어났고 자란 집시는 동화주의를 거부하며 집시의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시 내부의 차이는 곧 집시가 마주한 정치적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서구가 인종적 폭력에 기대어 비합리적 방식으로 부여한 타자성을 수단으로서 긍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추함, 나태, 범죄로 스테레오타입화한 집시에 대한 규정을 거부하며 동일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

여기서 전자의 입장은 차이를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 ‘열등한 것’으로 정의하는 서구의 합리성에 맞서 집시집단은 사르트르가 일찍이 “반인종주의적 인종주의”로 규정한 네그리튀드와 마찬가지로 집시 집단 스스로의 자민족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정되고 보이는 객체가 아닌 스스로 주체성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비서구인을 타자화시키며 스스로의 ‘합리적 이성’을 형성시킨 유럽의 비합리성을 폭로하는 계기이며 이제까지 객체화되었던 집시가 스스로를 말하고 만드는 기획이기도 하다. 한편 동일한 시민성에 대한 요구는 집시집단을 유럽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과 다시 한 번 동일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계기이다. 오늘날 탈식민시대 유럽에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이주

집시와 국민국가

해 온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양가적 집시의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러한 집시의 운동에 반응하는 유럽인들의 응답에 달려있다.

한양대학교, entendu@naver.com

주제어(Key Words):

집시(Gypsy), 국민국가(nation-state), 이주(migration), 배제(exclusion), 정주화(sedentarisation)

(투고일: 2015. 11. 05, 심사일: 2015. 11. 12, 게재확정일: 2015. 11. 24)

국문초록

집시와 국민국가: 프랑스의 차별원리를 중심으로

문종현

19세기 인류학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인종’이라는 개념은 ‘집시’라는 종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유럽의 인류학자들에게 먼저 발견해야 할 인간들은 비유럽인이자 타자였고 다른 세계였다. 먼저 아메리카에서 시작해서 다른 대륙의 주민까지 유럽인들은 인종과학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 나아갔다. 유럽에 거주하는 ‘집시’는 이러한 인종과학이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해 다른 인구집단으로 분류되어온 집시가 인종화된 것은 18세기 부터였다. 막연히 로마니첼, 티간느 등으로 불리며 이집트에서 기원한 이주민으로 간주되던 집시는 언어학과 인종학이라는 근대적 지식을 통해 인도-유럽 언어와 인종 학설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종족으로 대상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집시에 대한 인종화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시행된 절멸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집시는 인종화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유랑민 집단들 중의 일부였다.

<Abstract>

Rom and nation state
: Discrimination in modern French history

Jong-hyun MOON

The Roma, Romani or Gypsy, are a traditionally itinerant ethnic group living mostly in Europe, who originate from the northwestern regions of the Indian. Gypsy are dispersed, with their concentrated populations in Europe, especially Central, Eastern and Southern Europe including France. The Romani people as an ethnic group, or people perceived as being of Romani heritage, are historical victims, discriminated by hostility and prejudice of European people.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the Roma were invented by ethnologist European. They were defined as a origin of Aryan people.

In this article, Romani people will be described as an ethnic made by racial theory and pseudoscience in 19 century. Here the focus of attention lay on the important issues of social status to the Romani. In France, they were controlled in the four principles: exclusion, inclusion, sedentarisation, conversion. In Europe, Romani people are associated with poverty, are accused of high rates of crime and behaviours that are perceived by the rest of the population as being antisocial or inappropriate and still face racism

■ 논문 ■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19세기말 바레스를 중심으로-

마 은 지

I. 머리말

프랑스 공화국의 비전들 중에 하나는 공화국은 ‘하나이면서 불가분’하고 민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단지 개인들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시민은 프랑스혁명 이래로 ‘보편적’이었고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타자와의 다름의 표시는 공공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었다. 다름의 표시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 국한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어떤 한 개인이 공화국적인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또 프랑스 문화를 채택한다면 프랑스 민족에 동화될 수 있었다. 공화국의 그와 같은 평등한 개인들의 시민자격은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결사체를 용인하지 않는다. 어느 하위-민족 집단도 특정 환경들 하에서 법적으로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든 집단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는 없었다. 이 특별한 지위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특별한 권리들이나 고려사항들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국어’나 ‘족류 집단(ethnic group)’ 같은 그런 범주들은 프랑스의 민족 합의에 관한 문제들에서 항상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주들이 집단들 사이에 다름을 의식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특별대우에 대한 잠재적 요구를 생기게 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¹⁾ 그러므로 개별

1) Timothy Baycroft, *Fran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08), p. 204.

족류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족류성(ethnicity)은 프랑스에서 분류나 구별의 범주로 결코 인정된 적이 없었다. 예컨대 프랑스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회구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프랑스적인 통합 모델은 프랑스 국가 앞에 정식으로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을 중재하지 않고도 그들을 공화국 민족 내에 개인들로 통합할 수 있었다. 많은 프랑스 공화국 지도자들은 공화국적인 동화 모델의 성공을 커다란 하나의 자부심의 원천으로 간주했고, 또 이런 사고방식의 직접적인 결과로 프랑스 역사를 통틀어 과별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앵글로-색슨 세계로부터 프랑스의 정체성과 프랑스의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시로 지적한다.²⁾

하지만 이런 공화국의 변할 수 없는 원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공화국의 통합에서 가장 세밀한 난제 중에 하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공화국 안으로 통합하는 문제이다. 스스로 프랑스인으로 자처하고 법적으로 승인된 시민적 민족(civic nation)의 지위를 프랑스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마다 거기에 이주민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는 이들이 프랑스 사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공화국 나름의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여 이제는 ‘정체성의 정치’를 논하는 시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프랑스로의 이주의 역사에서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대량 유입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기록된다. 이주민들은 프랑스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충적인 노동력과 군대의 병사들로 받아들여졌다. 이주민의 물결은 계속 이어져 20세기 초 이래로 인구 비율로 따질 때 프랑스 이주민의 수는 이민국의 나라이자 국가건설 초기부터 이민정책을 실시했던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 1930년 미국이 인구 10만 명당 외국인이 492명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외국인의 비율이 515명이었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미국은 외국인 인구 비율이 6%인데 반해 프랑스는 11-12%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이민국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이주민의 역사는 크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2) *Ibid.*, p. 213.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 프랑스로의 이주민의 대량 유입이 일어나자 제3공화국이 실시했던 이주민의 민족 통합 이념의 이상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3공화국 초창기에 프랑스 산업화와 이민정책을 고찰한다. 이어서 동시대에 세기말에 프랑스의 유력한 민족주의자였던 모리스 바레스의 민족과 민족주의 사상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생각을 살펴본다. 그런 관찰을 통해 바레스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사상을 조탁하고 발표하게 된 동기로써 바레스가 이들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 전형으로 간주했던 유대인에 대한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서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에 외국인 및 유대인 이주민들이 공화국에 미친 영향들이 이주민의 민족 통합의 신화와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19세기말 산업화와 이민정책

1. 산업화의 그늘과 사회문제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지만 공화국 초반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갈등과 혼란의 불안한 정국양상을 나타냈다. 그런 연유로 세기 전환기인 1898년부터 1906~7년까지 프랑스인들의 삶은 인민의 삶이 비혁명적 시기인데도 정치적인 정도로 아주 정열적이었다. 이는 제3공화국 체제가 사회적 평등주의를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시이다. 왜냐하면 기회주의 공화국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노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입법적·행정적 간섭을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공교육 같은 한정된 영역에 국한시켰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보다 넓은 영역을 대개는 사회경제 세력들의 자유경쟁에 방임해버렸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합법화(1884)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보호주의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제3공화국은 노동계급과 도시의 프티부르주아계급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민족적 통합에 대한 강조와 애국적 가치들의 주입식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패배, 항복, 굴욕의 산물로 간주되었다.³⁾ 세기 전환기에 프랑스의 정치적 난국을 이끌었던 급진주의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제3공화국의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르베리우는 대학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가치들의 심대한 위기가 준비된 것은 급진주의의 그늘에서였고, 사회적 위기의 거의 모든 기본 요인들은 1914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⁴⁾

게다가 19세기 후반 프랑스 산업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원적 성격이다. 프랑스 산업화⁵⁾는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과 기계화된 생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숙련과 수공업적 분산노동이라는 '두발로 걷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근대적 공장이 수공업적 작업장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했다. 또 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⁶⁾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는 사회가 전형적인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와 공업사회가 공존하는 이중구조 사회였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산업국가인 영국 및 독일과 농업국가인 유럽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

3) Brian Jenkins, 김인중, 마은지 역, 『프랑스 민족주의』 (서울: 나남, 2010), 164쪽; 마은지, 『모리스 바레스의 민족과 민족주의(1880~1914)』,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48쪽.

4) Madeleine Rebérioux, *La République radicale? 1898-1914* (Paris: Édition du Seuil, 1975), p. 234.

5) P. K. O'Brien & C. Keyder, "Les voies de passage vers la société industrielle en Grande-Bretagne et en France(1780-1914)", *Annales ESC*, 34-6(1979), p. 1287; 19세기 프랑스 경제발전론에 대해서는 두 시각이 있다. 프랑스 경제성장의 지연론 또는 비판론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경제적 후진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로는 로스토우(W. W. Rostow), 랜디스(D. Landes), 폴러드(S. Pollard), 킨들버거(C. P. Kindleberger) 등을 들 수 있다. 윤승준, 『수정주의적 프랑스 산업화론에 대한 일고찰』, 『프랑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88), 381-420쪽 참조.

6) 김경근, 『프랑스 근대사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282쪽; François Crouzet, "Quelques problèmes de l'histoire de l'industrialisation au XIXe siècle," *Revue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53-4(1975), pp. 534-540; 크루제는 프랑스의 산업화는 영국과의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영국을 능가할 수 없는 대량생산 분야에서 경쟁하는 대신에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생산을 발달시킬 수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랭스와 루베의 혼합 모직물, 리옹의 견직물이 그런 예들이다. 크루제에 대해서는 김경근, 『프랑스 근대사연구』, 288쪽.

사이의 가운데쯤에 놓인 반(半)산업화된 반(半)농업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⁷⁾ 이러한 산업의 이중구조 때문에 1870년대부터 시작된 20년간에 걸친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영국보다 경제적으로 불황의 여파는 덜 받았다고 말해진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프랑스의 산업화나 도시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고, 기존의 근대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⁸⁾ 다시 말해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산업화는 이웃의 영국이나 독일과는 다른 이원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지체되지 않고 완만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구조 속에서 1850년대부터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프랑스 산업화의 결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변화가 모든 지역과 모든 계급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구도시를 개조하고 신도시를 만들어냈으나 농촌 지역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도시 중산층의 성격을 철저히 바꾸어 놓았고 새로운 공장 노동자 계급을 탄생시켰으나 농민에게는 그렇게 현저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농촌과 소도시 민중은 물질적 진보에 아주 근소하게 참여하는데 불과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상에 회의적인 보수주의자요 전통주의자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세기 프랑스는 도시의 선진 경제와 농촌의 후진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농민은 근대적인 농민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낙후된 농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⁹⁾ 게다가 농촌공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농촌과 비교하여 도시는 공업의 진전이 농촌보다는 유리했지만, 도시노동자 또한 전통적 장인층과 공장노동자가 갈라져 있었다. 게다가 수많은 노동자들은 국가가 뒤를 봐주는 사용자들과의 계급투쟁에 간히게 되었는데, 국가는 자유기업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양시앵 레짐의 동업조합의 제한 관행들 중 어떤 것을 복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1831년, 1848년에 일어난

7) Jean-Charles Asselain, *Histoire économique de la France I* (Paris: Édition du Seuil, 1984), p. 9.

8) 김경근, 『프랑스 근대사연구』, 261쪽.

9) Antoine Prost, *Petite histoire de la France XXe siècle* (Paris: Armand Colin, 1996), p. 10.

노동자들의 봉기를 국가는 폭력으로 진압했다.¹⁰⁾ 이는 산업화의 수혜가 프랑스 전 지역과 계급에 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과, 여전히 지역들 간에, 계급들 간에 갈라진 사회의 모습을 말해준다.

다른 또 하나는 경기침체(1873~1895)에 직접적 타격을 입는 사회계층인 프티부르주아와 노동자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뿌리가 없는 지식인, 독일의 친구, 족류적(ethnic)·종교적 이방인, ‘프랑스 정부, 경제, 언론, 나아가 프랑스 사회 전반에 대해 비밀스러운 지배력을 획득한’ 음모를 일삼는 도당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다. 그런 편견들이 반 의회제적 권위주의, 복수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전체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였고, 이들 계층들에게 흡인력을 갖게 되었다.¹¹⁾ 이시기에 출현하는 프랑스의 반유대주의는 주로 경제적 측면이 중심이었고, 주로 프랑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지도층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격이 많았다. 그런데 비단 유대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계층을 불문하고 유대인 전체로의 반감이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이원적인 산업구조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토대의 부족현상과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와 과도한 집중, 노동자들과 기업 소유주들 사이에 적대감,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이 그런 사회문제들이었다.¹²⁾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부적응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사회개혁의 틀을 짜기를 꺼려했다. 강베타가 사회문제는 없다고 선언했던 잘못된 믿음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그런 와중에 파리에서의 주택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어갔다. 그곳 파리의 주택들의 1/3은 비위생적이었고, 100만 명의 파리 인들은 필요한 통기 면적도 없는 채로 살았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불만들은 알콜 중독의 위협에 맞서 제기되었다. 1872년 술을 파는 상점들이 179,000개가 있었다. 1881년에 주점과 선술집

10) *Ibid.*

11) Jenkins, 『프랑스 민족주의』, 168쪽.

12) Michael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Sorel, Barrès and Maurra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10(1959)), pp. 13-19.

수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한 이후 1889년에는 410,000개 그리고 1913년에는 483,000개가 있었다. 넷 중에 하나는 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메닐몽탕(Menilmontant)에는 20개의 상점 중에 14개의 카페가 있었다. 밀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1869년에 9만 명에서 1913년에 일백 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¹³⁾ 1889년에 평균 소비는 일인당 4리터였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증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고, 폐결핵의 증가, 일찍이 사망자의 수와 범죄를 초래했다. 게다가, 그것은 인구 증가의 감소의 한 원인으로 믿어졌다.¹⁴⁾

19세기 후반에 공화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 민족주의의 출현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선거권의 확대, 대중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평등주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 프랑스 인민들은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방임주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18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대불황기(1882~96)”를 해결하는 출구로 국가는 제국주의를 통해 이를 타개하려고 했다. 게다가 정치적 지배계급은 실업계와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 국가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하나의 민족이 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계급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프티 부르주아나 일반 민중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컸으며 그들 사이에 사회적 간극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의 기초였던 민족 통합과 단일성 의식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2. 19세기 말 프랑스 이민정책

19세기말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농업과 공업의 이원적인 산업구조, 소기업 중심의 경영방식, 그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 인구증가의 실패와 같은 제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경제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인구의 64%가 1886년에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1911년에는 56%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은 평균보다

13) 민간 소비로 생산되는 모든 술에 대한 소비세 철폐로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14)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p. 17-18.

더 경직성을 시사한다. 프랑스는 거의 농촌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서구의 나라였고, 또한 농촌적이고 상업적인 경제조직의 규모는 작았다. 토지소유자 700백만 명중에 29,000명은 3,000만 에이커를 소유했는데 500만 농민들은 600만 에이커를 소유했다. 1895년에 경작지의 85%는 그 크기가 25에이커 미만이었고 39%는 단지 2.5에이커였다.¹⁵⁾ 이것은 소농민이 지배적인 농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 평균 기업가는 단독으로 하거나 동업자들과 운영하는 영세 사업가였다. 1896년에 575,000개의 공업 시설 중에 534,000개는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거느렸고,¹⁶⁾ 반면 공장의 1%미만만이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1906년경에는 전 공업 고용인의 오직 41%만이 1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의 공장에서 일했다. 프랑스는 아직도 대기업 집중은 거의 얼마 되지 않는 소기업의 나라였다.

공업 세계에서 주된 결함은 노동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주들이 그들 노동자들에게 양보하기를 꺼려했다. 그런 연유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들은 만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휴는 거의 없었고, 또한 1900년에 노동일 수와 노동시간은 길었다. 1898년 공장을 규제하는 법규들을 위반한 건수는 6000건이었다. 소위 “자선단체” 조직들은 4~5명의 아이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위생 규정들은 널리 무시되었다. 산업 재해율은 1890년대에 늘어났다. 1898년에만 35,000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 중에 643건은 치명적이었다. 이에 대한 사찰이 어려웠는데, 1899년에 309,000개의 회사 가운데 270,300개가 11명 미만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조건과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응은 폭력행위의 증가, 총파업 사상,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고용주들의 양보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사회적 입법이 통과된 것은 1900년대 말쯤에 이르러서였는데, 이 즈음에 이르러 노동계급 운동은 강도와 영향력이 커져 정권을 위협할

15) W. F. Ogburn and W. Jaffé, *The Economic Development of Post-War Fr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9), p. 472;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5.

16) S. B. Clough, *France: A History of National Economics 1789-1939* (New York: Octagon Books, 1970(1939));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232.

정도로 성장했다.¹⁷⁾

무엇보다 이민정책은 프랑스 인구 증가의 실패에 따른 하나의 방안이었다. 특히 프랑스 인구 감소는 독일에서의 급속한 인구 팽창과 비교되었다. 1885년에 두 나라 사이에는 숫자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12년경 프랑스 인구가 3,900만 명이었을 때 독일은 6,800만이었다. 더욱이, 그 인구는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1900년에는 인구의 35.6%가 40살이 넘었다. 이렇게 되자 제3공화국의 관심은 프랑스 총인구의 침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1875년 이후 농촌 인구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감소를 모두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1890년경에도 절반 이상의 인구가 그 자체를 대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프랑스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컨대, 1911년에 그로노블 지역에서만도 12,000명의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민자의 대량 유입은 앞서 제2제국기의 공업성장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었다. 즉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유입된 외국인의 수가 한해 평균 4~5만 명이 유입되면서 1880년대 초에 이르면 약 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 외국인들의 출신지역은 프랑스의 인근 국가들인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주로 왔고, 그들의 정착지는 노르 도나 부슈뒤론 같은 국경 지대가 주된 정착지였다. 그런데 19세기 말 경기침체와 대불황(1882~96)의 여파로 외국인의 유입은 거의 정지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경제 위기 때 탄광업과 건설업 같은 부문에 일자리를 놓고 프랑스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과 잦은 충돌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1867~1893년 사이에 양자 사이에 벌어진 충돌 사건은 약 89건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논조가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 청원, 시위에서 자주 동원 되었다는 점이다.¹⁸⁾ 여기서 노동시장을 놓고 프랑스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쟁이 경제적 적대감에서

17)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8.

18)Michelle Perrot, “Les rapports entre ouvrier français et étrangers (1871-1893)”,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moderne* (1960); Pierre Nora (dir.), 김인중, 유희수 외 역, 『기억의 장소 3』 (서울: 아카넷, 2010), 260쪽.

정치적 적대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에 일어난 충돌의 첫 희생자는 벨기에 사람들이었다. 1892년 파드칼레 도에서 발생한 드로쿠로(Drocourt) 광산 사건은 대표적인 반(反)벨기에 민중폭동이었다. 이 광산 노동자의 3/4이 벨기에 사람들이었지만 프랑스 광부들의 위협 때문에 서둘러 코뮌을 떠나야 했고 그들이 파손한 살림살이 손실액이 가족당 40~50프랑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19세기 말에 외국인 혐오의 한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이탈리아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었다. 「프티 마르세예」지는 1881년 마르세유 도심 거리에서 벌어진 프랑스인들과 이탈리아인들 사이의 난투극을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벨장스(Belsunce)’ 거리에 모여든 순간 젊은 패거리들이 이탈리아인들을 공격하자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수 백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다. 1893년 에그몬트에서 일어난 이탈리아인들의 반대 소요 사태는 심각한 폭력을 동반하며 절정에 이르렀다.¹⁹⁾

게다가 1880년대에 벌어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민중의 반감과 폭력 행위는 이제 국가와 자국민의 이익 추구하고 같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벌어졌던 적대감이 족류공동체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피에몬테인들, 오베르뉴인들, 플랑드르인들 등에 대한 적대감)이었다면, 19세기 말에 이르면 이주민의 문제는 좌·우파의 논쟁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문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불량제장군 지지운동(Boulangism)은 외국인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선거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운동이었다고 간주된다. 자국민의 고용을 옹호하는 동시에 외국이 노동력을 이용하고 이들의 추방이나 억제 조치를 반대하던 대기업 고용주를 비난한 것이 민중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드레뤼스 사건의 종결과 더불어 정치지형이 뚜렷해지면서 비로소 이민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입장이 확연해지는데, 우파는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많은 받은 집단들에게 공공안전과 국익을 강조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제안하며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좌파는 인권을 앞세워 프랑스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9) 같은 책, 261-262쪽.

대한 동등한 처우를 요구했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들을 아울러 요구했다. 당시 밀레랑 법은 공공토목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노동조합들은 직업소개소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민자들의 고용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게 되었다.²⁰⁾

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프랑스의 이민정책²¹⁾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했다. 즉 경제 성장기에는 이민의 대량 유입이 일어났다면, 경제침체기에는 실업과 고용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최근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통합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외국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는 정치영역으로 파급되었다. 저간의 상황으로 이민문제가 국가문제로 대두하게 되는 시기는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이었다.²²⁾ 이시기 자국민의 노동력 보호의 문제는 계급과 정당을 넘어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공통된 정치적인 의제였고 민족문제였다. 이때 사회적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III. 바레스의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

1. 뿌리에 대한 논전-귀화와 동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프랑스인의 삶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몇몇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인프라의 구축은 대도시라는 새로운 기인한 현상을 빚었다. 대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인구이동을 끌어당겼다.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인구 이동에 가세했다. 1911년 20만 인구를 가진 도시는 단 5개 도시였다. 사람들을 두렵게

20)같은 책, 264쪽.

21)프랑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참조.

22)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59쪽.

하는 것은 파리의 성장이었고, 그 성장에 따른 정치문제들이었다. 이미 프랑스의 과도한 집중 현상에 대해서 토크빌은 “1789년경에, 파리는 프랑스다”²³⁾ 라고 말한바 있었다. 루이 14세는 파리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해 여섯 차례 시도를 했다. 그곳의 인구는 반세기 만에 두 배로 증가해 1850년 경에는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 1870년부터 1900년까지 파리의 인구 증가는 프랑스에서 총 증가의 절반에 달했다. 이러한 집중의 정치적 함의는 곧 명백해졌다. “어떤 사람이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출생할 때 그 사람은 나라는 없고…그 사람은 도로만 있다”라고 뒤마(Dumas)는 말할 정도였다. 바레스의 경우도 파리 집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즉 “개인들의 뿌리 뽑힘, 파리에서 존재하는 고도로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줄 하는 집단들(coteries)²⁴⁾, 나라 전체의 지식인의 삶의 흡수가 가져오는 불만의 집중, 즉 체제에 대한 정치활동의 증가, 그리고 그것의 주된 특징의 하나인 정치적 집중에 대한 비판”²⁵⁾을 이야기 했다.

대도시가 낳은 사회적 병폐들을 진단했던 모리스 바레스는 당시 젊은이들의 제왕으로 추앙되었다. 정치인이자 문인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바레스의 발언과 사상이 프랑스 지성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세기말을 대변할 정도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바레스는 세기말의 프랑스가 앓고 있는 증상들을 ‘퇴폐(decadence)’라는 용어로 진단했고, 그에 대한 처방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모색했다. 바레스는 프랑스의 퇴폐, 체제의 약화, 프랑스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쇠퇴에 관심을 집중했다. 퇴폐의 신호는 프랑스가 일등 강국으로서의 역사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민족들의 위계에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세계열강들 속에서 쇠퇴하는 프랑스의 지위에 대한 이런 관심이 퇴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²⁶⁾ 바레스는 위기에 닥친 프랑스를 구원할 여러 사상들과

23) Alexis de Tocqueville, *L'Ancien régime*, (Oxford: B. Blackwell, 1949), p. 80;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7.

24) 1900년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문사들에서 일하고 있었다.

25) Robert de Jouvenel, *La République des camarades* (Paris: Grasset, 1914), p. 121;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7.

26) *Ibid.*, p. 98.

방식들이 있었지만, 프랑스가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전통 속에, 즉 가장 뿌리 깊은 전통 속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즉 프랑스의 쇠퇴에 대한 처방책은 프랑스의 전통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와 더불어 전통적 제도들에 대한 재인식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인에게는 공통된 인식과 제도가 현재 없다. 전통적 제도들이 무엇인가? 프랑스의 해체되고 무너진 상태인 민족을 결속시킬 수 있는 방향과 오늘날 프랑스를 떠받치고 있는 힘들을 바레스는 설명하고자 했다. 바레스는 그 해법을 ‘토지와 죽은자들(la terre et les morts)’에서 찾았다.²⁷⁾ 토지와 죽은자들은 바레스의 민족 개념을 구성하는 용어이다.²⁸⁾

문제는 그러한 민족개념을 고안해낼 때 바레스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외국인들의 존재를 “뿌리 뽑힌 사람들(déraciné)”의 한 부류로 바라보았다. 바레스에게 있어서 전통과 규율이 없음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의 가장 좋은 예는 ‘뿌리 뽑힌 사람들’²⁹⁾, 또는 뿌리 뽑힌 개인들이었다. 특별히 파리의 집중에 따른 개인들의 뿌리 뽑힘이 있었다. 뿌리 뽑힌 사람들의 비극은 그 족류공동체의 경험에 간직되어있는 모든 전통들을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 모두에서 볼 때, 그의 민족으로부터 고립된 젊은이는 텍스트에서 고립된 단어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즉 그 사람은 전승이 없는 젊은 야수였다. 하지만 조국은 언제나 뿌리 뽑힌 자의 영혼보다 뿌리내린 자의 영혼에서 보다 강했다. 뿌리 뽑힌

27) *Ibid.*, p. 111.

28) 바레스는 민족 개념을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같은 환경 속에서 공동의 전설들, 전통들, 습속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가 된 하나의 인간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진짜 민족이란 시민적 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의식, 소속감, 정체성들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바레스의 민족 개념은 당시 공화국의 근대적인 시민적 민족(civic nation) 개념과 구분되는 족류적 민족(ethnic na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족류적 민족 개념은 역사·문화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 마은지, 「모리스 바레스의 ‘민족’ 개념(1880-1914)」, 『프랑스사 연구』 31집(2014), 101쪽.

29) 바레스의 작품 『뿌리 뽑힌 사람들(Les Déracinés)』는 7명의 로렌 청년들 가운데 파리로 떠나 버린 6명과 끝까지 로렌을 지키는 한 친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는 일단 그가 그의 고토(homeland)를 떠나면, 단지 일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가 뽑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설 어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했다. 그것은 삶의 잔혹한 압력들에 맞서 보호의 수단이자 개인적인 강렬한 행복감의 수단, 그리고 프랑스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프랑스의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토대이기도 했다.³⁰⁾ 그러므로 프랑스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에너지를 되찾고, 보호하고,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 바레스에게서 토지로의 귀환, 즉 토지를 통한 구원은 도시화와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프랑스의 퇴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의 표현이었고, 프랑스 사회의 도덕적 신체적 퇴화에 직면하여 프랑스를 위해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저장소와 같은 의미를 던져주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19세기 말 프랑스 안에서 벌어졌던 외국인들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무거운 공격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다. 19세 말 제3공화국 체제에 대한 반격을 가했던 주요 인물들인 소렐도, 모라스도, 그리고 바레스도 그 정도와 독성은 광범위하게 다양했지만 반유대주의적인 성향들을 띠었다. 소렐에게 유대인은 비생산적인 금권정치가이거나 물질주의자, 합리주의적 지식인, 세계주의자 그리고 전통이 없는 존재였다. 바레스에게 유대인은 프랑스의 몸과 영혼에 강력한 외국적인 요소였다. 모라스에게서는, 유대인은 해로운 사상의 원천, 프랑스 안에서 진짜 통치하는 조직체의 한 구성원이었고, 또 조국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핵심 요소였다.³¹⁾

그런데 외국인들, 무엇보다 유대인 이들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국적부여라는 방식으로 통한 공화국으로서의 귀화와 동화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귀화인의 국적 부여의 문제가 일으킨 가장 부정적 사례가 드레뤼스 사건이었다. “드레뤼스는 반역자이다. 프랑스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유대인 민족의

30)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110.

31)*Ibid.*, p. 210.

거대한 세력이 확인되는 이상 반유대주의운동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³²⁾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바레스는 프랑스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서 유대인 민족의 거대한 힘이 프랑스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그는 드레퓌스를 프랑스의 민족적 이익과 관련시켜 상징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시기 반유대주의 운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드레퓌스 사건과 드레퓌스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그것의 상징성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문화적 차이를 말해준다. 이유인즉 외국인들의 갑작스런 대량 유입은 프랑스의 ‘민족정체성’을 위태롭게 하고, 또한 새로운 이민자들과 ‘토박이’ 프랑스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가로놓여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19세 말에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담론이 널리 유행했다. 그것은 프랑스 민족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하여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이 더 이상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사회적 장애를 겪을 것”이라 주장하는 장 로모니에의 이야기³³⁾나, 또 “우리 인구가 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약간 더 증가한다면, 그것은 외국인의 이민 때문이고, 우리의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사람은 외국인이고 이들의 위장된 침입이 미래에 대한 위협”이고 결국 “이들 외국인들은 교류의 결과로 그들 고유의 기질과 습성, 능력을, 나중엔 자신의 민족성을 잃게 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1883년에 한 의사의 주장³⁴⁾을 보게 된다.

바레스 역시 당대의 사상적 조류와 담론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부모의 연속이고, 일련의 몸짓, 습관, 유전적

32) Maurice Barrès,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 (Paris: Juven, 1902), p. 34; 바레스는 당대에 문인이자 저널리스트이면서 정치가로 활동하며 2,500개의 기사들을 썼다. 그중에 민족주의와 관련된 약 400여개의 글들을 선별하여 1902년에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이라는 사료집으로 출간했다.

33) Jean Laumonier, *La Nationalité française*, t. II, *Les Homme* (Paris: Chamuel, 1892), p. 350,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69쪽에서 재인용.

34) Jules Rochard, *Bulletin de l'Académie de médecine*, 1883, p. 281;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70쪽.

반응들과 더불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말은 곧 죽은 자가 산자를 붙들게 하는 것이며, 장구한 변천의 산물로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과 구별 짓는 고유한 족류적·민족적 특성이 단순한 메타포가 아니라 우리 신경중추의 해부학적 구성요소들만큼이나 실제적인 현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숭배, 그들이 살고 체험한 토지에 대한 우리의 숭배, 조국에 대한 신앙의 토대가 놓여 있다.”³⁵⁾ 그 역시 여러 외국인들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문화적 차이를 태생적인 민족적 족류공동체적 특성과 연결시켰다.

2.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운동이 태생적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두드러지게 했다면,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반감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두드러졌다. 1884년의 조사는 급진파에 의해 옹호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간섭정책의 출발점으로 기록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과세 계획은 이런 시각에서 나타난다. 이후 몇 년 동안, 급진파는 불량제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일부에 의해 합류하게 되는데, 서서히 민족작업장의 보호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갔다. 푸르미(Fourmies)의 총살 이후, 이 주제는 민족주의자들의 반복되는 주제였다. 1893년에, 모리스 바레스는 외국인들에 반대하는 쪽으로 배타적으로 돌아선 하나의 강령(프로그램)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10년 전에 크리스토프 프라동(Christophe Pradon)이 표명했던 주장들 전부를 빌어다 쓴 것이었다. 프라동은 프랑스 시민들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들을 외국인들 때문이라고 비난했었다. 그가 “사회주의”³⁶⁾라는 용어를 그의 편의대로 다시 찾은 것은 바로 그 때였다. 사회적 주제와 민족적 주제의 조합은 일정한 수의 사회주의자들과 불량제파 당선자들의 매력을 샀다. 두 주제의 조합은

35) Zeev Sternhell, *Maurice Barrès et le nationalisme français*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85), p. 259;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270-271쪽.

36) 바레스는 1889년 11월 24일자 『동부통신(Le Courrier de l'Est)』에 이렇게 적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용어가 붙여진 이 사회주의는 프랑스가 프랑스의 희망을 걸고 있는 단어이다.” 이 차용어는 혁명적인 신문들의 빈축을 샀다. *Le Courrier de l'Est*, 24 Novembre 1890.

또한 급진파의 일부를 끌어당기기도 했는데, 비록 클레망소가 불량제장군의 모험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민족-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대규모 공업 노동자들에게는 그리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민족주의에 맞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운동의 창출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³⁷⁾

바레스가 반유대주의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는 것은 1889년 즈음에서였다. 1889년의 그의 낭시 선거 프로그램에서 바레스는 유대인 문제를 민족 문제와 결부시켰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은 프랑스 안에서 그들의 독특한 성격을 계속 유지해왔었고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고립된 행동으로, 그들의 독점방식으로, 투기로, 그리고 세계주의로 대혁명의 원칙들을 위반했다. 군대에서, 지방행정 관직에서, 군대에서, 각료직에서 그리고 모든 프랑스의 행정직에서 그들의 수는 그들에게 권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상적인 비율을 초과했다. 그들은 나라를 부패시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지사, 판사, 세금징수원, 장교로 임명되었다. 이 위험한 불균형은 바로잡아져야 하고 진짜 프랑스 민족들에게 더 많은 존경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쉬운 귀화 방식에 장벽이 쳐져야 한다.”³⁸⁾ 게다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 모든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90%는 그들이 현역군 군복무를 피하려고 할 때만 귀화했다. 군복무는 국적의 조건이라고 선언하자. 게다가 귀화인(알자스-로렌에 대해서 이루어진 예외)은 단지 사적 신분의 권리만을 가져야 그 후손들만이 오직 프랑스 태생에 동화되어 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이다. 20년 전부터 기회주의체제는 유대인, 외국인, 세계주의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들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활력 넘치는 요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주었다. 그런데 라이나흐(Reinach), 코르넬리우스 에르츠(Cornelius Herz), 드레퓌스

37) Gérard Noiriel,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XIXe-XXe), discours publics, humiliations privées* (Paris: Fayard, 2007), pp. 172-173.

38) Barrès,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 pp. 433-434.

대위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³⁹⁾ 이런 우려는 파나마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유대인들이 프랑스와 해외에서 모두 강력해졌음을 반증했다. 비단 파나마 독직 사건뿐이던가? 드레퓌스 사건은 귀화한 유대인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는 한결음 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1893년 낭시에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내걸었던 강령은 “외국인들에 맞서(Contre les étrangers)”⁴⁰⁾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바레스는 유대인을 바람직한 자질들이 결핍되어 있고, 또 프랑스의 전통에 체제전복적인 하나의 강력한 외국의 인자로 보았다. 유대인은 바레스식의 의식에서 볼 때 전통이 없었다. 바레스에게 조국은 토지와 조상들, 즉 “우리 죽은자들의 땅”을 의미했지만, 유대인에게 그것은 그들의 최대의 이익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그런 그들은 언제든지 조국을 배신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발견하는 곳이 그들의 조국이다”라는 사고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의 유형으로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본래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독점자, 고리대금업자, 증권거래소의 조작자를 지적하는 하나의 형용사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반유대주의는 사회주의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동맹국이었다. 드뤼몽의 『유대인의 프랑스(La France juive)』는 『라르뷔소시알리스트(La Revue socialiste)』를 위한 탁월한 준비였다.⁴¹⁾ 이것은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자들이든 민족주의자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들을 동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드레퓌스 사건은 ‘동화’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은 다른 존재였다. 바레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결코 반역자일 수 없는 까닭은 그는 결코 하나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그의 최대의 이익을

39) *Ibid*, p. 434.

40) *Ibid*, p. 96.

41) Barrès, “La Formule antijuive,” *Le Figaro*, 22 février 1890.

발견하는 곳에만 속하기 때문이다.⁴²⁾

바레스의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유대인과 프랑스인의 적대감과 대결로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과 어려움에 봉착한 프랑스 민족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보호와 국가의 간섭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불안정, 소상공인들의 불안정, 농업인의 불안정, 부르주아의 불안정 등 그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보호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주의적인 조치, 즉 국가가 사물의 자연스런 흐름의 역행에 간섭하는 것이었다.⁴³⁾ 프랑스 민족은 지금 다양한 수준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에서 그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했다. 유대인 문제는 금융자본에 대한 반격⁴⁴⁾으로 나타났다.

에릭 캄(Eric Cahm)에 의하면 당시 반유대주의는 유대인들이 프랑스의 정부, 경제,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한 것에서도 비롯되었다. 특히 공화국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이면에는 바로 이들 유대인들의 악의 정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화국 정부의 억압적인 정권은 훌륭한 가톨릭 신자들을 공직에서 몰아냈고, 예외의 바른 소상공인들은 붕괴했으며, 프랑스 노동자들은 유대인 자본가들에 의해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드뤼몽 같은 반유대주의자는 외국인의 지배는 일소되어야 하고, 프랑스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정직한 프랑스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세기말에 팽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⁵⁾

그러므로 유대인 문제는 모라스가 주장하듯이, 하나의 종교싸움도 아니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라, 단지 민족방어의 문제였다.⁴⁶⁾ 유대인은 금융, 교육, 그리고 저널리즘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강력했다. 그래서

42)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212.

43)Barrès, *Scenes et doctrines du nationalism*, p. 434.

44)*Ibid.*, p. 456.

45)Eric Cahm and Vladimir Claude Fišera, *Socialism and Nationalism* (Nottingham: Spokesman, 1979), pp. 52-53.

46)Charles Maurras, *Kiel et Tanger* (Paris: Nouvelle Librairie Nationale, 1921), p. 62; Curtis, *Three against the Third Republic*, p. 214.

반유대주의의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프랑스인은 유대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자신들의 모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남게 될까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정치체에 하나의 외국적인 요소였다. 그들은 프랑스 국가 안에서 매우 독특한 국가를 형성했고 북유럽과 남유럽에서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과 연합했다. 그러므로 프랑스 시민 자격으로 유대인들에게 준 혜택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프랑스 조국을 배신한 것이고, 이는 유대인으로 표상되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의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었다. 1890년대에 바레스에 의해서 구상되는 바레스의 민족주의는 그 핵심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보호를 함의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호주의가 곧 민족주의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바레스가 외국인들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은 금융 특권세력에 대한 반대의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생산 활동의 모든 형태들을 점령하는 무수한 금융가들이 외국인들, 그것도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레스의 반감은 프랑스 민족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주의의 성격을 띠었다. 바레스는 실제 노동력보다도 제품들에 한해 적용된 보호주의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했다. 바레스의 보호주의는 국내 시장과 노동력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각 계급의 사회적 정체성의 발전이 민족 정체성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IV. 이주민의 민족 통합

1. 공화국의 통합의 신화와 현실

프랑스혁명 초기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외국인도 인권선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형제애에 입각한 모든 평등한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외국인들은 국무, 행정, 군대에서 중책이 주어졌다. 그러나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은 군사적 패배, 국내의 혼란과 경제위기가 잇따랐던 1793년 중엽 즈음이었다. 외국인 문제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늘 정치투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은 프랑스 민족의 집단기억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이민은 늘 국가의 역사에서 외부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는 전시와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 되어 나타났다.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동화의 문제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 간극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유입과 정착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프랑스가 노동력과 병사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1889년의 국적법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에게(속지주의) 그리고 프랑스에 프랑스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또는 외국인에게(속인주의) 프랑스 국적 취득을 확대했다. 1889년 국적법⁴⁷⁾은 특정한 조건들 하에서, 외국인들의 귀화를 동일하게 용이하게 했다. 공화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통합하여 그들을 조국 프랑스를 위해 일하고 싸울 수 있는 프랑스인들로 만들기 위해 학교, 결혼 그리고 노동에 기대했다. 그렇지만, 역사가 제라르 누아리엘이 보여주었듯이, 이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한계가 많았고 “통합의 공화국적 모델”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사후 건설에 속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래로 가장 높은 이주의 나라였었고, 19세기와 20세기 많은 기간 동안 프랑스의 동화 모델은 극히 잘 작동한 것처럼 보였다. 본래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외국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시스템(체제)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프랑스 정권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아이들을 그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민족화 하는 것을 추구했다.⁴⁸⁾ 이것은 때로는 프랑스에서 적어도 두 세대 동안 있었다는 조건부이기도 했지만, 민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 그들이 프랑스 학교제도를 통과하고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한 재빨리 이주자들의 아이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가 측의 분명한 목표를 대변했다. 이러한 목표는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47) 프랑스 국적법에 대해서는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Histoir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is: Grasset, 2002), pp. 37-61 참조.

48) *Ibid.*

않았고 제1차 대전을 지나서도 연이은 공화국 정부들에 의해 재확인되고 강화되었다.⁴⁹⁾ 이 기간에 동유럽 출신, 특히 폴란드인들 이주민의 수가 점점 증가함과 동시에, 이주의 압도적인 수는 국경 지역들에서 왔다—이탈리아인들, 벨기에인들,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 정말이지 이주민들과 ‘프랑스인’ 사이에 ‘족류적’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그들은 대부분 백인이고 가톨릭교도였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국적을 유지했다. 그들은 출신지 공동체 속에서 살았고, 그들의 모국어를 쓰고, 그들의 결사체들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 보다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이주하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신속히 그 사회에 통합되었다. 이것이 어떤 이들이 하나의 신화라고 고발한 프랑스의 ‘도가니’였다.

그런데 프랑스 공화국의 이주민들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은 불안하며 실패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들이 채택하기를 꺼려해서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차이들이 너무나 커서 극복할 수 없었던지 간에, 공화국적인 동화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또 프랑스 민족 정체성은 ‘외국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그것이 이주민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삶의 양식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보편적 시민권 사상에 토대를 둔 보편주의적, 동화주의적인 공화국의 가치는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른 여러 특수한 집단들의 현실의 종교적, 족류적, 지역적 소수자들을 완전히 동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각각의 특수 집단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들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프랑스 민족에 동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상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분리될 수 없는 프랑스 정체성의 보편주의적인 모델은 지난 200년을 거치면서 프랑스 민족과 프랑스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공화주의자들이 분투했던 하나의 이상일 뿐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허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름은 엄연히 영속되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는 21세기

49) Paul Lawrence, “Naturalisation,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France between the Wars”, *Immigrants and Minorities* 20, 3 (November 2001), pp. 1-24.

초에도 여전히 동화, 보편성, 그리고 동등한 기회라는 프랑스적 모델을 고수하면서 ‘다름’이나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는 지역적인 다양성, 종교, 젠더의 차이들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진짜, 영원한 프랑스’를 표상하는 것인 인종적 차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공화국은 충분히 프랑스에서 확립되었고, 주민들 안에서 문화적 차이들을 견딜 수 있으며, 또 프랑스의 공화국적인 민족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문화적이고 족류적인 보편주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의 부족—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지만, 싸움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⁰⁾

2. 문화 충돌의 시대 민족

이주민 동화의 문제는 프랑스인을 구성하고 있는 족류 집단들을 프랑스 민족으로 만들기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적인 동화 모델은 프랑스 민족 만들기(nation-building)의 하나의 의식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또 프랑스의 자존감과 정체성의 하나의 표시로 간주된다. 다양한 기원을 가진 각각의 개인들은 프랑스 언어와 문화의 획득을 통해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공화국적인 가치들(자유, 평등, 형제애, 민주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같은)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짜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프랑스 민족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왔다. 제라르 누아리엘은 그의 저서 『프랑스의 도가니』에서, 프랑스는 ‘도가니’ 사회의 원형적 모델인 미국보다도 핵심 가치들과 문화적 특성들의 하나의 공통된 열쇠를 가지고 다양한 기원을 가진 개인들을 하나의 단일한 민족체로 구조해내는데 훨씬 더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프랑스를 도가니(creuset)로 기술했다.⁵¹⁾ 이런 담론은 이주민들이 완전히 프랑스인이 되는 데는 두 세대도 걸리지 않는 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제2세대에게 프랑스에서의 출생은 프랑스 시민권을 보증했고(jus solis), 프랑스 학교 제도를 통한 통로는 프랑스 언어와 민족의 역사 및 지형에 대한 지식 습득을 보증했는데 이런 것들이

50) Baycroft, *France*, pp. 224-225.

51) Gérard Noiriel, Geoffroy de Laforcade, trans., *The French Melting Pot: Immigration,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 214.

민족적인 정치제도들 내에서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한 토대들로서 기여할 것이다. 남자들은 그들의 군복무를 담당할 것이고, 그들의 민족으로의 인도는 완성될 것이다. 상향적인 사회적 유동성은 비록 한 번에 짧은 한 단계만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능할 것이라고 공화국의 전망을 내왔다.⁵²⁾

하지만 19세기에 내내, 심지어 외국인으로 프랑스 시민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공화국적인 민족주의 담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프랑스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들에 여전히 족류공동체적 차원이 존재했다. 비교적 ‘프랑스 인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족류적인 민족주의 사상은 반동적인 우파에 국한되지 않았다. 공화국과 개발 중인 상상 속에서도 또한 발견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프랑스 인민’을 언급했지만 정기적으로 그들을 외국인들이나 외국 인종들과 대비시켰다.⁵³⁾ 역사 교재들에서 ‘우리의 조상 골족’이라는 언급은, 주로 프랑스의 장수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프랑스와 고대 골족의 지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공통의 기원과 공유된 혈통에 대한 하나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족류 집단으로 근대 프랑스를 연결시키면서 공통의 조상의 역사를 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의사-과학적 인종주의 이론들은 후기-다윈주의 시기, 즉 생물학적 차원들이 무수한 사회적 정치적 이론들에 덧붙여지게 되는 때에 개발됨에 따라, 특수한 신체적 특징이 유대인에게 덧붙여지게 되었다. 이런 특징들은 그것이 주장되는바, 그들을 진짜 ‘프랑스인’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그런 생물학적 인종주의는 유대인 공동체가 족류상으로

52) 그것이 몇 세대가 걸리는 예에 대해서는 Philippe Rygiel, *Destinées immigrés: Cher, 1920-1980, trajectoires d'immigrés d'Europe* (Besançon: Annales littéraires de l'Université de Franche Comte, 2001); T. Baycroft, France, p. 214; 이 동화된 개인들의 사회는 영국의 그것과는 비견될 수 있는데, 영국에서의 이주자들의 집단들은 그들의 모국의 문화의 문화적 전통들을 유지하도록 허용되고 장려되며, 또 정부 서비스는 여러 언어들로 제공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문화적 공동체들이 번창하고, 아니면 캐나다와 같이 즉 문화적 ‘모자이크’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캐나다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민행정부에 의해 지원된다.

53) Baycroft, “Ethnicity and the Revolutionary Tradition”, Timothy Baycroft and Mark Hewitson ed., *What is Nation? Europe 1789-1914* (Oxford: OUP, 2006), pp. 8-41; Baycroft, France, pp. 215-216.

프랑스 민족과 다르다는 인식, 즉 프랑스 내에 많은 다른 서클들 안에서 반향을 발견했던 하나의 입장을 늘어나게 했다.

20세기 중반 경에 이르면, 유럽 바깥으로 부터 많은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백인이 아니며 초창기의 이주 물결이 그랬던 것보다 더 문화적으로 주류 프랑스 민족 문화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의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프랑스의 높은 수준의 실업 이후, 재개된 반-이주 담론이 장-마리 르 펜의 민족전선의 선거 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차별이 빈번히 늘어났고, 또 높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자들은 높은 실업률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민족 정체성에 하나의 위협을 제기한다는 하나의 인식이 커졌다.⁵⁴⁾ 프랑스 안에 이와 같은 이주민에 관한 담론을 분석한 하그리브스(Alec G. Hargreaves)는 이주민들이 동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 차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이주민들 자신들을 비난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정말이지 하나의 경제 위기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후 시기 동안 이주 유입에서 비-유럽인들의 ‘꾸준한 증가는 상승하는 경제적 변형과 우호적인 노동 시장이 있는 한 프랑스인이 이들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⁵⁵⁾ 그런데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주민들은 만족스럽게 민족공동체로 통합될 수 없었고, 민족공동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이는 이주민들이 채택하기를 꺼려해서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차이들이 너무나 커서 극복할 수 없었던지 간에 공화국적인 동화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또 프랑스 민족정체성은 ‘외국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비-동화를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런 통합 모델의 실패의 원인에 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즉 그것은 공화국적인 모델에 내재된 허약함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당시 프랑스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본질이 변한 데서 기인하는가?

54) J. Freedman, *Immigration and Insecurity in France* (Aldershot: Ashgate, 2004) 참조.

55) Alec G. Hargreaves, *Multi-Ethnic France: Immigration,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2nd e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7), p. 147.

V. 맺음말

프랑스혁명은 프랑스 이민 모델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종과 족류적 태생에 근거를 둔 모든 차별에 대한 거부를 명시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모든 문화적·종교적 관습은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또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주자들의 족류공동체의 정치결사는 금지되었다. 다시 말해 공화국의 이름으로 다양한 인종과 족류공동체에 대한 모든 차별은 금지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같은 이름으로 결성되는 정치적 결사나 이주민들의 족류공동체의 목적과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공화국의 전통을 위협하면서 공화국과의 충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프랑스 이민정책의 이중성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공화국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이다.

일찍이 페르낭 브로델(F. Braudel)은 말년에 쓴 그의 저서 『프랑스의 정체성』에서 프랑스가 무엇인지 명명하고 있다. 제1장의 제목을 보면 ‘프랑스의 이름은 다양하다’(que la France se nomme diversité)라고 불렀다. 즉 프랑스는 “다양성”이라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문에서는 “모든 민족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민족적 단일성(=일체성)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그것의 반영, 전위(轉位), 조건과도 같다”라고 적고 있다. 반면, 노라(Pierre Nora)는 ‘프랑스의 이름은 다양성(diversité)이 아니라 구분(division)’이라고 말하고 있다.⁵⁶⁾ 다양성에 상반되는 개념이 단일성(unité)이라 할 때, 단일성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프랑스의 다양성을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그는 강조한다. 분명 지방들, 인민들, 언어들, 무한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다양성의 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족류공동체들의 특성인 족류성(ethnicity)이다. 이런 족류성에 대한 존재를 일찍이 포착했던 이가 바로 19세기 말 바레스였다. 바레스는 제3공화국이 추구했던 위로부터의 정치적인 민족통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프랑스 민족의 이 ‘갈라진 사회’의 분열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했고, 더욱이 외국인들과 유대인의 민족 통합의

56) Yves Florenne, “L’identité de la France de Fernand Braudel”, *Le Monde diplomatique* (Juin, 1986), p. 27; Pierre Nora (dir.), 『기억의 장소 3』, 5쪽.

한계를 지적했으며,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뿌리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족류성(ethnicity)임을 인식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제3공화국 체제가 추구했던 종합이 사라지면서 전체의 유기적 단일성은 더 이상 역사의 연속성 및 영토의 획득된 조화에 좌우되지 않는다. 대신 “정체성(idendité)”에 대한 자각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역사의 가속화, 세계화, 민주화, 대중화, 미디어화 등으로 일어난 지각변동에 의해 역사의 연속성도 영토에 한정된 기존의 삶의 방식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⁵⁷⁾

현재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의 민족 통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날 EU가입, 민족국가들의 주권이나 독립성은 약화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국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민족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족국가들에서 민족 정서는 이주에 의해 오히려 강한 민족 정서가 생겨나고 있다. 주로 매스컴과 결부되어 가시적인 세계적인 불평등의 결과로 이주의 규모와 수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를 지닌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인 이주민들이 민족에게 가져다주는 다양성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의 재공식화를 추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의 대량 이주는 위성통신과 정보기술과 더불어 대량 수송과 여행은 타문화와 타자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족과 그 민족의 문화적 단일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그것의 단일한 족류적 기원들에 대한 오래된 분명한 확실성이 약화된 결과로 족류공동체들의 문화적 구성을 바꾸어 놓고 있다. 또한 오늘날 문화적 다원주의 때문이든 또는 장기적인 역사적 이유들 때문이든 서구의 국가들은 보다 시민적이고 영토적인 민족주의 버전을 작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주둔국에서 시민들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족류공동체의 성격은 이주와 이민 물결에 의해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들 족류적 민족들은 보다 영토적으로 토대를 두고 다문화적인 정치

57)같은 책, 5-6쪽.

공동체 속으로 점차 변모해가고 있다.⁵⁸⁾ 민족을 이루는 족류공동체들의 성격의 변화는 때로는 족류적 성격이 강조되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민적 성격이 강조되어 나타나며 민족으로의 통합을 추동하고 있다.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는 오늘날 족류공동체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들을 능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립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프랑스 공화국의 민족정체성의 근본적 특징들 중에 하나인 통합과 보편주의에 위배되는 족류공동체들의 문화적인 다름과 차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부족은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물론 그 과정은 싸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는 미래를 미리 결정지어 말하지 않는다. 단지 순간순간의 변화를 주시할 뿐이다.*

숭실대학교 , mejdream@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이민(immigration), 민족(nation), 족류공동체(ethnie), 족류성(ethnicity), Maurice Barrès(모리스 바레스), cultural conflict(문화충돌)

(투고일: 2015. 11. 11, 심사일: 2015. 11. 14, 게재확정일: 2015. 11. 16)

58) Anthony D. Smith,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UK: Polity, 2010: 2nd edition), pp. 109-110.

<국문초록>

프랑스 이주민의 민족 통합,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19세기말 바레스를 중심으로-

마 은 지

프랑스로의 이주의 역사에서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대량 유입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기록된다. 이주민들은 프랑스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충적인 노동력과 군대의 병사들로 간주되었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했다. 즉 경제 성장기에는 이민의 대량 유입이 일어났다면, 경제침체기에는 실업과 고용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최근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통합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외국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대감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는 정치영역으로 파급되었다.

19세기말 민족주의자 바레스는 제3공화국이 추구했던 위로부터의 정치적인 민족통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프랑스 민족의 이 ‘갈라진 사회’의 분열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외국인들과 유대인의 민족 통합의 한계를 지적했다. 바로 외국인들과 유대인들의 족류공동체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족류성(ethnicity)을 포착했던 것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민족통합의 문제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 간극을 보여준다. 그 근저에는 이주민들의 족류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국 통합 모델에 대한 재고가 논의되고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between
myth and reality
: focusing on Maurice Barrès in the late 19th century.

Eun JI MA

In the history of the immigration in France, inflow in large quantity mark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mmigrants considered as temporary use, substitute labor and soldiers. Immigration policy in France has changed with population declin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period of economic growth it happened mass inflow of immigrants, but unemployment and suspension of employment in the economic downturn. As a result, there was an integration between the foreign workers as new outcomers and French workers. This led to competition among them. Competition in the labor market produced strong antagonism against foreign. This spread to the political arena.

In the late 19th century a nationalist Maurice Barrès pointed out the limitation of the political nationalization from the top in the Third Republic. He tried to establish the cause of the 'divided society'. He grasped the ethnicity from the cultural foundation. It resulted from the ethnic difference.

The nation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tion shows the gap between myth and reality in the French society. Because the ethnicity of immigration underlies in it. Today the integration model of Republic is under discussion to reconsider.

■ 논문 ■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오 정 은

I. 서론

요즘 유럽은 매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밀려드는 난민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더블린규정에 명시된 ‘역내에서 망명신청 접수는 오직 한 국가(망명신청자가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역외지역에서 온 난민신청자가 대부분 EU 영역 경계지역에 위치한 남부 및 동부지역 회원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중인데, 이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그 많은 난민을 계속해서 수용하기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EU 회원국들은 자국으로 난민을 수용하는데 미온적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연일 유럽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루어지는 형국이다.

유럽 각국 대표들은 EU 회원국들이 난민을 분산수용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선뜻 자국으로 다수의 난민을 데려오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감에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했을 정도로 유럽 주요국에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짙게 형성되어 있다. 유럽의 반이민 정서는 선거철마다 극우정당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특히 최근에는 난민 사이에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회 안전 위협 인물이 섞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각국 정부가 난민수용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이민 정서는 오늘날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명맥만 유지해오던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1980년대부터 조금씩 지지층을 결집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제도권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우정당은 반이민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극우정당에게 반이민 정서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지만, 이민자 수가 많거나, 반이민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극우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고는 EU 각국에 존재하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극우정당의 영향력을 비교하면서,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최근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반이민 정서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반이민 정서 형성 배경

주변에 이민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는 배경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민자를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민자 수가 충분히 많고, 외관상 이민자가 사회 주류층과 구분되고, 이민자가 사회 주류층과 구분되는 생활방식을 고수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이민 정서의 기저에는 인종주의(racism)나 제노포비아(xenophobia)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 두 용어는 일반인 사이에 혼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반이민 정서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심리를 포괄한다.

인종주의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 우월주의라는 편견에 토대를 둔

것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생물학적 우열론을 주장하고, 선진국의 백인사회나 백인 중심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제노포비아는 특별히 백인사회나 백인 중심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¹⁾ 제노포비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백인에 의한 인종주의처럼 상대에 대한 멸시의 감정 이외에도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유럽인들은 인종주의에 대해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종주의적 발언은 몰지각한 사람이나 하는 발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인종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종이라는 용어에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의미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의미가 부여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종주의적 언행을 자행한다.

제노포비아적 주장에 대해서는 지식인들도 동조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노포비아 현상을 연구해 온 존스(Rachel B. Jones)는 제노포비아의 유형을 크게 배타적(exclusive), 소유적(possessive), 악성적(toxic)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제노포비아의 근원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배타적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외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소유적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 공동체에서 직업, 교육, 세금, 의료 혜택 등을 누리려고 한다는 인식에서 발현된다. 그리고 악성적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가치체계와 자유 등을 파괴하려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²⁾

제노포비아적 사고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화 할 때는 민족상징 유형, 경제사회 유형, 혼합가중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1) 임종현,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권, 1호(2006), 57쪽.

2) Rachel B. Jones, "Intolerable Intolerance: Toxic Xenophobia and Pedagogy of Resistance." *The High School Journal*, 95, 1(2011), p. 35.

한다.³⁾ 민족상징 유형은 배타적 제노포비아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특정한 종족, 민족, 인종 등이 타 종족, 민족 인종 등에 대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정서나 의식으로 ‘우리’가 아닌 타자를 배제하는 현상이다. 이때 다르다는 인식은 타자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배타적 정서가 이슬람의 상징,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 금지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족상징 유형으로 나타나는 제노포비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 유형은 소유적 형태의 제노포비아 의식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가 구성원인 시민에게만 공공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민 온 이민자들이 이러한 공공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전제한다. 이민자가 범죄, 질병, 고용,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주민과 이민자의 공공재 사용 진입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 경제위기시에 이민자 배척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이 그 예다. 혼합가중 유형은 악성적 제노포비아 인식이 현실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폭력, 테러 등에 대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면서 다문화 상황이 공존보다는 분리를 추구하고 문화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혼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⁴⁾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는 제노포비아 심리를 통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침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정된 자원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민자가 경쟁에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반이민 정서로 발전한 것도 기독교 문화와 상이한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럽인의 반이민 정서가 인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백인 유럽인과 구분되는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가 혼합되어 표출된다. 비록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네오나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투표하는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유럽사회에 인종주의가

3)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비교민주주의 연구』, 8집, 2호(2012), 167-170쪽.

4) 위의 논문.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요컨대 유럽의 반이민 정서에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결합되어 있다.

Ⅲ. 극우정당의 반이민 노선 채택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등장한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드레퓌스 사건으로 제3공화정이 위기에 빠질 정도로 극심한 사회분열을 겪은 것이나, 1930~40년대 나치의 유대인 말살정책에 독일인들이 동참한 것은 유대인을 향한 유럽인들의 반이민 정서가 사회현상으로 표출된 사례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구 식민지출신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자가 관련된 사건 사고들도 증가했는데, 이민자가 연루된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곤 했다. 하지만 20세기까지 유럽의 반이민 정서는 널리 확산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뇌리에서 곧 잊혀졌다. 일시적으로 고조되다가 곧 잠잠해지면서, 한 때의 분위기처럼 치부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 반이민 정서는 그 이전과 성격이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반이민 주장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세련된 논리로 발전하였다. 반이민 구호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안정적인 지지층도 형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극우정당의 역할이 있었다.

과거 유럽의 극우정당 가운데에는 이민자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1980~90년대에 대부분의 유럽 극우정당들은 이민문제를 당의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당시 극우정당들이 반이민 논리를 채택한 이유는 유럽 경제침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국가에서 반이민 구호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는 극우정당 사례가 이웃 국가의 극우정당들은 반이민 논리를 채택하도록 자극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후 극우정당들은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반이민 구호를 외치며 반이민 정서를 지지층 확대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반이민 주장과 유럽 극우정당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9·11테러 직후 서방 국가 사이에 이슬람교도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민자 가운데 북아프리카나 아시아지역 출신 이슬람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반이슬람 정서가 반이민 정서로 발전했다. 극우정당들은 대중의 제노포비아 심리를 자극하면서 유럽의 안전을 구실로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 공약으로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제도권 진입을 넘어 집권하는 극우정당이 등장했다.

오늘날 유럽 극우정당들은 모두 반이민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치 반이민 노선 채택 여부가 극우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기준이 된 듯하다. 그러나 원래 반이민 입장 여부가 극우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었다. 1995년에 뮈더(Cas Mudde)는 당시 극우정당의 정의를 시도하는 주요 논문 26편을 분석하고, 해당 논문에서 극우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소로서 자주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nationalism),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반민주주의(anti-democracy), 강한국가론(strong-state)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었다.⁵⁾ 이 가운데 민족주의를 핵심 요소로 꼽은 글은 22편이고, 제노포비아 21편, 인종주의 19편, 반민주주의 19편, 강한국가론이 19편이었다.⁶⁾ 당시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극우정당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필수요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극우정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학자마다 다양한

5) Cas Mudde, "Right-wing Extremist Analyz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deologies of Three Alleged Right-Wing Extremist Parties (NPD, NDP, CP'8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7, 2(1995), p. 206.

6) *Ibid.*, , pp. 206-209.

방식으로 극우정당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⁷⁾ 오늘날 극우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요건이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이민 주장이 유럽에서 극우정당을 규정할 때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유럽에서 극우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모두 반이민 주장을 핵심 강령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제 3당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오스트리아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은 국가통제 반대를 핵심강령으로 하던 정당에서 1990년대 초반에 반이민 정당으로 돌아섰고,⁸⁾ 1972년 설립되어 1995년 다수의 당원들이 덴마크 인민당(Dansk Folkeparti: DF)을 설립하여 탈당할 때까지 덴마크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이었던 극우정당 개혁당(Fremskridtspartiet)도 1980년대에 반이민 성격을 추가하였다.⁹⁾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e: FN)도 1980년대에 반이민 성격을 강화하였고, 1978년 설립되어 2005년 플레미시이익(Vlaams Belang: VB)으로 당명을 개정한 벨기에 극우정당 플레미시블록(Vlaams Bloc: VB)은 1986년 프랑스의 FN의 선거승리에 자극받아 한층 공격적인 반이민 강령을 제시하였다.¹⁰⁾ 이탈리아의 극우정당 북부동맹(Lega Nord: LN)도 1990년대 초에 당의 차별화 전략으로 반이민 논리를 발전시켰다.¹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유럽 극우정당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이민 주장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에서

7) Christina S. Liang, *Europe for the Europeans: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the Populist Radical Right* (Farnham: Ashgate Publishing, 2007), pp. 3-6.

8) Herbert Kitschelt, *The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p. 91.

9) *Ibid.*

10) Marc Swyngedouw, "The Extrem Right in Belgium: of a Non-existent Front National and Omnipresent Vlaams Blok." in Betz, Hans-Georg and Immerfall, Stefan (eds.), *The New Politics of the Right: Neo-populist Parties and Movements in Established Democrac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p. 67-68.

11) Piero Ignazi,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9.

극우정당은 이미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행동(Action Française)이라는 극우정당이 활동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세계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는 주요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집권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의 만행을 떠올리는 유럽시민들이 극우정당을 외면하면서 오랫동안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1980년대부터 일부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며 지지율이 상승했고, 이것이 현재까지 극우정당이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이 경제 불황기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자 일부 극우정당들이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유권자의 표를 얻었고, 이웃 국가의 극우정당의 선전에 자극받은 극우정당들이 반이민 노선을 강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크레인과 네비트(Cochrane & Nevitte)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20개 국가에서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는 극우정당들의 선거 득표율 변화를 추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에 득표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¹²⁾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FPÖ는 1983년 선거에서 5.0%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1986년 9.7%, 1990년 16.6%, 1994 22.5%로 득표율이 상승했다. 벨기에의 VB는 1981년 선거에서 1.1%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1985년 1.4%, 1987년 1.9%의 득표율을 기록하다가 1991년 6.6%, 1995년 7.8%, 1999년 9.95%, 2003년 11.7%, 2007년 12.0%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프랑스의 FN은 1981년 선거에서 득표율 0.0%를 기록했지만, 1986년 9.7%, 1988년 9.6%, 1993년 12.3%, 1997년 14.9%, 2002년 11.1% 등의 득표율을 기록했다.¹³⁾

코크레인과 네비트의 조사에 이어 최근까지 유럽 각국 선거에서 극우정당 득표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즉, <표 1>은 1980년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유럽 주요국 극우정당의 선거 득표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2) Christopher Cochrane & Neil Nevitte, "Scapegoating: Unemployment, Far-Right Parties, and Anti-Immigrant Sentimen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12, 1(2014), pp. 10-12.

13) *Ibid.*, pp. 10-12.

일부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지속적인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럽 주요국 극우정당의 선거 득표율 변화(1980-2015)

국가	연도별 득표율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오스트리아 FPÖ	1983	1986	1990	1994	1995	1999	2002	2006	2008	2013		
	5.0%	9.7%	16.6%	22.5%	21.9%	26.9%	10.0%	11.0%	17.5%	20.5%		
벨기에 BV	1981	1985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0	2014		
	1.1%	1.4%	1.9%	6.6%	7.8%	9.9%	11.7%	12.0%	7.8%	3.7%		
덴마크 FRP DF	1981	1984	1987	1988	1990	1994	1998	2001	2005	2007	2011	2015
	8.9%	3.6%	4.8%	9.0%	6.4%	2.4%	0.5%	0.5%	-	-	-	-
핀란드 PS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2015			
	-	-	-	1.3%	1.0%	1.6%	4.1%	19.1%	17.7%			
프랑스 FN	1981	1986	1988	1993	1997	2002	2007	2012				
	0.2%	9.8%	9.8%	12.7%	14.9%	11.1%	4.3%	13.6%				
독일 NPD	1980	1983	1987	1990	1998	2002	2005	2009	2013			
	0.2%	0.2%	0.6%	0.3%	0.3%	0.4%	1.6%	1.5%	1.3%			
이탈리아 LN	1983	1987	1992	1994	1996	2001	2006	2008	2013			
	-	-	8.7%	8.4%	10.0%	3.9%	4.6%	8.3%	4.1%			
네덜란드 CP/CD LPF PVV	1981	1982	1986	1989	1994	1998	2002	2003	2006	2010	2012	
	-	0.8%	0.4%	0.9%	2.5%	0.6%	-	-	-	-	-	-
	-	-	-	-	-	-	17.0%	5.6%	-	-	-	-
스웨덴 NyD SD	1982	1985	1988	1991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	-	-	6.7%	1.2%	-	-	-	-	-	-	-
영국 BNP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2015				
	0.0%	0.0%	0.1%	0.1%	0.2%	0.7%	1.9%	0.0%				

자료: Cochrane & Nevitte (2014) 및 각국 총선결과 자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우정당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2000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극우정당인 FPÖ가 오스트리아인민당 (Österreichische Volkspartei: ÖVP)과 연정을 통해 집정권당이 되었고, 2002년 4월 프랑스 극우정당인 FN은 창립자이자 당대표인 Jean-Marie

Le Pen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시켜 1차 경선 2위를 기록하고 결선투표에 진출시켰다. 2002년 5월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신생 극우정당인 펴프포르퇴인 리스트당(Lijst Pim Fortuyn: LPF)이 전체 150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하여 제 2정당이 되고, 제 1당인 기독교민주당(Christen-Democratisch Appèl: CDA), 제 3당인 자유민주당(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VVD)과 연대하여 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각국에 경제불황이 시작되면서 극우정당은 다시 한 번 세력 강화의 기회를 맞이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이민자가 원주민의 일자리를 뺏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선동했다. 현재도 극우정당의 주장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EU는 유럽 전역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차원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감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¹⁴⁾ 하지만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은 EU차원의 정책이 자국의 경제침체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민자유입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이민 구호를 반EU 논리와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EU차원의 반이민 대응을 공격했다. 반이민과 반EU의 결합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유럽시민들을 극우정당의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낳았고, 극우정당의 지지층이 더욱 두터워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5년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세계 언론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돌풍할 것을 예견했다.

IV.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우정당

14) EU는 1997년 유럽 각국의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실태를 감시를 위해 유럽 인종주의·제노포비아 감시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를 설립하였고, 2007년에는 EUMC를 계승하여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와 관련하여 감시 이외에도 연구, 출판 등 다양한 사업 전개하는 유럽연합기본권사무소(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FRA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 소재.

2014년 5월 22~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극우정당들이 유럽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유럽의회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5~6월경에 실시되며, EU회원국 전역에서 유럽시민의 직접선거로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럽의회는 EU의 각료이사회와 함께 EU차원의 법규 제정을 결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EU차원에서 집행되는 정책에 대해 감독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향후 EU정책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유럽의회 의석수는 EU회원국별 인구를 고려하여 국가 당 최소 6석부터 최대 96석까지 배정하여 총 751석이다.¹⁵⁾ 2014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은 극우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것인가를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꼽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극우정당이 내세우는 구호와 공약은 미디어를 통해 유럽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EU회원국 정당들은 유럽의회에서 유사한 정치적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끼리 연대하여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원내 공동의 입장을 표방하는데,¹⁶⁾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최소 7개국 출신 25명의 의원을 배출한 연대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979년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없었으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극우정당이

15) 유럽의회 의석수는 신규 회원국 가입이나 EU 조약 개정 과정에서 재조정되곤 한다. 2014년 선거에 배정된 국가별 유럽의회 의석수는 독일 96석, 프랑스 74석, 영국과 이탈리아 각각 73석, 스페인 54석, 폴란드 51석, 루마니아 32석, 네덜란드 26석, 벨기에,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각각 21석, 스웨덴 20석, 오스트리아 18석, 불가리아 17석, 덴마크, 슬로바키아, 핀란드 각각 13석,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각각 11석,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각각 8석,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 각각 6석이다.

16) 2014년 9월 30일 현재 유럽의회에 형성된 정치그룹은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 유럽사회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유럽자유민주연대(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녹색당/유럽자유연대(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GREEN/EFA), 유럽보수개혁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유럽통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 그룹(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자유유럽-민주그룹(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이며,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비정파(Non-attached Member: NI)로 지칭된다.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유럽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각국 극우정당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유럽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선거를 앞두고는 극우정당 사이의 연대가 성사되어 극우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예측은 실현가능한 것처럼 보였다.¹⁷⁾

유럽 극우정당의 연대는 2013년 11월 13일 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인 PVV의 당대표 헤이르트 빌더스(Geert Wilders)가 프랑스 극우정당 FN의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과 만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위한 양국의 연대를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연대는 파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극우정당들의 기본 강령은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EU 통합에 반대하는 것인데 국가단위를 넘어 유럽차원의 정당간 연대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EU 통합 진전이 개별국가의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장기간 경기 침체와 외국인 유입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반이민 반EU를 관철하겠다는 논리로 국제연대를 성사시켰다.

유럽 극우정당의 연대를 처음 제안한 것은 프랑스의 FN였다. FN의 창립자이자 초대 당수였던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의 딸로서 2011년 FN의 당수가 된 마린 르펜은 취임 후 과거 극우정당이 보유한 강경한 이미지를 탈피하며 온건한 행보를 보이며 지지자를 확충했으며, 프랑스를 넘어 유럽에서 극우정당 지지자 확대를 위해 극우정당들의

17) Nicholas Watt, "Ukip's Nigel Farage shocks own party with call to let in Syrian refugees," *The Guardian*, 29 December 2013; Christopher Hope. "Let Syrian refugees come to Britain, says Nigel Farage". *Telegraph*, 29 December 2013; Alex Wickham. "The Real Racists: UKIP is the only party that doesn't discriminate against non-whites". *Breitbart*. 27 April 2014.

연대를 위해 나섰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PVV와 처음으로 연대에 합의했다. 곧이어 FN-PVV 연대는 영국의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UKIP)과도 연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UKIP는 정치노선의 차이를 이유로 2014년 4월 19일 공식적으로 연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UKIP는 반EU 노선을 견지하고 우파 성향이긴 하지만, 극우정당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민자 정책에 관해서도 UKIP는 영국이 기독교도인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이민 입장을 분명히 하는 다른 극우정당과 차이를 보였다.

극우정당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주장이 강하고 성향이 다른 각국 극우정당의 대규모 연대가 가능할지, 연대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유럽의회 선거 직후인 5월 28일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이탈리아 NL 대표, 헤럴드 빌립스키(Harald Vilimsky) 오스트리아 자유민주당(FPÖ) 의원, 마린 르펜 프랑스 FN 대표, 헤르트 빌더스 네덜란드 PVV 대표, 헤로프 아네만스(Gerolf Annemans) 벨기에 플레미시이익당(VB) 대표 등이 28일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FN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지만, 교섭단체 결성 신고 1차 시한인 2014년 6월 24일에 르펜 FN대표는 유럽 극우정당 교섭단체 실패를 발표하였다.¹⁸⁾ 르펜 대표는 앞으로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성공하지 못했다. 유럽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정파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회기 도중에 교섭단체 결성도 가능하지만,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극우단체들이 유럽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정당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부 극우정당들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FN으로, 24.9%의 득표율로 프랑스에 배정된 전체 유럽의원 의석 74석 가운데 24석을 차지하면서, 기존의 프랑스 제 1당과 제 2당을 제치고 프랑스 정당 가운데

18) Kim Willsher and Ian Traynor, "Marine Le Pen fails to form far-right bloc in European parliament," *The Guardian*, 24 June 2014.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헝가리의 Jobbik도 14.7%의 득표율로 3석을 차지하여, 기존의 헝가리 제 2정당인 헝가리사회당(Magyar Szocialista Párt: MSZP)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헝가리 정당이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FPÖ도 2009년 선거에서 12.7% 득표율로 2개 의석을 차지하던 데에서 2014년에는 19.7% 득표율로 4개 의석을 차지했다. 핀란드 극우정당인 진정한 핀란드인(PS)도 12.9%의 표를 얻음으로써 기존에 유럽의회에서 1석을 차지하던 데에서 2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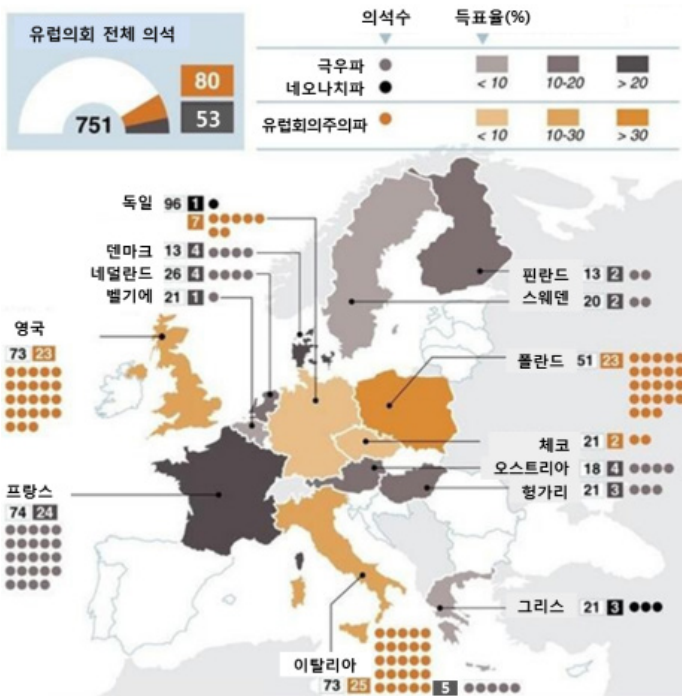
유럽 극우 정당 가운데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린 경우도 많았다. 네오나치계열로 분류되는 그리스의 극우정당 황금새벽당(Chrysi Avgi)이 9.4%의 득표율로 그리스에 배정된 21석 가운데 3석 차지하며 유럽의회에 입성했고, 스웨덴 민주당(SD)이 9.7%의 득표율로 유럽의회의 2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독일에서는 국내 선거에서도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던 네오나치계열 극우정당 민족민주당(NPD)이 1.0% 득표율로 유럽의회의 1석을 차지하였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국내외 많은 언론은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극우정당 압승을 주장하던 매체들이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과 극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극우정당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극우정당이 반이민과 더불어 반EU를 주장했지만, 반EU를 표방하는 정당이 모두 극우정당은 아니다. 좌파 계열의 정당들 가운데에도 유럽통합을 반대하고 반EU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반EU를 주장하는 우파 계열 정당 중에도 민족주의만 강조할 뿐 반이민 정서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이 있다. 이러한 정당을 모두 극우정당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 1>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를 주장하였던 정당들을 극우주의 정당과 유럽회의주의 정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극우정당 가운데 명시적으로 네오나치즘을 표명하는 경우는 일반 극우파와 구분하여 네오나치파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극우파와

네오나치파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모두 극우에 속하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표명하기 때문에 함께 극우정당이라 칭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751석 가운데 극우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53석이다. 53석을 획득한 것도 의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극우정당이 유럽의회를 좌우할 것처럼 비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 1> 2014년 유럽의회 유럽회의주의파와 극우파 정당 의석 수



주: 네모 안 숫자는 유럽의회 의석수 의미.

자료출처: 유럽의회 홈페이지와 EU 28개 회원국 정당소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http://www.elections2014.eu>(검색일: 2015년 8월 16일)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의 일부 극우정당에게 다시금 지지층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EU 역내 모든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네덜란드 PVV는 선거 직전까지 많은 매체들이 PVV가 네덜란드 정당 가운데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곤 했지만, 오히려 2009년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3.5% 낮은 13.3%의 득표율로 4개 의석을 차지하여 네덜란드 정당 가운데 3위에 머물렀다. 이탈리아의 극우정당인 NL도 2009년 10.2%의 득표율로 전체 이탈리아 의석 72석 가운데 9개 의석을 차지했던데 비해 2014년에는 6.2%의 득표율로 이탈리아 73개 의석 가운데 5개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벨기에의 극우정당 VB도 2009년에 15.9%의 득표율로 당시 벨기에 의석 22석 가운데 2석을 차지했던데 비해 2014년에는 6.8%의 득표율로 21석 가운데 1석을 차지하여 5년 전 선거보다 지지층을 잃었다. 그리고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 출신 유럽의원이 배출하지 못했다. 언론들이 극우주의자의 반이민 주장이 유럽을 전역을 뒤덮은 것처럼 묘사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극우정당의 반이민 주장과 거리를 둔 유럽인도 많았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로 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은 증가했지만, 극우정당들이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못한 상황에서 유럽 차원의 정책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4년 선거 결과로 인해, 이후 5년동안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극우정당들이 자국에서 대 EU정책을 논할 때,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배정된 전체 유럽의회 의석 74석 가운데 FN이 24석을 얻어, 20석을 차지한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과 13석을 차지한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을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추후 EU에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극우정당이 이전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1위는 아니었지만 이전 선거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헝가리의 Jobbik과 오스트리아의 FPÖ, 핀란드의 PS도 과거보다 EU차원의 정책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V. EU 회원국 극우정당 현황

앞서 언급했듯, 2차 세계대전 이후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의 침체기를

겪었던 유럽 극우정당들은 1980년대부터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정에 참여할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극우정당의 영향력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표 2>는 2015년 10월 5일 현재 28개 EU회원국의 극우정당 현황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 결과를 통해 극우정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가별 지지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EU회원국의 극우정당 현황

국가	당명	설립연도	득표율(%) ¹⁾	의석수
오스트리아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	1956	20.5 (2013)	40/183
핀란드	Perussuomalaiset (PS)	1995	17.7 (2015)	38/200
헝가리	Jobbik	2003	20.5 (2014)	23/199
라트비아	Nacionālā apvienība (NA)	2010	13.9 (2011)	14/100
프랑스	Front National (FN)	1972	13.6 (2012)	2/577
덴마크	Dansk Folkeparti (DF)	1995	21.1 (2015)	37/179
네덜란드	Partij voor de Vrijheid (PVV)	2006	10.1 (2012)	15/150
룩셈부르크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 (ADR)	1987	6.6 (2013)	3/ 60
벨기에	Vlaams Belang (VB)	2004	3.7 (2014)	3/150
불가리아	Ataka	2005	7.3 (2013)	23/240
리투아니아	Tvarka ir teisingumas (TT)	2002	6.9 (2012)	18/300
그리스	Χρυσή Αυγή (XA: ChrysiAvgi)	1985	6.3 (2015)	17/300
스웨덴	Sverigedemokraterna (SD)	1988	12.9 (2014)	49/349
슬로바키아	Slovenská národná strana (SNS)	1989	4.6 (2012)	0/150
이탈리아	Lega Nord (LN)	1991	4.1 (2013)	20/630
크로아티아	Hrvatska stranka prava (HSP)	1990	3.0 (2011)	0/151
영국	British National Party (BNP)	1982	0.0 (2015)	0/650
슬로베니아	Slovenska Nacionalna Stranka (SNS)	1991	1.8 (2011)	0/ 90
루마니아	Partidul România Mare (PRM)	1991	1.5 (2012)	0/137
독일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1964	1.3 (2013)	0/630
사이프러스	Εθνικό Λαϊκό Μέτωπο (Ethniko Laiko Metopo, ELAM)	2008	1.1 (2011)	0/460
체코	Dělnická strana sociální spravedlnosti (DSSS)	2010	0.9 (2013)	0/200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에스토니아	Eesti Iseseisvuspartei (EIP)	1999	0.2 (2015)	0/101
포르투갈	Partido Nacional Renovador (PNR)	2000	0.5 (2015)	0/230
스페인	España 2000	2002	0.04 (2011)	0/350
아일랜드	None	-	-	-/166
폴란드	None ²⁾	-	-	-/460
몰타	N/A ³⁾	N/A	N/A	-/ 69

주:1) 2015년 10월 5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 결과.

괄호 안은 가장 최근 총선이 치러진 연도.

2) 2001년에 극우정당 Liga Polskich Rodzin(LPR)이 설립되어 2005년 총선에서 8.0%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2007년 총선 실패 후 해체.

3) 정당등록제가 존재하지 않아 총선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정당유무를 알 수 없음.

자료: EU 28개 회원국별 정당소개 자료와 총선 결과 보도 자료를 토대로 정리.

각국에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극우정당이 20%를 넘는 득표율을 보였을 정도로 국내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핀란드, 라트비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도 유권자로부터 1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인 14개국에서는 극우정당이 국회에서 단 1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5년에 치러진 선거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크로아티아 등 9개국에서 총선이 치러지고, 이 가운데 2015년 10월 5일 현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등 7개국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등에서는 극우정당이 승리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즉, 핀란드에서 극우정당인 핀란드민족당(Perussuomalaiset: PS)이 17.7%의 득표율로 제2정당에, 덴마크에서도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 DF)이 21.1%의 지지율로 제2정당에 올랐다. 그리스에서도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Χρυσή Αυγή: XA)DL 6.3%의 득표율로 제 3정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 극우정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용하는 핵심 주장은

반이민이다. 그런데, 국가별 이민자 비율과 극우정당의 지지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독일은 외국인 비율이 9.6%에 이르는데¹⁹⁾ 극우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가장 최근 총선에서 독일 극우정당 득표율은 1.3%에 불과했다. 스페인도 외국인 비율이 10.9%에 이르렀지만, 극우정당 득표율은 0.04%라는 미약한 수준이다. 포르투갈도 외국인이 4.0%를 차지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극우정당 득표율은 0.3%였다. 벨기에는 외국인 인구가 11.2%에 이르고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이민자 수와 반이민 정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뮈더(Mudde)는 유럽인 다수가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극우정당의 득세 원인을 사회환경이나 유권자의 영향, 즉 수요차원의 문제 보다는 정당의 선거 동원 전략이라는 공급차원의 문제에서 찾는다.²⁰⁾ 유럽 각국 상황을 비교하면, 이러한 주장에 수긍하게 된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 확산이 이민자의 수보다는 정당 전략 차원에서 반이민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극우정당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제화·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이민 정서의 형성과 확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쉽다. 반이민 정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이민 정서의 근원을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민자 문제를 고민했던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이민 정서는 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19)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5년 8월 10일)

20)Cas Mudd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33-6(2010), pp. 1178-1180.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극우정당의 조직적인 노력에 따라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럽의 극우정당은 한때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민자를 막연히 경계하곤 하던 사람들에게 이민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고, 반이민 정서를 공유하는 유권자 세력을 형성했으며, 반이민 정서를 공고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반이민 구호를 외치는 극우정당이 항상 지지층 확대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도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국가들은 과거 나치즘과 파시즘을 동조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은 시민들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극우의 논리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냉정하게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세 국가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절반 정도가 극우정당의 돌풍이 예견되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출신에게 한 자리의 의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의 관계는 최근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여, 2015년 10월 현재 약 200만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²¹⁾ 초기에 한국사회는 이민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민자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는 이른바 ‘반다문화’를 주장하면서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부의 이민자 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라보기 실천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 시민연대’, ‘단일민족 코리아’,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애국애족주의를 빙자한 반이민 주장을 하며 활동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시위도 있었다. 2007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에서 오프라인상의 반이민 시위가 있었고,²²⁾ 2013년에는 영종도에 정부가 가칭 ‘난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난민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몰려가 센터 개소에 격렬히 항의했다. 난민센터는 오랜 표류 끝에 결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개소해야 했다. 이민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친다문화 주장에 비하면

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외국인 통계자료인 2015년 9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1,874,614명이다.

22)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170-171쪽.

반다문화 주장은 아직 소수의견이다. 하지만, 이민자가 연루된 범죄 등 이민자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반이민 정서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구성원들은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를 교육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우주의, 민족주의를 애국심을 혼동하기 쉽다. 이민자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극우주의자들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이민자로 인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쉽다.

유럽의 사례는 반이민 정서 발전이 이민자 수 증가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 아니며, 극우주의자들의 의도적인 노력때문에 증폭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반이민 주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민의식으로 무분별한 반이민 주장 확산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사회갈등과 불안이 조성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민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교육이 중요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이민문제 전문가의 대다수가 이민자 지원 방안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제 그 관심의 일부를 반이민 정서에 대한 연구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 구성원의 3%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반이민 정서의 기저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의 오류를 이해시키고, 감성에 호소하는 반이민 주장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IOM이민정책연구원, je.oh@iom-mrtc.org

주제어:

반이민(anti-immigration), 인종주의(racism), 제노포비아(xenophobia), 극우정당(far-right European), 유럽의회 선거(European Parliament election)

(투고일: 2015. 10. 26, 심사일: 2015. 11. 06, 게재확정일: 2015. 11. 24)

국문초록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오 정 은

오늘날 유럽 주요국에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널리 형성되어 있다. 반이민 정서는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에서 비롯되는데 유럽에는 이 두 가지, 즉, 백인 유럽인과 구분되는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와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반이민 정서로 표출되고 있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극우정당의 역할이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던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1980~90년대에 이민문제를 당의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였고, 유럽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고 서방 국가 사이에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는 와중에, 이민자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많은 유럽에서 반이슬람 감정이 반이민 정서로 발전했고, 극우정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했다. 2000년대 이래 유럽 국가 가운데에는 극우정당이 제도권 정치 진입을 넘어 집권당이 되거나, 주요 정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 항상 반이민 정서가 강하고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크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우정당의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반이민 주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의식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이민자 수가 증가와 반이민 정서 고조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증가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immigration sentiments
and Public support for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in Europe

Jung-eun OH

These days, there are widely spread anti-immigration sentiments in Europe.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generally grows from racism and/or xenophobia, and it originates in Europe from the both, as it were, the prejudice that the White is better than the Colored biologically and the fear of different peoples from Europeans. The European anti-immigration sentiment was boosted by far-right political parties. After the World War II,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could not wield previous influences in realpolitik for many decades, because they were ostracized from Europeans who experienced the Nazi. But the far-right parties who are adopted an anti-immigration in 1980-90s, could enlarged their influence ascribing the growth of unemployment rate during economic depression to immigrants. From far-right parties' perspective, the unemployment rate they are encountering is due to immigrants, who steal the opportunities of non-immigrants. After the 911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there have been tendency of the Europeans ostracizing the Islam and suspecting non-European immigrants.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have been actively utilizing this suspicious atmosphere toward immigrants and increased the base of support by outrageously claiming to prevent influx of non-European immigrants. Since 2000,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gain more power and they become important political power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mergence of far-right parties cannot be viewed as Pan-European phenomena nor as an inevitable result form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Proliferation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and social conflict with immigrants can be prevented by maturity of citizenship.

■ 논문 ■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박 단

I. 머리말

2015년 1월 7일 현지시각 11시 30분 경, 알제리계 이민자 2세인 쿠아시 형제(Chérif et Saïd Kouachi)는 파리 11구에 위치한 풍자 시사만화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의 편집실에 난입해 10명의 편집진과 2명의 경찰관을 살해하고, 다른 네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¹⁾ 이러한 ‘샤를리 엡도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가? 왜? 라는 질문과 함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는 명제를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각인시켰다.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상당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진 바 있다. 그들은 대체로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들의 상황, 이슬람 극단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 쿠아시 형제가 알제리 이주자 출신이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프랑스 내 마그레브 출신 무슬림 이민자 2세대들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타종교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립 항은 언론을 가장

1) 이날 처형된 주간지의 편집주간 및 만화가들은 다음과 같다. 샤르브(Charb), 카뷔(Cabu), 오노레(Honoré), 티그누스(Tignous), 볼린스키(Wolinski). 그 이외에 편집자문을 맡은 경제학자 마루와(Bernam Marois), 정신분석학자 카야(Elsa Cayat)와 르노(Michel Renaud), 교정위원 무스타파(Mustapha), 우라(Ourrad) 등이 살해되었고, 주간지의 경호를 맡고 있던 경찰관 2명은 각각 브랭솔라로(Frank Brinsolaro)와 메르다베(Ahmed Merdabet)이다.

뜨겁게 달군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일부 논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샤를리 엡도가 모든 성역에 대하여 풍자를 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실,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과 무슬림 이민자에 적대적인 민족전선(Front National)을 매우 빈번히 풍자했을 뿐만 아니라, 좌우를 불문하고 정치인, 심지어는 교황까지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샤를리 엡도가 이들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할 정도였으니 이 주간지의 성역 없는 비판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 대한 풍자는 이슬람이나 다른 정파의 풍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제’되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²⁾

가해자인 쿠아시 형제가 왜 샤를리 엡도를 표적으로 삼았을까? 연이어서 일어난 아메디 쿨리발리(Amedy Coulibaly)의 유대인 전용 코셔 식품점 공격과 샤를리 엡도 공격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 관계, 이들 사건 범인들의 국제적 급진 이슬람세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특별히 논할 생각은 없다. 단지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두 사건의 피해 대상이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의 대표적인 상징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해 실제 현대 프랑스 사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³⁾ 우선, 프랑스 내 무슬림과 유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의 주 가해자가 전통적인 백인집단에서 무슬림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샤를리 엡도에서 해고된 ‘시네 기자 사건’을 사례로 들어 샤를리 엡도가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비판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파리에서 일어난 유대인 청년 폭행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을 공화국의 제 1원리로 주창하고 있는 프랑스공화국이 모든 인종, 모든 종교에 대해

2) 홍세화,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 『한겨레』 (2015년 1월 30일)

3) 여기에서 기술된 사례들은 필자의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의 내용 가운데에서 일부 수정 보완되어 인용되었음을 밝혀둔다.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필자는 샤를리 엡도 사건과 코셔 식품점 테러 사건을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공화국의 삼자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상호 역학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상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쿠아시 형제들이 왜 샤를리 엡도라는 특정 주간지를 공격했는지, 쿨리발리가 왜 코셔 식품점의 유대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실마리를 일부 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들여다보려는 것은 기존 언론이 집중 조명한 프랑스 태생 무슬림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이 글은 한 발 더 나아가 무슬림 이민자와 프랑스 내 유대인 그룹,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 그리고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역사 및 구조적 맥락에서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 사회의 무슬림 차별,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성격의 변화와 함께 프랑스공화국의 홀로코스트 콤플렉스를 일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II. 현대 프랑스 사회의 반유대주의 - 그 성격과 현황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행위와 관련하여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반유대주의의 주체가 백인 극우파에서, 같은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더 이상 기존 주류 백인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의 희생자인 무슬림이주자들이다. 백인이 가해자인 반유대주의와 무슬림이 가해자인 반유대주의 행위는 어떤 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다음의 질문을 해보자. 프랑스 내 무슬림들의 반유대주의 활동은 과연 고전적 의미의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에서 발생한 것인가? 국제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슬림들에 의한 반유대주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근동/중동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가을에 일어난

두 번째 인티파다⁴⁾의 발발로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는⁵⁾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라기보다, 유대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⁶⁾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

이처럼 국제정세와 연관된 반유대주의는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중동전 초기인 1967년 이미 프랑스 대통령 드골(Charles De Gaulle)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관련하여 프랑스 유대인을 비난한 바 있다. 6월 전쟁 당시 드골은 프랑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고, 1967년 11월 27일 개최된 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은 “엘리트 민족이고 ... 오만하다”고 지적하였다.⁸⁾ 드골의 이와 같은 언급으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는 유대인의 입장과 반유대주의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토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몇몇 유대인 비평가들은 드골의 코멘트가 상투적인 반유대주의를 합법화시켰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한 그룹의 지식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판단은 욕설에 가까우며, 반유대주의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수세기에 걸친 대량학살과 수백만의 학살을 그들이 정당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동적이다.”⁹⁾ 이스라엘 만국연합(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이 발행하는 유대 저널 『레 누보 카이에(Le Nouveaux Cahiers)』도 드골의 발언과 관련된 사설에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

4) 인티파다(intifada)는 봉기, 반란, 각성 등을 뜻하는 아랍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연합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지에서만 살게 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1차 인티파다는 1987년, 2차는 2000년 9월 발생했다.

5) Nicolas Weill, *La République et les antisémites* (Paris: Grasset, 2004), p. 15.

6) Alexis Rosenbaum, *L'antisémitisme: thèmes & débats* (Paris: Bréal, 2006), p. 91.

7) Philippe Ariès et Georges Duby (dir.), 김기림 역, 『사생활의 역사: 5.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새물결, 2006), 689쪽.

8) Paula E. Hyman, *The Jews of Modern Fr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 201-202.

9) *Le Monde*, 2 décembre 1967.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프랑스 국가, 프랑스 민족에 속하는 것과 이스라엘과 연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고 선언했으며, 그 이유는, “프랑스의 다원적 공존은 현실이고, 다원적 공존을 부인하는 것은 프랑스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⁰⁾

드골의 ‘반유대주의 발언’이 근동/중동정세와 관련되었듯이 오늘날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무슬림 이주자들의 반유대주의 행위도 중동정세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반유대주의가 결코 프랑스 정치 생활에서 없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1970-80년대까지는 적어도 반유대주의 폭력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지는 않았다.¹¹⁾ 반유대주의 폭력행위는 무슬림 이민자의 2-3세대가 성장하여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는 분명 과거의 반유대주의 행위와는 달랐다.¹²⁾

그렇다면, 오늘날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행위’는 어떻게,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적 인종주의가 부정되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처벌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래 프랑스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비해 2003년은 3배 반 정도 증가하였다. 비록 이러한 현상이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할지라도, 프랑스에서는 이 현상이 특히 새롭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종주의 활동에 폭력행위가 수반되기도 하였다.¹³⁾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적 발언은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편이다. 2000

10)Hyman, *The Jews of Modern France*, pp. 201-202.

11)*Ibid.*, pp. 209-210.

12)Pierre-André Taguieff, *La Nouvelle Judéophobie* (Paris: Mille et une nuits, 2002)

13)La documentation Française, *Regards sur l'actualité: Racisme et anti-sémitisme*, 305(novembre 2004), p. 5.

년대 들어 이는 학교에서 새로운 현상이 되었는데, 특히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그러하다. 유럽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유대공동체가 존재하는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통계로 보면, 특히 2000년 이래 반유대주의 활동이 급증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반유대주의 활동의 주인공들이 줄곧 극우파들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반유대주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이 도시 근교의 젊은이들이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을 국제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동정세의 불안과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¹⁴⁾

이처럼 2000년대 들어 반유대주의는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의 주요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형태(폭력, 위협, 언어 등)의 반유대주의 활동을 합쳤을 때 그 빈도수는 2000년에 743건, 2002년에 932건이었다. 2001년에는 216건, 2003년에는 588건으로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04년에 들어서는 전반기에만 510건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2000년 이래 발생한 현상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1990년대와 비교할 때 엄청난 증가, 예를 들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13배, 1997년과 2000년 사이에만 8배 이상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여기에 反마그레브인 포함)가 1990년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그 경향이 2000년 들어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와 비교해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완전히 다수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반유대주의 활동이 다른 형태의 인종주의에 비해서 2.4배나 많았다.¹⁵⁾

이를 더 구체화해보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주요 희생자가 유대인이었다. 2000년에는 82%, 2002년에는 71%, 2003년에는 72% 인 반면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 1/3 정도였을 뿐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고착되는 한편 폭력행위도 심화되는 것을

14) Michel Winock, *La France et les juifs: De 1789 à nos jours* (Paris: Editions du Seuil, 2004), p. 351.

15) La documentation Française, *Regards sur l'actualité*, p. 10.

볼 수 있다.¹⁶⁾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언행들은 새로운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발 두아즈(Val d’Oise) 도(道)의 빌리에-르-벨(Villiers-le-Bel)에 있는 레옹 블룸(Léon Blum) 중학교에 다니는 14세의 여중생이 일부 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폭력과 모욕을 당했다고 그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녀는 경찰 수사관에게 방과 후, 그녀의 친구 한 명과 집에 가다가 이 문제의 학생들로부터 다리를 폭행당하고, 반유대주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가자(Gaza)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폭격행위와 관련된 사건이었다.¹⁷⁾ 이 보다 앞서 2000년 가을에 일어난 두 번째 인티파다 이후,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학교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2003년 11월 18일 세느-생-드니(Seine-Saint-Denis) 도(道)의 가니(Gagny)에서 발생한 유대인 학교 메르카즈 아토라(Collège-Lycée juif Merkaz Hatorah) 방화사건을 들 수 있다.¹⁹⁾

위의 구체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무슬림인 경우가 다수이며, 그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많다는 것은 무슬림 가해자 비율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유대주의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을 통계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로서도 증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중동정세의 불안과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에

16) *Ibid.*, p. 11.

17) Stéphane Jourdain, “Agression antisémite à Villiers-le-Bel: 4 collégiens mis en examen”, AFP du 9 janvier 2009 in <http://fr.news.yahoo.com/2/20090109/tfr-agression-antisemite-villiers-le-bel-f56f567.html> (검색일: 2009년 1월 17일)

18) Nicolas Weill, *La République et les antisémites* (Paris: Grasset, 2004), p. 15.

19) Winock, *La France et les juifs*, pp. 351-352.

대한 혐오라기보다, 유대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²⁰⁾ 자신들의 ‘형제’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증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는 반이스라엘적 성격을 띠며, 커다란 의미에서의 반유대주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프랑스의 무슬림이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쿨리발리가 왜 코셔 식품점을 공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단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현대 프랑스 사회의 반유대주의 - 논쟁 속의 사건들

이번에는 샤를리 엡도가 2008년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시네(Siné)라는 기사를 해고한 사건을 추적해보자. 우리는 이를 통해 샤를리 엡도가 모든 대상을 성역 없이 비판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 이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한계와 함께 프랑스 공화국의 홀로코스트 콤플렉스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2008년 7월 샤를리 엡도의 만평가인 시네(Maurice Sinet, *Alias* Bob Siné)가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 차남의 약혼문제를 비판하였는데, 그것이 반유대주의 논쟁으로 비화된 일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10일 뇌이-쉬르-센느(Neuilly-sur-Seine) 시청에서 장 사르코지(Jean Sarkozy)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는 전자유통 재벌 다티그룹(Darty)의 상속녀 제시카 스바운-다티(Jessica Sebaoun-Darty)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같은 해 6월 약혼했을 때 나온 기사 한 컷 때문이었다. 이 약혼녀는 유대인이었고,²¹⁾ 장래 남편이 될 장 사르코지는 유대교로 개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평가 시네에게는 유대교로의 개종을 앞둔 장 사르코지의 행보가 탐탁지 않아 보였고, 그는 7월 2일자 시평에서 “장 사르코지는 유대인이자 다티 창업자의 상속녀인 약혼녀와 결혼하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는, “

20) Rosenbaum, *L'antisémitisme*, p. 91.

21) 프랑스의 유대인은 오늘날 대략 53만-70만 정도로 추정된다. Ariès et Duby, 8집, 『사생활의 역사: 5.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650쪽.

이 젊은이는 인생을 잘 살아가겠군!”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하나로 시네는 자신이 소속된 신문 샤를리 엡도에서 해고되었다.²²⁾ 반유대주의적 글을 썼다는 이유에서였다. 해고의 주체는 이 신문의 편집인인 필립 발(Philippe Val)이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언론계를 분열시켰다. 결국 많은 기사와 논단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르 몽드』에는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Bernard-Henri Lévy), 『르 피가로』에는 평론가 알렉산드르 아들러(Alexandre Adler), 『리베라시옹』과 『누벨옵(Le Nouvel Observateur)』에는 각각 로랑 조프랭(Laurent Joffrin)과 드니 올리비엔느(Denis Olivienne) 등이 이 주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²³⁾

신문 만평의 베테랑인 시네는 사실 그간 모든 종교와 권력을 비꼬면서 세상 물정을 알리는 데 공헌해 왔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늘 도발자이자 우상 파괴자였다. 아나키스트로서 反교권주의자이자, 反군국주의자이며,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자였다. 79세의 이 자유주의자는 독설의 천재로 FLN(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을 위해 일한 적이 있었으며, 쿠바 혁명을 동경했다.²⁴⁾

1992년 재발행 된 이후, 샤를리 엡도는 매주 시네의 시평을 발행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은 2008년 7월 8일 터졌다. 『누벨옵』의 기자인 클로드 아스콜로비치(Claude Askolovitch)가 시네의 시평을 RTL 라디오 방송에서 재인용했다. “다른 데가 아닌 샤를리 엡도라 불리는 신문에 반유대주의 기사가 있다.”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해당 신문의 편집인인 필립 발은 장 사르코지의 측근에 의해 샤를리 엡도가 고소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인종주의가 주요 사훈(社訓)인 샤를리 엡도가 반유대주의 때문에 법정 앞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필립 발은 시네가 사과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렇지만 시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필립 발은 7월 15일 시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필립 발이 나를 해고시키기 위한 지 2년이 되었다.” 시네는 자신의 글이 反유대주의적이라는 평가 자체를 논박하며, 클로드 아스콜로비치를

22) *Le Monde*, 28 août 2008.

23) *Le Monde*, 30 juillet 2008.

24) Bernard Langlois, “L’affaire Siné” in *Politis* (24 juillet 2008)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시네, 그리고 그를 해고시킨 편집인 필립 발의 입장은 어떠한가? 필립 발은 “나는 시네가 이야기하는 것에 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샤를리 엡도에서는 나와 다른 입장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의 표현의 자유는 인종차별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특히 금지하는 사훈에 분명 거스른다.”고 강조하였다.²⁵⁾ 시네가 분명 금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샤를리 엡도가 7월 16일 발행할 성명서에서, 필립 발은 “장 사르코지와 그의 약혼녀에 대한 시네의 발언은 사생활을 건드린 것 외에, 유대교로 개종할 것이라는 잘못된 루머를 퍼뜨린 것이다. 그러나 특히 그 발언은 유대교로의 개종과 사회적인 성공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발언은 용인될 수도 없고, 법정에서도 옹호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²⁶⁾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인종적 증오를 부추겼다고”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 연맹(*la Ligu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Licra*)이 시네를 고소하였다. Licra의 변호사인 알랭 자쿠보비츠(*Alain Jakubowicz*)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시네에게 면책특권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과 디유도네(*Dieudonné*)가 동일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이 일로 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²⁷⁾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²⁸⁾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사실, 시네는 4년 전 한 집회에서 유대식 이름에 대하여 야유한 일 때문에 고소된 적이 있었으며, 23년 전에는 반유대주의 언행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있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프랑스 유명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Bernard-Henry Lévy*),²⁹⁾ 문화부 장관

25) *Challenges.fr*, 15 juillet 2008.

26) *Ibid.*

27) *Le Nouvelobs*, 9 septembre 2008.

28) *Ibid.*

29) *Le Monde*, 22 juillet 2008.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그리고 역사학자 알렉상드르 아틀레르(Alexandre Adler), 과거 법무부장관이자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정치인 로베르 바덴테르(Robert Badinter),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문학가인 엘리 비젤(Elie Wiesel),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파리시장 등 19명의 유력 인사들이 『르 몽드』에서 시네를 해고한 필립 발의 입장을 지지했다.³⁰⁾ 이들은 7월 31일자 『르 몽드』에서 시네의 과거 행적을 지적했다. 1982년 8월 9일 점심시간에 파리 시내 대표적 유대인 구역인 마레 지역에서 일어난 <로지에 거리의 학살>(Fusillade de la rue des Rosiers)³¹⁾에 관하여 시네가 라디오 카르본느 14(Radio Carbone 14)에 나와 발언한 반유대주의적 행위를 상기시킨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탄을 퍼부은 이래 반유대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반유대주의자이다. 그것을 고백한 것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벽에다가 나치의 십자가를 그려 넣을 것이다.... 정말 진저리가 난다. 나는 유대인들이 친(親)팔레스타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포에 떨며 살기를 원한다.”³²⁾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 사과하고 1985년 죄 값을 치렀다.³³⁾

시네는 ‘2008년도의 사건’(l’affaire Siné)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였다. “나는 단지 장 사르코지가 기회주의적으로 개종하는 것을 비난하였을 뿐이다. 만일 그가 이슬람국가 대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무슬림으로 개종했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가톨릭신도의 딸이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가톨릭에게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고 시네는 설명했다.³⁴⁾ 시네의 입장을 지지하며 그의 청원에 서명한 사람의 수는 사건 초기 며칠 만에 3,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월 2일에는 1만 명을 돌파하였다.³⁵⁾ 여기에는 같은 만평가인

30) http://fr.wikinews.org/wiki/Charlie_Hebdo:_Sin%C3%A9_s%C3%A8me_sa_zone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31) http://fr.wikipedia.org/wiki/Fusillade_de_la_rue_des_Rosiers (검색일: 2015년 10월 4일)

32) *Le Monde*, 31 juillet 2008.

33) *Le Monde*, 30 juillet 2008.

34) *Challenges.fr*, 15 juillet 2008.

35) *Le Monde*, 30 juillet 2008.

플랑튀(Plantu), 철학교수인 다니엘 벤사이드(Daniel BenSaïd), 유대계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드가 모랭(Edgar Morin), 극좌파 정치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회장을 지낸 유대계 의사 로니 브로망(Rony Brauman), 주거권 연맹(Association DAL, Droit au logement), 여성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지젤 알리미(Gisèle Halimi), 작가이자 언론인인 질 페로(Gilles Perrault), 배우이자 인권연맹 위원인 기 브도(Guy Bedos) 등이 있다.³⁶⁾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네는 9월 10일 수요일 새로운 풍자 주간지를 창간하였다. 《시네 엡도(Siné Hebdo)》³⁷⁾가 그것이다. 인터넷에서는 8월 27일 《시네 후원(Soutenir Siné)》이 발진되었다. 여기에 서명한 16,700명의 서명자에게 재정지원을 호소하였다. 이 신문은 시네가 1962년에 발행했던 신문의 현대판인데, “어떤 것도 준수하지 않고, 어떠한 타부도 없을 것이다.”³⁸⁾

이렇게 볼 때, 시네의 비평을 정말로 反유대주의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샤를리 엡도는 종교와 권력 등 그 모든 것을 비꼬며 비판해 왔다고 자부해 오지 않았는가? 이 기사 또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고, 유대종교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 더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게다가 홀로코스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가 그 성격이 모호한 이 사건을 反유대주의 사건으로 단정 짓고, 몰고 갔다고 판단된다.³⁹⁾

프랑스 사회의 홀로코스트 콤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더 예로 들어 보자. 2008년 6월 한 유대인 청년이 파리 시내 길거리에서

36) *Ibid.* 8월 2일에는 서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http://fr.wikinews.org/wiki/Charlie_Hebdo:_Sin%C3%A9_s%C3%A8me_sa_zone (검색일: 2009년 10월 4일)

37) 현재에는 주간지에서 월간지로 바뀌어 있다. <http://www.sinemensuel.com/>

38) *Le Monde*, 28 août 2008.

39) 홍세화씨가 『한겨레』에 특별기고한 「나는 샤를리다!의 빈자리」에서 그가 인용한 이스라엘 출신 영국 지식인 길라드 아츠몬의 샤를리의 친유대적 성향 비판이나, 이스라엘 역사학자 솔로모 산드의 글도 시네의 사례를 뒷받침한다. (2015년 1월 30일)

유대인 특유의 모자인 키파를 쓰고 지나가다 아랍계 및 흑인 청년에게 구타당하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특별하게 취급되었으며, 금세 반유대주의 논쟁에 불을 당겼다. 만일 맞은 자가 아랍계 청년이었다라도, 이 사건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인종차별 행위의 일환으로 부각되었을까?⁴⁰⁾

『르몽드』에 따르면, 유대 청년은 우연히 아프리카 출신 청년 30여명과 19구(區)의 프티 거리(rue Petit)에서 조우했고, 이들에게 집단으로 두들겨 맞았다.⁴¹⁾ 이 버전에 따르면, 이 유대 청년은 키파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임이 드러나 폭행을 당했을 것이고, 이것이 유대단체들과 그 청년의 아버지가 라디오 방송인 RTL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반유대주의 행위로 단정 짓고,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사회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유대공동체 조직들은 이 폭력에 반유대주의적 동기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어야 할 정치인, 정부 관료들도 이들의 견해에 매우 쉽게 동조했다. 이스라엘 공식방문을 마치고 일요일 저녁(6월 22일) 귀국한 사르코지 대통령도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자마자 자신의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모든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에 맞서 투쟁할 결연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 또한 이 폭력을 비난했으며, 미셸 알리오-마리(Michèle Alliot-Marie) 내무부장관과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법무부장관,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제1야당인 사회당 모두 인종주의적 폭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⁴²⁾ 제라르 가셰(Gérard Gachet) 내무부 대변인 또한 피해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유대공동체에 대한 지지와 반유대적 폭력에 분노를 표현⁴³⁾ 함으로써,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적 사건으로 단정 지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른 버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대청년 조직과 북아프리카

40) Mateo Alaluf, “Judéophobie,” *Politique*, 36 (octobre 2004) <http://politique.eu.org/archives/2004/10/135.html> (검색일: 2009년 10월 5일)

41) *Le Monde*, 22 juin 2008.

42) *Ibid.*

43) *Libération*, 22 juin 2008.

청년조직 사이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에 불과했다. 이 폭력은 ‘본격적인 전투’ 직전에 일어난 하나의 다름일 뿐이라는 것이다.⁴⁴⁾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두 번째 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찰 측 증언”⁴⁵⁾ 이 이러한 버전을 제시하였다. 왜 이들은 신원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가?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바로 反유대주의에 동조하는 자로 낙인찍힐 위험 때문은 아닌가? 이러한 것이 오늘날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프랑스의 사회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단순 폭력사건일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사후(事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는 루디 하다드(Rudy Haddad)라는 이름의 17세 청년으로 이날 시나고그에 가던 길이었다.⁴⁶⁾ 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오후 1시 30분, 19구 구청 근처에서 흑인청년들과 유대청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었고, 4시 30 분에는 같은 구역에서 20세의 유대청년 한 명이 친구 집에 가다가 공격을 당하였다. 이러한 법률자료를 검토해 본다면, 이 사건은 조직들 사이의 투쟁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⁴⁷⁾ 게다가 희생자인 루디는 2007년 12월 파리지역 시위 당시 ‘무력에 의한 폭행상해’로 이미 경찰에 의해 감치(監置)된 적이 있었다.⁴⁸⁾ 한 언론은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유대인 개인에 대한 공격과는 무관하였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⁴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공화국의 라이시테원칙에 따라 종교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프랑스 정부가 왜 유대인 조직의 주장과 궤를 함께하느냐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내무부장관인 미셸 알리오-마리는 이 사건과 연계하여 “공화국의 가치를 무시하는 인종주의, 反유대주의, 외국인혐오주의의 모든 언행에 대하여 결연히

44) *Le Monde*, 22 juin 2008.

45) *L'Express*, 23 juin 2008.

46) *Le Monde*, 23 juin 2008.

47) *Ibid.*

48) *Le Figaro*, 23 juin 2008.

49) *L'Express*, 23 juin 2008.

투쟁할 것”을 재차 확인⁵⁰⁾한 바 있다. 이러한 언사는 분명 반유대주의 행동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단호한 경고를 담고 있는 한편, 이 사건을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단정 짓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기 보다 친유대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공동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프랑스 공권력이 이처럼 단호할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종교에 대한 중립적 원칙을 강조하며 최근의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의 ‘과도한 언사’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대청년 사건에 대한 원로 정치인 장-피에르 슈벤느망(공화국시민운동Mouvement Républicain et Citoyen 의장, 사회당 정권 하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장관 역임)의 비판이 그것이다. 그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반유대주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동체주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아첨”이라고 비난하였다. 6월 23일, LCI 방송에서 슈벤느망은 “대통령이 모든 종파에 대해 예외 없이 계속 아첨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⁵¹⁾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공화국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대청년이 공격을 당해 부상 입은 것에 대해 “수년 전 이래로, 이 구역은 4개의 조직, 즉 흑인, 마그레브인, 유대인 그리고 투르크인 조직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현 공화국의 주소이다.” “이민자들이 과도하게 특정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우리가 공유하는 공화국의 시민성은 결국 말살되게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첨하는 것을 나는 비난한다.”라고 슈벤느망은 덧붙였다.⁵²⁾

이처럼 프랑스 사회는 한 유대 청년의 폭행사건을 두고 반유대주의 및 공화국의 정체성에 관한 많은 논쟁을 펼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유대 청년이 폭행을 당한 것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한 유대 청년을 폭행했느냐가

50) *Le Monde*, 23 juin 2008.

51)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 연구』, 14호(2006), 245-247쪽 참조.

52) *Chevenement.fr* -le blog de Jean-Pierre Chevènement (검색일자 : 2008년 10월 4일)

명확히 규명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샤를리 엡도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의 대표적 소수자들인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공화국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다. 필자는 이미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차별 및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글을 통해 논의한 적이 있다.⁵³⁾ 프랑스와 이슬람의 관계는 단순히 푸아티에 전투(732년)를 막연하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인 프랑수아 1세 이래,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왕립학교(현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에 아랍어 교수를 채용(1530년)한 일이나 루이 14세 때인 1669년에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가 오스만 제국과의 외교 및 무역교류에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이날코(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이하 INALCO, 국립동양어 및 문화 학교)의 전신인 청소년 언어학교(통역학교)를 세운 일,⁵⁴⁾ 1795년에 정식으로 INALCO를 세운 일 등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이슬람과의 교역에 많은 힘을 기울일 정도로 이슬람과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였다. 하지만, 프랑스가 1830년 알제리를 식민화하면서 자신들과 종교 문화가 다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와의 전쟁(1954-1962)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 내에서 일어난 전쟁은 알제리 농촌을 피폐화시켰고, 공업기반을 황폐화시켰다.⁵⁵⁾ 일자리를 잃은 자들 상당수는 자연히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식민지

53)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이민자 통합문제」 참조.

54)Emmanuelle Talon, “L’arabe, une « langue de France » sacrifiée”. *Le Monde Diplomatique* (Oct., 2012)

55)Benjamin Stora et Emile Temime, “L’immigration algérienne”, in Laurent Gervereau, Pierre Milza et Emile Temime(di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au XXe siècle* (Paris: Editions d’Art, 1998), p. 128 et p. 130.

모국이었던 프랑스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1962년 알제리가 독립된 후, 독립된 알제리 정부와의 여러 차례 회담을 거쳐 프랑스는 알제리인들의 프랑스로의 이주를 제한하려 하였다.⁵⁶⁾ 테러, 고문, 학살 등 전쟁 중에 일어난 상호간의 갈등, 특히 1961년 10월 17일의 사건, 이민자 2세들의 각종 테러,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⁵⁷⁾ 등으로 프랑스의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는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의 종식 이후 발생한 구(舊)유고 내전,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다양한 이슬람권과의 전쟁, 9.11 테러 사건들은 프랑스에서도 무슬림들을 문명충돌의 희생자로 보기보다는 테러리스트로 보기에 충분했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이유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국제환경은 무슬림이주자들을 더욱 곤혹스런 처지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프랑스의 유대인 문제이다. 프랑스는 앞서 설명했듯이 라이시테를 원칙으로 하는 공화국, ‘단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공화국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972년 7월 1일 채택된 플르방 법(*loi Pleven*)⁵⁸⁾을 한층 강화한 1990년 게소 법(*loi Gayssot*)⁵⁹⁾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경우, 즉 홀로코스트의 규모나 실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⁶⁰⁾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바 있다. 이 두 법은 시민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틀인 정치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정 소수인종,

56) David Assouline, Mehdi Lallaoui(dir.), *Un siècle d’immigrations en France: 1945 à nos jours* (Paris: Syros, 1997), p. 23.

57)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이민자 통합문제」 참조.

58) 특정 종족, 민족, 인종, 종교에 소속되었다는 혹은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가해진 차별, 증오 및 중상에 대하여는 1년의 징역이나 30만 프랑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http://www.phdn.org/negation/gayssot/pleven.html> (검색일: 2009년 4월 15일)

59) 게소법을 포함한 일련의 ‘기억의 법’(les lois mémorielles)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용우, 「식민주의의 부메랑과 역사학-프랑스 2005년 ‘2월 23일 법’을 둘러싼 논쟁」, 『서양사론』, 115호(2012)

60) Ce que l’on désigne communément par « négationnisme », à savoir la contestation de l’ampleur ou de la réalité du génocide juif, tombe clairement sous le coup de cette loi. <http://www.phdn.org/negation/gayssot/24bis.html> (검색일: 2009년 4월 15일)

종교, 문화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한 개인 이외의 모든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주의원칙과는 모순된다.⁶¹⁾

필자는 프랑스가 그들이 자부하듯 엄격한 의미에서 라이시테를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며, 공정한 심판자가 되지도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그들의 식민지 경험과 무슬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이슬람혐오, 그리고 비시 정부 시기 프랑스 국적 유대인을 프랑스인 스스로가 강제수용소로 보냈다는 죄책감 등의 업보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의 대책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강화나 아니면 반대로 라이시테의 철저한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제제기로 돌아가 보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왜 샤를리 엡도를 공격하였으며, 코서 식품점에서 유대인을 살해하였는가? 그 원인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는 다문화주의 혹은 라이시테 강화 등 단순히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 이민자 차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문제, 더 나아가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역사부인(négationnisme) 문제,⁶²⁾ 그리고 ‘단일한 공화국’을 추구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까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강대학교, dahn@sogang.ac.kr

주제어(Key Words):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프랑스공화국(the French Republic), 반유대주의(Anti Semitism), 홀로코스트(Holocaust)

(투고일: 2015. 11. 05, 심사일: 2015. 11. 15, 게재확정일: 2015. 11. 19)

61) Karen Bird, "Racist Speech or Free Speech? A Comparison of the Law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Politics*, 32, 4(2000), pp. 399-418;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 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2004), 358쪽에서 재인용.

62)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신동규, 「프랑스 부정주의의 논리-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식과 해석」, 『역사와 문화』, 28호(2014)

국문초록

‘샤를리 엡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
: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박 단

본 논문은 ‘샤를리 엡도 사건’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프랑스 내 소수자들인 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간 샤를리 엡도 사건이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의 자유,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 무슬림 이주민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유대인’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중심으로 재해석 해보려 시도하였다. 필자는 샤를리 엡도 사건과 같은 테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주의 채택 혹은 라이시테 강화 등 단순히 프랑스 내 무슬림 이민자문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보다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이슬람과 관련된 증동문제, ‘단일한 공화국’을 추구하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오랜 치부인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강박관념 또한 새롭게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Charlie Hebdo* Incident and Minorities in France:
Muslims, Jews, and the French Republic

Dahn Park

This article deals with Muslims and Jews as minorities in France and with the French Republic in order to analyse the cause of the *Charlie Hebdo* incident. The debate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versus respect for other religions was among the most prevalent explanations offered by the mass media, along with issues related to second-generation Muslim immigrants of Maghreb descent in France. This article tries to reinterpre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is incident considering Muslims and Jews as minorities in France. I argue that French society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domestic problems, such as its multiculturalist policies and the enforcement of laïcité principle in schools, but als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order to prevent future incidents such as the *Charlie Hebdo* attack. I emphasize that the French government felt remorseful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Holocaust and that this remorse, it led to French society's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which in turn seems to have caused these incidents.

■ 논문 ■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On échoue toujours à parler de ce qu'on aime.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데 언제나 실패한다.
Roland Barthes(1984)

김 주 은

I. 사랑을 말하는 것의 불가능성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왜 어려운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데 언제나 실패한다.”¹⁾ 사랑 담론은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형성되어왔지만, 그 모든 담론들은 사랑을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사랑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일은 사랑을 지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랑 주변부의 것들, 사랑의 정황들이나 효과들에 의해 대리-설명될 뿐이다. 예컨대 사랑을 형용하기 위해 설렘, 그리움, 환희 등의 정동을 나열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반응들을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화심리학적·생물학적·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사랑을 분석하려 했던 방법론들 역시 사랑의 관행들이나 현상들을 귀납적으로 추론하거나, 인과 관계로 도출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를테면 진화심리학에서 사랑을 번식과 생존 본능에 따른 심리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방식을 귀납적으로 추론한 결과일 뿐, 동성애와 같은 예외적 사례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 생물학이 사랑을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신경화학물질이 분비된 결과로 보고 사랑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반응을 사랑의 원인으로

1) Roland Barthes, “On échoue toujours à parler de ce qu'on aime”, *Le Bruissement de la Langue* (Paris: Seuil, 1984), pp. 333-342.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한편, 회화·음악·영화·문학 등에서 사랑이 대표적인 소재로 등장했던 것은 오히려 사랑의 일반론이 불가능함을 반증한다. 사랑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차라리 대상을 우회적·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에서 성취되기 쉬웠을 것이다. 스탕달(Stendhal)이 『연애론(De L'Amour)』이란 수필집에서 “사랑에 관한 진리를 기록하려 애쓰고 있는데, 여태껏 늘어놓은 이야기들이 모두 쓸데없는 뉘트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두렵”²⁾다고 쓴 것은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사랑에 대한 지적 탐구의 영역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현대 철학의 경우에는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알랭 바디우(Alain Badiou) 등의 사상가들이 사랑을 사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이 자신들의 사유를 개진하는 가운데 종종 사랑의 영역을 등장시킨 이유는 사랑이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오랜 철학적 주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 사랑의 존재론적 위상은 사랑이 의미론으로 포착될 수 없는 장소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획득된다. 사랑은 해석학의 기대 지평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불쑥, 의미 체계를 중지시키면서도 노래한다. 마치 소크라테스(Socrates)의 대화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아토포스(atopos)라고 부름으로써 어떤 장소에도 고정될 수 없는, (의미의) 장소를 결여한 자로서의 지위를 그에게 부여한 것처럼, 사랑 역시 아토포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 욕망의 특수성에 기적적으로 응답하러 온 바로 그 유일자, 단독적 이미지”³⁾, 즉 아토포스적 대상은 어떠한 상징적 도식으로도 분류될 수 없다. 사랑의 무대는 기표가 결여된 텅 빈 공간으로서만 비로소 그 자리를 가지는

2) Stenhal, 권지현 역, 『연애론』 (서울: 삼성출판사, 2007), 68쪽.

3) “Est atopos l'autre que j'aime et qui me fascine. Je ne puis le classer, puisqu'il est précisément l'Unique, l'Image singulière qui est venue miraculeusement répondre à la spécialité de mon désir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매혹시키는 그 사람은 아토포스이다. 나는 그를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 욕망의 특수성에 기적적으로 부응하러 온 바로 그 유일자, 단독적 이미지다)” 강조는 인용자. Roland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aris: Seuil, 1977), p. 43.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의 세계를 살고 있는 한, 사랑이 아무리 존재론적 성격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질화하는 표상들은 결국 기호의 체계 속에서 발견된다. 사랑은 의미화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의미화됨으로써만 재현된다는 필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의 고통은 이러한 패러독스에 의해 야기된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 사유함과 동시에 의미의 형식을 조건으로 삼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사랑의 언표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가? 존재인가? 의미인가?

II. 사랑은 타자-존재를 조우하게 하고

질문을 보다 일상적인 차원으로 바꿔보자.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가치들, 예컨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 아름다움 따위의 성질들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someone)’을 사랑하는가, ‘어떤 것(something)’을 사랑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사랑에 대한 데리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데리다는 사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the who)’와 ‘무엇(the what)’ 사이의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랑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이(거나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거나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역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무엇’을 사랑하는 것 간의 분리와 같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랑의 충실성은 그 간극에 의해 시험 받는다.⁴⁾

4) Amy Ziering Kofman, *Derrida*[DVD] (Jane Doe Films, 2002).

여기서 가장 큰 비극은 어떤 이의 ‘무엇’을 사랑하는 일이 그 대상을 끝없이 상상-오해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당신의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식의 선언이 쉬이 철회되고 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상상이 오해였다고 판명될 때, 그 사랑은 중단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은 그 사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 대상들에 거주하지 않는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라면 이처럼 ‘무엇’을 갈망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기 보단 차라리 욕망이라 불렀을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대개 페티시스트적으로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부분 대상을 욕망한다”라는 라캉의 유명한 명제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사랑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어떤 이의 존재 자체, 즉 타자 고유의 단독성(singularity)에 기꺼이 다가가는 일련의 과정과도 같다. 이때 타자의 단독성은 동일자적 자아로 전체를 환원할 수 없는, 동일자의 논리가 가닿지 못하는 장소로부터 온다. 사랑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설렘, 또는 고통 등의 감정은 ‘당신’이 결코 ‘나’와 동일자일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사랑하는 대상은 늘 타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이렇게 비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 계산 불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사랑의 대상이 언제나 낯선 무엇으로 도래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타자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이방의 것으로서의 타자성⁵⁾을 조우하는 일과도 같다.

레비나스는 “사랑을 이끄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다른 성질이 아니라 상대방의 타자성”이라는 말로 같음이 다름을 흡수해버리지 않는, 타자성을 보존하는 관계 맺기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바디우 역시 사랑은 “하나가 아닌 둘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그 세계는 “동일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차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세계”⁶⁾라고 썼다. 물론 바디우는 더 나아가 사랑이란

5) Emmanuel Levinas,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서울: 다산글방, 2000), 84쪽.

6) Alain Badiou, 조재룡 역, 『사랑예찬』 (서울: 길, 2010), 32쪽.

탈중심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더 무게를 실으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은 차이를 단순히 경험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랑론을 레비나스의 초월적·윤리적 사랑론과 구분 짓지만, 존재의 둘을 하나로 완벽히 융합시키는 낭만적 사랑의 도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한다. 타자를 타자일 수 있도록, 타자를 타자로서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사랑이라 불릴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과도 같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차는 “타자성을 안전하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맨살에 가장 가까이 가는 모험 속에서 내게 포획되지 않는 부재로서의 당신을 하염없이 불러내는 경험”⁷⁾의 연속이다.

이처럼 사랑이 타자-존재와의 조우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불가능한, 아니 오히려 불가능해야만 하는 당위를 제공한다. 사랑에는 합의된 기억이 없다. 또한 사랑은 언제나 새롭게, 다시 쓰이기에 그 시간에는 앎의 축척도, 배움도 없다. 사랑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차라리 지식이라 불려야할 것이다. 지식이야말로 합의된 기억과 앎의 체계 내에서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의 형식들과 그 변천을 인류사적·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할지언정, 본질로서의 사랑에는 역사가 할 것이 없다.⁸⁾ 설령 사랑의 역사가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증언의 역사일 것이다.⁹⁾ 이는 사랑이 타자-존재를 만나는 계기인 탓에, 그래서 사랑을 통해 조우하게 되는 존재가 항상 이방인인 탓에,

7) 김행숙, 『에로스와의 아우라』 (서울: 민음사, 2013), 87쪽.

8) 사랑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예컨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사랑이 순수한 사회적 고안물이라는 가정 하에,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사랑의 유형을 숭고한 사랑·정열적 사랑·낭만적 사랑·문제적 사랑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랑의 재현 양상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다. 루만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랑의 향유 방식들이 사회의 내적 가치를 재해석하는 코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회학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Niklas Luhmann, 정성훈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서울: 새물결, 2009)

9) 본문에서의 증언은 플라톤적 로고스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언술 행위를 뜻한다. 증언은 재현의 틈에서 재현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에서 증언일 수 있다. 따라서 증언은 허구의 모습으로만 증언될 수 있다. 증언은 의미에 난 상처, 즉 외상적 진실(trumatic truth)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증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Jacques Derrida, 진태원 외 역, 『에코그라피』 (서울: 민음사, 2014), 161-189쪽.

그에 대한 경험이 동일자의 언어로는 식별될 수도, 재현될 수도 없는 까닭이다. 각자의 사랑이 모두 다르고, 또 매번 다르게 소모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과 맞닿는다. 사랑의 명명 불가능성과 비밀관성은 사랑을 모호한 무엇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채로, 그저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러한 증언은 타자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 유의미해진다.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가 <헛소리 1: 어리석은 처녀(Délires I: Vierge Folle)>라는 제목 아래 “사랑은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¹⁰⁾라고 썼을 때, 재발명되어야 하는 것을 타자에 대한 발명 그 자체라 읽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타자와의 만남 이전에 수립된 의미 체계에서는 재현될 수 없었던 타자-존재를 발명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발명은 타자-존재를 반복해서 증언하는 일을 통해 끊임없이 재발명됨으로써 사랑을 지식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동일자의 논리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한다. 마치 데리다가 환대란 (어떤 지식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우리는 환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해야)하는 것이다.¹¹⁾

III. 동일자의 제국에서 사랑하기¹²⁾

1.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10) Arthur Rimbaud, “l’amour est à réinventer.”, *Une Saison en Enfer* (Bruxelles: Alliance typographique, 1873), p. 22.

11) Jacques Derrida,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103쪽.

12) 본 장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제 2장 ‘연애의 자본주의적 재생산과 새로운 연애 담론’, 제 3장 3절 ‘감정분석서비스와 커플애플리케이션, 사랑 검증 시스템’, 제5장 1절 ‘연애 상품의 소비 주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내용 중 일부분을 요약 및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 김주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연애 담론과 양식: 연애 상품의 체계와 테크놀로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4), 18-35쪽, 56-63쪽, 100-116쪽.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랑은 어느새 사랑을 일관된 지식의 대상으로 환원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의 사랑에는 타자와의 만남이 있는가? 작금의 관계 맺기는 안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 타자가 나의 존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 타자에 의해 나 자신이 타자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타자의 타자성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소거하려는 조치로 이어진다. 특히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타자를 가족 집단으로 맞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동일자의 제국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랑만을 허락한다. 가족은 동일성으로 뭉친 가장 최소 단위의 집단이며, 그 가운데에는 혈육과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낭만적 사랑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서 사랑과 성, 결혼의 합일을 그 골자로 한다. 낭만적 사랑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 결혼은 두 가문의 전략적 결합이라는 목적 아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다.¹³⁾ 이러한 결혼 제도가 일반적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던 사회에서 결혼과 사랑은 쉽게 분리되곤 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이 개인의 삶에 어떤 서사(narrative)의 관념을 도입”¹⁴⁾하면서부터 사랑과 결혼은 융합되기 시작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사랑과 결혼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가족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랑의 현실적인 조건이자 장애가 되었다.

바디우가 정치와 국가의 관계를 사랑과 가족의 관계에 빗대면서 사랑의

13) 따라서 결혼은 오늘날 시장과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대부분을 대신했다. 물자와 사람의 생산과 분배를 조직했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맹 수립을 원활하게 도왔으며,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한 분업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性)적인 관계에서부터 재산상속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했다. Stephanie Coontz, 김승욱 역, 『진화하는 결혼』 (서울: 작가정신, 2009), 21-28쪽.

14) Anthony Giddens,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2003), 78쪽.

지평에 가족이 존재하는 것은 사랑을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사랑의 관리를 사회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지점에서 옳다.¹⁵⁾ 가족 제도 내에서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부 환대의 법칙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자와 받아들일 수 없는 타자를 경계 짓는 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랑은 대개 부정되거나 가족의 경계 밖으로 추방된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영토는 그 영토를 중심으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타자를 선별하는데, 이때 타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가족의 법에 순응할 수 있는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의미화될 수 있는가 등이다. 마치 국가가 타자에게 우리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이방인의 자격을 묻는 것처럼, 가족은 타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청한다.

한편, 타자가 가진 환대의 자격을 보다 적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타자의 모호성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 역시 강구되고 있다. 낭만적 사랑이 이성을 중요시하는 근대적 사랑의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근대 이후, 이성(reason)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 존재의 합당한 근거(reason)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근대적 합리성은 감정을 이해하고 협상하게 하는 근본적 문화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고쳐 쓰게 되는데, 그 결과 사랑의 성격 역시 예측 가능한 것, 계산 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변모한다.¹⁶⁾ 타자의 모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방법들이 대개 상품의 형식으로 판매된다. 사랑 장치라 불려도 좋을 이 상품들은 사랑을 시장가치라는 거대한 동일자의 촘촘한 교환 관계식으로 끌어온다.

15) Badiou, 『사랑예찬』, 66쪽.

16) 근대적 합리성의 중심에는 특히 '계산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자리잡고 있다. 자연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근대과학이라면, 그런 과학을 통해 신비한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 근대적 이성이었으며, 그런 계산을 통해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 근대적 생활방식이다. 즉 근대적 합리성은 계산과 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통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본주의 사회와 사랑 장치

자본주의 사회는 존재 일반을 시장경제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교환과 거래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삶의 영역들은 점차 시장경제 안에 포섭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에 따라 계량화될 수 없었던 부분들마저도 동일자의 논리를 따르는 화폐의 추상적 보편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그 결과 타자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꾸려나가는 연대의 방식과 성격이 자본제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사랑과 관련된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예증이다.¹⁷⁾ 이러한 사랑 장치들은 인간이 몰입하는 감정의 영역, 개별적인 사랑의 경험을 자본의 동질적 확장의 범주 안에 가둔다. 연애상품의 소비자들은 자본의 보편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욕망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 경제적 객관성이라는 가치 기준을 내면화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애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들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으며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객관성의 영역으로 소환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랑에는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즉 타자의 타자성이 가능한 삭제된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아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미틱>의 광고 문구는 타자-존재를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17) 필자는 이처럼 상품화된 사랑 장치를 ‘연애상품’이라 명명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연애를 보조·보완하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상품의 역할은 ‘연애 기술 교육’, ‘만남 주선’, ‘관계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각 기능에 따라 ‘연애전문교육시스템(연애코칭)’, ‘소셜네트워크데이팅(온라인데이팅서비스)’, ‘감정분석서비스’ 등으로 상품 유형이 구분된다. 연애전문교육시스템은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찾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이며, 소셜네트워크데이팅은 온라인을 통해 커플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한국에서는 <이츄>, <이음> 등이 대표적이다. 연애상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제1장 3절 ‘연구 대상과 방법’을 참조. 김주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연애 담론과 양식: 연애 상품의 체계와 테크놀로지」, 11-14쪽.

가르쳐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¹⁸⁾ ‘고통 없는 사랑하기’는 ‘타자를 삭제함으로써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사랑하기’라고 고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 없는 사랑을 매개하는 연애상품들은 증여와 답례라는 교환관계식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서 교환되는 것은 데리다가 ‘무엇(the what)’이라 지칭했던 것들, 이를테면 외모, 집안, 학벌, 연봉, 직업 등의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연애자본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연애시장에서 이들이 교환되는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마치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처럼 개인의 고유성이 교환가치가 되며, 그 가치들의 교환은 등가거래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높은 연애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그에 준하는 교환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세속적 통념은 연애상품을 통해 정식화된다. 매칭서비스를 통해 맺어진 커플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여성의 신장이 1cm 커질수록 남성의 연봉이 62만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은 연애자본의 교환관계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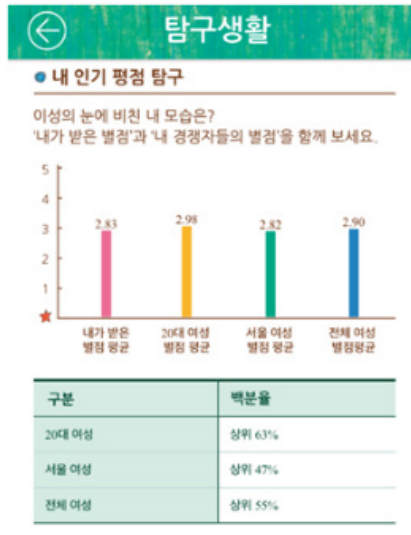
18) <미틱>은 온라인데이팅서비스 중의 하나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만남을 주선해주는 매칭 서비스이다. 바디우는 『사랑예찬』에서 <미틱>의 광고 문구를 지적하며 “사랑의 안전한 개념을 부각시키”는 “프로파간다”라 비판한 바 있다. Alain Badiou, 『사랑예찬』, 16쪽. 온라인데이팅서비스 산업은 미국에서는 1995년부터, 유럽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동되어 현재는 거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을 넘어섰으며, 2009년-201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기혼자 7000명 중 약 17%가 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19) 김용학과 윤효영은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시장에서의 ‘교환이론’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인상등급이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여성의 경우 ‘매우 낮음’으로 분류된 여성에 비해 소득이 755만원 가량 높은 남성과 매칭에 성공했다. 김용학, 윤효영, 「결혼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한국인구학』, 제36권, 3호(2010), 72쪽.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사진 1] <이추> 매칭 이성의 프로필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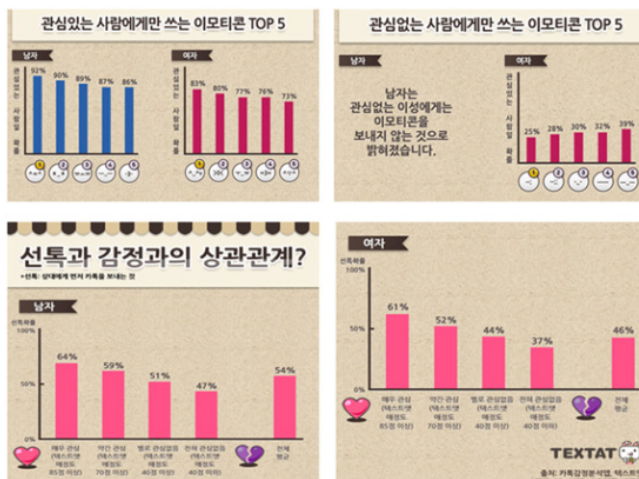
[사진 2] <이추>의 매력진단서²¹⁾

매칭된 이성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살펴보면 연애상품에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류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고유성은 사진·나이·사는 지역·직장·학교·종교·혈액형·신장·체중·음주와 흡연 유무 등의 몇 가지 항목들로 환원되고, 상품을 통해 제시된 일정 규격에 따라 틀지어진다. 연애상품이 제공하는 교환의 장에선 어떤 사람(someone)이 어떤 것들(something)로 기표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표들은 연애상품의 소비자들에 의해 상호 평가되어 점수화·계급화되기도 한다. 이로써 연애상품은 개인의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치환하는 장치이자, 동시에 연애자본들 간의 사회적 가치를 견주면서 어느 한쪽이 '손해'보지 않는 합리적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20) <이추>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자가 직접 캡처. (검색일: 2013년 10월 27일)

21) 타인들로부터 평가된 이용자의 인기를 백분위로 표시해주는 <이추>의 '매력진단서' 화면. <이추>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자가 직접 캡처. (검색일: 2013년 10월 27일)

한편 오늘날의 사랑에서 ‘손해’라는 단어가 비단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노력, 정성, 관심의 범주에서도 해당된다. 사랑을 일종의 감정적 에너지라고 간주했을 때, 에너지의 수치 균형이 맞는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다. 마음의 쓰임, 즉 사랑을 하는 동안 소모되는 감정의 양을 수치화, 계량화하는 상품이 탄생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감정분석서비스라고 불리는 <텍스트엣(TEXTAT)>은 사랑의 가능성을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여 측정해주는 대표적 장치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엣>은 핸드폰을 통해 주고 받은 문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호감도를 측정해주는 ‘감정분석 모델 STEAM(Statistics-based Text Emotion Analytic Model)’을 발명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문자언어의 모든 문장들을 비표준어나 은어,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은 문장까지 고려한 후 형태소 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학적 도구이다. 이러한 발명품의 등장은 오늘날의 사랑이 비용과 효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친밀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감정의 중단과 보류, 눈치 싸움 등을 거친 의식적 절차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3] <텍스트엣>의 대화 패턴 분석 화면²²⁾

22) <텍스트엣> 공식 홈페이지에서 필자가 직접 캡처, <http://www.textat.co.kr> (검색일: 2013년 10월 27일)

이처럼 사랑 장치를 통해 개인의 가치가 기표로 상호 교환되는 동안, 또 관계의 친밀성이 실증적으로 계산되고 검증되는 동안, 사랑은 ‘어떤 사람’에서 ‘어떤 것’으로, ‘누구’에서 ‘무엇’으로, ‘존재’에서 ‘의미’로 치환되고 만다.

IV. 다시, 잔여의 것에 대해 말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관계식 속에서 정작 몫으로 성립되지 않은 채 부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사랑이다. 외모, 연봉, 학벌과 같은 연애자본을 셈하는 일이나 감정의 쓰임을 재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존재를 가치의 의미 체계에 따라 기표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표에 대한 욕망은 그 소요가 상실됨과 함께 해체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힘은 사랑이 계산들, 분석들 이후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절대적 잔여라는 점에 있다. 사랑은 기표가 다 소진하지 못한 나머지의 장소에 존재한다. 따라서 사랑의 출현은 곧 나머지의 출현을 뜻한다. 동일자의 논리에 사이-공간을 내는 동시에 그 틈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의 언표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다시금 돌아가 보자.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담론의 영역 안에서 존재는 일종의 재현을 통해 거기에 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사랑이 재현의 잔여라면 사랑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말하기이다. 사랑의 말은 한 박자씩 어긋난다. 그리고 이러한 어긋남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여서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 장애로 작용한다.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흡사 언어로 그를 어루만지는 행위인 듯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언어는 살갓이다”. 그는 “마치 손가락 대신 말이란 걸 갖고 있었던 것 마냥, 혹은 내 말들의 끝에 손가락이 달려있는 것 마냥, 나는 그 사람을 내 언어로

어루만진다”²³⁾고 적었다. 이때의 말들은 마치 애무와도 같을진대, 문제는 언어가 하는 애무가 자꾸만 실패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야기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지만, 그 건넨은 내 사랑의 말들이 가다르길 바라는 존재가 아닌, 어떤 기표를 향해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만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비록 닿지 못할 말일지언정, 사랑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마치 플라톤의 『향연(Symposion)』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정작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청취자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가톤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기표 너머의 존재를 어루만지기 위해, 기표를 통해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이 사랑을 말하려는 시도는, 거둬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행위로 치부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행위는 사랑을, 잔여로서의 무엇일, 그 모호함을 세계 내에 기입해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랑을 현실 속에 맥락화하고, 현실태의 사랑이 어떤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미래와의 관계이고 현존해있는 세계 안에서 결코 현존해 있지 않은 것과의 관계, 모든 것이 현존해 있을 때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과의 관계”²⁵⁾라고 일축하면서 타자성을 외재적

23)“Le langage est une peau: je frotte mon langage contre l'autre. C'est comme si j'avais des mots en guise de doigt, ou des doigts au bout de mes mots”, Roland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 87.

24)“on pourra dire que tout propos qui a pour objet l'amour(quelle qu'en soit l'allure détachée) comporte fatalement une allocution secrète (je m'adresse à quelqu'un, que vous ne savez pas, mais qui est là, au bout de mes maximes). Dans le Banque, cette allocution existe quet-être: ce serait Agathon qu'Alcibiade interpellera et désirerait, sous l'écoute d'un analyste, Socrate. (사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는(그 초연한 어조가 어떠한 간에) 필연적으로 어떤 은밀한 담화 행위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저기 내 격언의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이런 유형의 담화는 존재한다. 소크라테스라는 분석자의 청취하에 알키비아데스가 말을 걸고, 욕망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가톤일 것이다.)” *Ibid.*, p. 88.

25)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6), 108쪽.

초월성에 기대어 신비화했다. 그리하여 레비나스는 애무를 결코 손에 닿지 않는 자를 더듬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애무의 추구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애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애무에서의 접촉은 “다른 어떤 것, 언제나 다른 것, 언제나 접근할 수 없는 것, 언제나 미래에서 와야 할 것”²⁶⁾을 향해있다.

그런데 타자를 미래형의 존재로 두는 것은 주체를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체는 절대자이자 무한자인 미래의 타자를 마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자가 나에게로 다가왔을 때, 그 다가움을 하나의 명령으로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타자는 나를 압도해버리고 말 것이다. 눈앞에 바짝 다가와 시야를 가리고 선 타자는 나로 하여금 그를 볼 수도, 그가 무엇이냐고 말할 수도 없게 만든다. 이렇게 타자와의 접촉을 기약 없는 미래에 부치는 것은 타자를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로 남겨두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접촉을 통해 어떤 성사도 이루어낼 수 없게 한다. 타자의 다가움이 보다 상호적인 수용 작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것을 만지는 행위가 만짐과 동시에 만져지는 행위이듯, 즉 애무에서의 접촉이 언제나 쌍방향적으로 발생하듯, 타자에 대한 경험은 타자의 부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자에게 다시 말을 건네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조우를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타자를 호명하고, 현존하는 세계에 불러옴으로써 성취된다. 사랑을 말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실천이다. 잔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명명 불가능함에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언표를 단념해버리는 것이 사랑을 초월적인 무엇으로 신비화하여 그 힘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면, 언표 불가능성 너머 그 불가능성을 통하여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있음에 대한 증언이자 사랑이 무능에 빠져버리는 것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26) 같은 책, 109-110쪽.

이제 남겨진 물음은 ‘사랑의 아토포스는 어디에 자리하며, 어떻게 말해질 수 있는가?’이다. 사랑의 음성은 기의-기표의 쌍으로 이루어진 언어 구조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지며, 또 맥락화된다. 사랑은 말해짐과 동시에 그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짐을 의미화의 과정으로 갖는다. 사랑의 발화는 사랑의 실체를 묘사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사랑을 구성하는 말하기인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언어는 사실진술사라기보다는 수행사일 때, 비로소 재현의 세계에 하나의 의미로 기입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랑은 ‘너를 사랑해’라는 언표로만 증언된다. 이때 ‘너를 사랑해’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으로, 사랑을 향해 도약하려는 생동적인 언어이다. 이러한 수행적인 언표 작용은 사랑의 말해짐이 세계에서 거두는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데리다는 기표-기의 쌍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것은 의미 체계에서 어떤 공간도 가질 수 없기에 유령의 형태로 출몰한다고 언급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죽음이 문힐 무덤을 가질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바로 이러한 유령의 형상이다. 장례 의식을 통해 완전히 저승으로 건너간 죽음도, 이승에 현존하는 삶도 아닌, 애매모호한 공간에 유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겹쳐있는 공간으로부터 도래하는 유령은 현전도 부재도 아닌 흔적과도 같은데, 타자의 존재 방식이 이러하다. 그런데 레비나스와 달리, 데리다는 타자의 존재를 영원히 포착되지 않는 ‘낯설’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그 흔적은 ‘낯설고도 친숙한’ 공백의 자리에 있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의 비가시성이 타자가 접근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반면, 데리다에게서 타자의 비가시성은 그가 내재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데리다에게 타자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자”²⁷⁾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다시금 유령의 형상으로 도래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었기에)친숙하면서도 (내 것이 아니기에)낯선 무엇으로 존재하는 타자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 타자에게 건네는 말은 어떤 언어를 매개로 할까? 다시 데리다의 말을

27)Alain Finkielkraut, 권유현 역, 『사랑의 지혜』 (서울: 동문선, 1998), 64쪽.

빌리자면, 모든 모국어는 “타자의 언어”²⁸⁾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환원 불가능한 자기 고유성을 박탈당하는 경험과도 같다. 이는 상징계로 진입하는 순간, 의미화될 수 없는 존재적 고유성이 잔여로 남아있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미 타자이다. 관건은 “언어에 대한 다른 경험”, “타자에 대한 다른 경험”²⁹⁾을 가능하게 해주는 번역어를 발명해내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사랑의 언어는 그것이 갖는 수행성을 통해 현존하는 의미 체계에서 재현될 수 없었던 것, 하여 공백으로 남아있던 것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끈질기게 드러낸다. 이는 사랑이 “‘할 수 있음’으로 번역할 수 없는 관계”이자 “번역할 필요도 전혀 없는 관계”³⁰⁾가 아니라 반드시 번역되어야만 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은 사랑을 약속하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는 타자-존재와의 어떤 소통을 이끌어낸다. 이 소통이야말로 타자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는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접촉이라 할 것이다. 사랑은 나의 언어나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대화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라는 선언은 결국 “고유어의 독특성을 획일화하거나 삭제하지 않고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번역의 경험을 발명”³¹⁾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처럼 동일자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동일자 내부에 타자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우는 목소리는 바로 사랑의 언어로 말한다. 그렇기에 사랑을 말하는 것은 타자를 기표로 만들지 않는 것, 모든 기호가 소멸된 후 남겨진 존재를 불러내는 것, 영구적 개념화에 저항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의미의 세계에서는 어떤 장소를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장소를 부여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언어가 이 세계에 불러일으키는

28) Derrida, 『환대에 대하여』, 111쪽.

29) Levinas, 『시간과 타자』, 107쪽.

30) *Ibid.*

31) Derrida, 『에코그래피』, 134쪽.

반향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사랑은 이미 규정된 세계의 가치 체계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사랑은 세계의 단절이자 새로운 열림으로의 가능성인 셈이다.

김행숙은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의문형이다. 그 무엇도 손에 거머쥌 수 없는 죽음의 허공처럼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야말로 나의 인식 속에 사로잡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당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당신이라는 말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당신이라는 말을 장악할 수 없기에 내게 당신, 당신이라는 말은 사랑의 발음으로 하염없어진다³²⁾

현전과 부재의 대립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낯설고도 친밀한 흔적, 그러한 존재의 있음이 유령의 형상으로 출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져야 한다. 나의 의미 질서 한가운데서 당신의 존재를 위한 공간이 열리는 시간은 당신이라는 흔적이 하염없이 의문형으로 부쳐질 때이다. 그리하여 ‘너를 사랑해’라는 선언이 의문형으로서의 당신을 향해 반복될 때, 사랑은 그 선언에 뒤따르는 사후 효과로서 도래한다. 사랑을 말하는 것, 잔여에 대해 말하는 것에 ‘다시’가 붙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잔여의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또 다시 물어야 한다. 나의 세계 속에서 당신, 당신은 발생되고 있습니까?

성균관 대학교, hjsky23@naver.com

주제어(Key Word):

사랑(Love), 연애(Love Affair), 타자(Otherness), 존재론(Ontology), 연애상품(Love Products)

(투고일: 2015. 10. 19, 심사일: 2015. 11. 05, 게재확정일: 2015. 11. 12)

32) 김행숙, 『에로스와의 아우라』, 87쪽.

국문 초록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주은

본 연구는 사랑을 존재론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사랑이 세계의 단절이자 새로운 열림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랑은 아토포스처럼 의미가 고정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다. 사랑의 언표 불가능성은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 즉 동일자적 자아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 고유의 단독성(singularity)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사랑의 비동일자적 성격은 사랑을 예측 불가능한 것, 계산 불가능한 것, 통제 불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사랑의 이러한 성질이 가능한 소거되어야 할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존재 일반을 가치의 질서로 소환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존재가 아닌 의미로 치환된다. 타자의 존재를 기표화하는 연애상품의 출현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애상품의 발명은 타자의 타자성이 가진 모호함을 계산, 예측하고 더 나아가 통제, 소거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무엇’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사랑이 재현의 절대적 잔여로서 의미들의 관계식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까닭이다. 동일자의 논리에 사이-공간을 내는 동시에 그 틈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실패할지언정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랑의 발화는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하기가 아니라 사랑을 구성하는 수행적 언표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랑을 말하는 것은 타자를 기표로 만들지 않는 것, 모든 기호가 소멸된 후 남겨진 존재를 불러내는 것, 영구적 개념화에 저항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현존하는 의미 체계에서 재현될 수 없었던 것, 하여 공백으로 남아있던 것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언어가 이 세계에 불러일으키는 반향인 것이다. 사랑이 이미 규정된 세계의 가치 체계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Abstract>

Ontology of Love
: A Critical Review on Love of the Present Time

Joo-eun KIM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possibility of love as discontinuity in the world as well as the possibility toward new openness by thinking about love ontologically. Love has ontological status due to the point that the meaning thereof cannot be fixed as *atopos*. Locutionary impossibility of love is based on the fact that love is the existence itself of the loved object, that is, a process to approach other original singularity that cannot be reduced to the same self.

On the other hand, non-same self characteristic of love makes love unpredictable, non-computable, and non-controllable, however today, when people pursue safe life, this character of love is regarded as the factor that should be erased as much as possible. Particularly, in capitalism society, which recalls general existence with the order of value, love is substituted with meaning instead of existence. Appearance of love goods that signify the existence of others is an example that well shows such reality. Invention of love goods can be said to be a measure to calculate, anticipate, furthermore, control and erase ambiguity that otherness of others has.

Nevertheless, love reveals its figure with 'something' that cannot be completely removed. This is the reason why love insistently remains in the interaction formula of meanings as the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absolute residue of reappearance. Love comes from that gap, simultaneously with sparing relationship - space in the theory of same person.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continuously try even though talking about love might fail. Speech of love is not to reveal the reality of love, but can be said the performative locutionary action that composes love. Therefore, talking about love can be said in other words that it is not to signify others, recalls remaining existence after extinction of all symbols, and resist permanent conceptualization. Sensation that the language of love arouses in the world is to reveal something that could not be realized in system of meaning that exists at present, accordingly, that has existed in the world remaining in blank. This is why love has the potential to stop already defined value system of the world and adopt new order.

■ 논문 ■

日本市民による植民地支配の記憶の試み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
行委員会」を事例に—

大和 裕美子

I. はじめに

本稿は、1990年代から日本で展開された追悼碑建立運動において、在日韓国・朝鮮人がリーダーとなった運動に、日本人メンバーがどのような思いで関わったか、すなわち運動の動因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¹⁾。

追悼碑建立運動は、主として1990年代前後から、北海道から沖縄に至るまで、日本各地で行われた²⁾。この時期に追悼碑建立を目的とする団体が発足した理由は、日本国外の要因によって説明されよう。例えば韓国は1987年に民主化され、それにより、韓国の人たちからの声の日

1) 「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山口県）のメンバーを対象に行った運動の動因については、大和裕美子『長生炭鉱水没事故をめぐる記憶実践：日韓市民の試みから』（比較社会文化叢書），（福岡：花書院，2015）を参照されたい。

2) 従来日本においては、戦争の記憶が「礎」論（戦争犠牲者のおかげで今日の平和な日本があるという論理）が語りの中心を占めてきた。1990年以前の「反省」としての植民地支配の記憶実践として、代表的なものに岡正治氏による実践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現在は、「礎」論と「反省」の記憶としての植民地支配の2つの論理が並存する状況と言える。この点について大和裕美子「日本社会における植民地支配の記憶実践：追悼碑建立運動を中心に」『제외한인연구』，（36，2015）を参照されたい。

本国内に届くようになった。その声に応答しようとした人々が行った実践の一つが追悼碑建立運動であったと言える。ただ、追悼碑建立運動が1990年前後から盛んになったことは、国外要因のみによって説明され得るものではない。キャロル・グラックが強調するように、もし「当該社会の内部に同じ意識を持つ勢力が多数存在しなければ、外部の触媒は聞く耳を持たない人々によって無視され、社会に反響をもたらすことなく消え去った」³⁾はずだからである。すなわちそこには、国外から届いた声を受け止めようとする日本人がいたという国内要因があった。そうだとすれば、その国内要因が形成された状況、すなわちなぜ日本人は国外からの声を受け止め、行動しようとしたのか、という問いが生じる。本稿は、追悼碑建立運動に焦点を当て、その答えに接近する試みである。

追悼碑の建立は、日本市民と在日韓国・朝鮮人によって進められ、植民地支配への謝罪と反省を刻んだという特徴を有する。例えば、「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犠牲者を調査し追悼する会」（兵庫県）、「群馬県朝鮮人・韓国人強制連行犠牲者追悼碑を建てる会」（群馬県）、そして「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福岡県）、「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山口県）など、他にも多数の事例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2015年現在、建立された追悼碑の撤去を求めるという、追悼碑をめぐる「新たな」動きも生じている。

本稿で取り上げるのは、九州の北部に位置する福岡県筑豊地方で展開された運動、「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である。当該地方は、福岡地方、北九州地方、筑後地方、筑豊地方の4地域で構成される。筑豊地方には飯塚市、嘉麻市、嘉穂郡、鞍手郡、田川市、田川郡、直方市、宮若市が含まれる⁴⁾。石炭資源を有したことから炭鉱開発が行われ、1960年代までは石炭業で栄えた。日鉄鉱業、三菱鉱業、三井鉱山、住友石炭鉱業、古河鉱業、貝島鉱業、明治鉱業、麻生炭鉱、日本炭鉱（遠賀郡水巻）、大正鉱業（中間市）などのほ

3) キャロル・グラック, (梅崎透訳) 「記憶の作用: 世界の中の「慰安婦」」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8』(東京: 岩波書店, 2002年), pp. 209-210

4) 近隣に位置する遠賀郡、中間市を含む場合もある。

か、数多くの中小炭鉱業も存在した。その後、石炭から石油へのエネルギー転換により、1976年には、当時宮田町にあった（2006年に鞍手郡の宮田町と若宮町が合併し、現在は宮若市）貝島炭鉱が閉山した。これにより、筑豊から炭鉱が姿を消すこととなった。また筑豊は、日本統治期 일제시대에、多くの朝鮮半島出身者が渡り、炭鉱で従事していたことで知られる。田川市には、「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1983年「田川市石炭資料館」として開館、2005年に「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へ名称変更）があり、石炭鉱業の歴史が展示されている。同博物館に展示される、元炭坑夫山本作兵衛による炭坑の絵画等は、2011年5月、日本で初めて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た作品である⁵⁾。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は、このような特徴を有する筑豊の飯塚市で、運動を展開した団体である。2000年に、筑豊の在日韓国・朝鮮人の無縁仏を納める納骨式追悼碑を建立した。2015年現在、118体の遺骨が納められている。追悼碑建立後には、「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へと名称を変更し、建立した追悼碑の維持・保存、新たな調査活動、追悼式の開催などを実施しながら、継続的に運動を展開している。「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の場合、発起人はある一人の在日朝鮮人、妻来善であった。おそらく、彼がなぜ追悼碑を建立しようと思ったのか、その動機は想像に難くないであろう。後述するが、妻は高齢になったとき、筑豊の地で死んでいった同胞に思いを馳せたのである。

本稿の関心は、彼の思いをどのように日本人が受け止め、追悼碑を建立する運動へと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のか、という点にある。当然ながら、この地域に住む全ての日本人が妻の思いを受け止めたわけではない。追悼碑建立時に、積極的に建立を反対する動きは見られなかったものの、「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のメンバーになるなどの行動を通して、積極的に運動に身を投じていったのは、一部の日本人である。彼らの積極的な参加があって、追悼碑建

5) 山本作兵衛と作品に関する詳細については、「山本作兵衛氏 炭坑の記録画」 (<http://www.y-sABubei.com/indeA.html>) を参照されたい。

立が実現したことは疑いようもない。

まず本論に入る前に、本稿の研究的位置づけについて述べておきたい。追悼あるいは追悼碑に関する研究は、歴史学、宗教学、民俗学を始め、複数の学問分野で行われ、記憶研究として、社会学、文化人類学でも幅広く対象とされてきた。本稿では、追悼碑そのものよりも、追悼碑を建立した主体に光を当て、彼ら／彼女らが朝鮮半島への反省のメッセージを込めた追悼碑を建立しようとしたその動因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その点で、本稿は社会運動研究でもある。

社会運動研究では、社会運動に注目することで、社会と時代を映し出す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きた⁶⁾。社会運動を研究する上で重要なのが、運動主体者の分析である。運動の担い手はどのような社会構造的背景のもとに生まれたのか、そして運動は社会構造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これらの問いを、社会構造や集合行動に注目し、なぜ人は、そうした行動に身を投じるかを社会運動研究は問うてきた。しかし、社会運動研究においても、その担い手の分析を照射した研究は、運動の数に比して多いとは言えない。たしかに、運動の担い手によって運動の概要が紹介され、運動の意義などが主張されたものは少なからず存在する。しかしながら、管見の限りでは、これを1つの運動として括り出し、追悼碑建立運動を分析した研究は見当たらない。

しかしながら日本社会において、植民地支配がどう捉えられてきたか、あるいは捉えられようとしているのか、すなわち植民地支配をめぐる記憶を把握する上で、追悼碑建立運動は、重要な事例であると考えられる。先に触れたように、1990年代前後には、植民地支配に対する謝罪と反省を記憶するための追悼碑建立が盛んに行われたが、2015年現在、それらの追悼碑が発するメッセージに異を唱える動きが活発化している⁷⁾。そ

6) 大畑裕嗣・成元哲・道場親信・樋口直人編、『社会運動の社会学』,(東京:有斐閣選書, 2004年) p. 2.

7) この点に関しては、大和裕美子, 「日本社会における植民地支配の記憶実践: 追悼碑建立運動の事例を中心に」『제외한인연구』, (36, 2015) pp. 56-59を参照されたい。

の代表的な事例として、「記憶 反省 そして友好」の碑が挙げられる。この碑は2004年4月24日に、群馬県高崎市の県立公園内にある「群馬の森」に建てられた。土地は群馬県が提供したが、10年ごとの設置許可の更新が設けられていた。2014年が最初の更新年であったが、群馬県は10年の設置許可を更新せず、碑を管理する「記憶 反省 そして友好」の追悼碑を守る会（前身は、「群馬県朝鮮人・韓国人強制連行犠牲者追悼碑を建てる会」）に撤去を求めた。会はこれを認めず、会の名の通り、追悼碑を守る姿勢を示している。

「無窮花堂」もまた例外ではない。この追悼碑の撤去を求める動きが、飯塚市でも生じている。「日本の近代化のために働いた朝鮮人を顕彰、慰霊する目的ならよいが、国際交流広場（筆者加筆・「無窮花堂」が位置する場所の名称）は誤った歴史認識を植え付け、日本を誹謗する『反日広場』になっている。これを公共の場所に建てておいたら、碑文の内容を行政が認めた事実ということにされてしまう」というのが、撤去を求める側の主張である⁸⁾。

ただ留意されたいのは、本稿は、裏の思いを受け止めることが正しく、そうでないことが正しくない、といった論を展開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点である。裏の思いが、ある日本人の心を揺り動かした。そして彼らは、裏がこの世を去ってまでなお、裏の思いを受け継ごうと運動を行っている。そのような動きをどう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彼らの運動に対する思いは何なのか。本稿の関心はここにある。この問いに答える試みとして、筆者は日本人メンバーの中でもとくに中心的役割を果たして来た2名に、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た。

まず以下では、「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について概観する。つぎに、同会がいかにして運動を展開していったかを見ていく。そして、同会で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日本人メンバー2名に実施した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彼らがどのような思い

8) 「「政治利用」住民ら改訂・撤去を要求 朝鮮人追悼碑に「強制連行」など非難の文 福岡・飯塚市営霊園の敷地内」『産経ニュース』<http://www.sankei.com/politics/news/140519/pl1405190004-n1.html>、2014年5月19日（2015年10月11日検索）

から運動に参加していたのかを、当時の社会背景と照らし合わせながら分析する。

II.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の概要

(1) 会の概要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は、1996年4月23日に福岡県の筑豊地区で結成された。運動の目的は、「朝鮮人強制連行の犠牲者を追悼する施設を建設すること」であった。準備会の発足後、数回にわたって会議が重ねられ、役員が決定された（本稿末尾の「規約」を参照）。結成後約5年で、飯塚市市営飯塚霊園内に納骨式追悼施設の「無窮花堂」を完成させた。

冒頭で述べたように、2000年12月2日に飯塚市営霊園内に納骨式追悼施設「無窮花堂」が完成した。ここには、80人の無縁亡者、身元不明死者、位牌が安置されている。落慶式には、飯塚市長、田川市長、碓井村長をはじめ、僧侶、教師、労働組合、筑豊市町村関係者、民団、総連、市民団体の関係者約250人が出席した。

落慶から2年後の2002年11月23日には、無窮花堂を囲む壁に、日朝関係史を記したパネル「歴史回廊」が完成し（写真2参照）、「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は2004年に発展的に解消した。その後は、「特定非営利活動法人国際交流広場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として、飯塚市の労働会館に事務局を置き、日韓・日朝の友好と親善を促進するさまざま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具体的には、会の内部に「（朝鮮人）強制動員真相究明筑豊委員会」を設け、筑豊地区5市24町の自治体に対し、遺骨の収集および埋・火葬認可証などの情報開示を求める活動や、追悼式（毎年秋に開催）や「無窮花

通信」の発行を行うなどの活動を行っている⁹⁾。2015年度秋季追悼式は、10月12日に開催された。式次第は次の通りである。1 黙祷、2 開会あいさつ（朝鮮総連支部顧問・理事、林虎光）、3 主催者あいさつ（NPO法人無窮花の会理事長）、4 来賓紹介およびあいさつ、5 献歌、6 献花、7 閉会あいさつ（民団支団長・副理事長、韓光イン）。追悼式の模様については、写真3を参照されたい。

（2）「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設立の経緯

冒頭で触れたように、「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は、ある一人の人物によって結成された。その人物が裴来善である。故裴来善氏は1921年生まれの前在日朝鮮人である。裴来善氏は2008年に他界されているため、「無窮花の会」会員の松隈一輝氏による記述を通して、裴来善氏がどのような思いから、「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が設立されるに至ったかを見ていく。以下適宜、修正を加えながら松隈の記述を引用する¹⁰⁾。

1986年暮れ、裴は飯塚市内の総合病院で病氣療養中であった。当時65才、日常の雑務から解放され静かに過ぎていく病室での日々は、みずからの人生を振り返る格好の機会を提供することとなった。半世紀に及ぶ日本での生活を反芻する裴の脳裏に繰り返し立ち現れたのは、1943年の二度に亘る強制連行体験であった。後年、裴はそのときの思いを書き付けている。長い引用となるが、要点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私は、1943年10月に朝鮮半島から貝島鉱業所大辻炭坑（福岡県中間市）へ強制連行されました。

貝島に来る数ヶ月前の4月に、佐賀県内の軍需工場に連行されて働いておりましたが、故郷から父親の危篤という報せを受け、会社に何度も一時帰国を願い出ましたが受け入れ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その後、軍需

9) NPO法人 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リーフレット。

10) 松隈一輝、「＜足元のアジア＞を掘る—立体的炭坑物語を求めて—」（地方自治研究応募論文）（2007）

工場から逃げ出し故郷へ帰ってみれば、父親はすでに2ヶ月前に死亡しておりました。

母親と幼い弟2人、一家4人で力を合わせて幸福に暮らしていこうとした矢先、面事務所(町役場)職員に呼び出され、大辻炭坑に来ることとなりました。

大辻炭坑で働いた数ヶ月間には色々なことがありました。一緒に来て枕を並べて過ごした同僚2人が、落盤事故で負傷し病院へ行ったきり戻らなかつたり、毎晩のように拷問を受ける同僚たちの、助けを求める悲痛な叫び声に、気も狂いそうでした。

再度脱走を決心しました。捕まれば殺される覚悟で逃げましたが、無事成功し、各地の仕事場を転々としながら受難の道を歩み、1945年8月15日の解放を迎えました。

あの時、色んな話を交わした同僚たちは、今どうしているだろうか、生きているだろうか、もしかして死んでいるのだろうか、死んでいたのなら遺骨は親兄弟の元へ帰ったであろうか、それとも筑豊の或るお寺や墓地に眠っているだろうか、いつも気にしていました。

ここまでの、松隈による記述である。このような裏の思いを松隈は、「強いられた動員と苛酷な坑内労働、その結果としての傷病と異国での死—それはみずからの身にも起こりえたかも知れない—もう一つの自画像」となって、裏の胸を締め付けた」と分析する。すなわち、「大日本帝国への激しい“恨”と、それと表裏をなす亡き同胞への熱い追悼の気持ちであった」。こうして裏は、「強制連行一世として、朝鮮民族の一人として、筑豊の各寺院に放置されている同胞の遺骨を収集」することにした。

1994年10月から、裏の寺院廻りが始まった。松隈によれば、この時裏は、一人で飯塚市を含む、筑豊全域の寺院を訪ねて回っていたという。そして、裏は、数ヵ月後、数十体の朝鮮半島出身の坑夫の遺骨を見つけた。

その後、裏にとって課題となったのは、納骨式追悼碑の建立であった。

遺骨を納め、追悼する場が必要だったのである。追悼碑の建立に、多大の経費を要す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しかし、そのような喪の思いを受け止め、納骨式追悼碑を建立しようとする人々は少なくなかった。6つの民間団体と複数の個人が呼びかけに応じて結集し、「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準備会」が結成され、代表には喪が就任した。その後、「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準備会」は、「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と名称を変更した。

注目すべき点は、喪の思いが、日本人の人々が運動に参加する直接的な動機になったという点である。ある一部の日本人にとって、喪の思いによって建てられた「無窮花堂」が受け入れ難いものであることは、先に述べた通りである。すなわち日本社会には、喪の思いを受け入れる人と受け入れない人とが混在している。繰り返すが、なぜ喪の思いはある一部の日本人にとって、運動参加の動機となり、また原動力となり得たのだろうか。

会員は個人会員と団体会員に分類される。個人会員は約80名で、団体会員は17団体である。会費は個人会員の場合、年間2000円で、団体会員の場合は、10,000円である。会員のほとんどは日本人である。男女構成は、7割が男性で、女性が3割と偏りが見られる。年齢層には偏りが見られ、会員のほとんどが高齢である。70歳代以上が6割を占め、残りの4割も50歳代以上である。元教員、元県議であった人、また自治労などの組合組織に属していた人が多いのが特徴である。団体会員は、全日本自治体労働組合、福岡県退職教職員協会、部落解放同盟、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筑豊から世界を見る会、在日本朝鮮総連合会、在日本大韓国民団などであり、個人会員との重なりが見られる。この特徴に鑑み以下では、それぞれ元教員、元県議の経歴を有し、かつ会の結成時から継続して運動に関わってきた2名の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を分析する。

Ⅲ. 日本人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

(1) A氏の場合¹¹⁾

・A氏：1939年名古屋市生まれ、中学3年のときに福岡県筑豊地区（川崎町）に転居。筑豊地区（添田町・インタビュー当時）在住。男性。元中学校教諭（英語）。「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理事。1997年、自宅に集めた資料を学生、市民に公開するための資料室、「筑豊塾」を開設。「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副理事長（インタビュー当時）。

A氏の父は炭坑夫として福岡県の筑豊の旧古川大嶺炭鉱で働いていた。父が社宅に入った中学校のときにA氏は家族と一緒に筑豊にやって来た。「貧しい生活だったから、社宅の窓際の七輪で、ものを炊いたり、長屋の生活を。窓際でね、魚を焼く匂いがさーっと流れてくる。どこやるか？おばさんがさんまを焼きよる。初めてさんまの匂いを嗅いでね。自分で焼いたことがない。食べたことがない。何か、うらやましかった」。A氏はそのような生活体験が原点となっていると語る。

「いまでも底辺の生活に共感する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語るA氏は、田川市にある石炭記念公園内にある「田川地区炭坑殉難慰霊之碑」の碑文のある一節に対し批判的な見解を持っていると述べる。「戦争中には徴用や各国捕虜等、老若男女を問わず石炭増産に狂奔し」という部分である。A氏によれば、問題の一つは、「捕虜まで囲んだのに、大量の朝鮮人の強制連行の文言を入れれないのか」という部分である。A氏はこれに抗議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

もう一つは「狂奔した」という部分である。「うちの親父は、命がけで坑内で採炭夫として炭鉱で働いたけれども。うちの親父はね、石炭増産

11) A氏へのインタビュー、2012年9月20日。A氏へのインタビューのインタビューは、拙者の博士論文「山口県長生炭鉱の水没事故をめぐる社会的記憶の構図と記憶実践——「長生炭鉱の“水非常”を歴史に刻む会」を事例に」（九州大学・2013年3月博士学位取得）にも掲載した。

に狂奔したんじゃないと。家族を養うために、あるいは進学させるためにね、犠牲的な、賃働きをしたんであってね。狂奔させられたということ」。A氏はさらにこう続ける。「支配する者と支配される者。搾取する側と搾取される側。それがね、全然ごまかされとるわけですよ。ものを階級的に見るか見ないか。私は炭坑夫の息子としてね、やはり下から炭鉱経営者なり、資本なりを見る一つの社会構造とか、産業、経済構造をね、見る一つの基盤がありますが」。A氏のいう3つの柱、すなわち炭鉱の問題、被差別部落の問題、在日の問題に共感し、ライフワークとなった背景には、炭坑夫の息子としての生活があった。

A氏は中学校教諭の現職の時代から、これら3つの問題に力を注いできた。現場では「朝鮮人」と噂をされたこともあったという。A氏は「それこそ、在日の問題には時間をかけてね。学校も休暇をとったりしたことがあったもんやからね。好感もあまり持たれてなかったようやけど」と当時を振り返った。

(2) B氏の場合¹²⁾

・B氏：1948年福岡県飯塚市生まれ、福岡県飯塚市在住。男性。元飯塚市職員。元社会党員。元福岡県議員（無所属）。「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会計監査。「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理事長。

どのような思いで運動に関わっているか、という筆者の質問に、B氏はこうと語った。「この場合は炭鉱があったから在日の方が多かったですね。小学校や中学校にも在日の子がたくさんいましたから」。B氏は、「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があった飯塚市で生まれ育った。「同じクラスの中にも何人かの在日がいた」と語るB氏は、「そういった意味では在日との関係というか、つながりは近かった」と回想する。「僕の住んでいるところが屠殺場だったもんで。屠殺場では内臓の下請けとか解体とか在日の方が来られてからね。トンチャンといって売

12) B氏へのインタビュー、2012年9月24日実施。

つとったから。そういった意味では特別に壁を作るとか、そういった意味での付き合いはなかったですね」。

しかし、彼らが異なる存在であることには意識的だった。「僕の周辺では在日ということは分かっただけからですから。そういった意味では差別感を持つとっただけだと思いますよ。日常的な交わりの中では出なくても、何かあったときにはね、そういった事例はあったと思いますね」。

1995年当初から、運動に関わった。その前年に、炭鉱犠牲者を追悼する式典を行った。そのときに、戦争犠牲者と炭鉱犠牲者の追悼をしよ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の場に妻来善がいた。妻は当時、ひとりで寺院をめぐり、遺骨の所在を確認していた。「妻来善さんが自分の思いを語ってくれるという。これはやろう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

6団体の団体が結成に関わったが、これらの団体のうち、ある特定の団体が中心になったわけではなく、あくまで妻来善が中心だった。B氏はこの6団体の「世界を見る会」の会員ではあったが、そのことよりも、やはり妻来善の存在がB氏にとって、運動参加の直接的契機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

B氏は、かつて社会党員¹³⁾であった。また労働組合の組合員でもあった。B氏が福岡県議員選に立候補したのは、2003年のことだったが、無所属で出馬した。B氏は継続して、飯塚市にあ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委員会で活動している。労働者の問題には、「男女の差があつたりするから」と語る。

このようにB氏の語りからは、労働組合、男女共同参画など、社会問題への高い関心が窺える。とすれば、「筑豊在日コリアン建立実行委員会」もまた、社会問題の一つ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のであろうか。この問いに対し、B氏は「無窮花の場合はやっぱり歴史の問題が一番大きい。なんで今ここに在日コリアンが住んで生活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問題意

13) 日本社会党は、1996年に社民党へと改称された。

識」と答える。「それはやっぱり結局、日本の国内の人間が駆り出される中で強制的に連れてきて、坑内労働とか造船とか、そういったのに従事させた。そして終戦後はいままでは日本の人員だと言っていたのがね、一方的に」。「妻来善もやってたんですけど、無年金裁判で闘っているんですね。そういった意味では、あとの補償もなにもなかったという記憶があるから、そういったところは問題としてきちっと日本人がしていかないかん。救えるもんを救っていかないかん。ということと思うんですよね」。

また「人権」への意識もまた根底にあることが垣間見える。「僕はやっぱりいろいろ考える。そういった意味ではやっぱり労働組合でしょうね。職場の人の人権を守るとか。立場を守っていくというのがやっぱりあったと思うので。そういった中でいろんな方面に目を向けていったら、こんなこともある、あんな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3) 小括

以上、2名を対象に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運動参加の思いを探ることを試みた。共通するのは人権に対する関心である。A氏は、炭鉱の問題、被差別部落の問題、在日の問題に共感し、専心してきたと語った。A氏の教員生活と、被差別部落すなわち同和問題への関心の高まりが見られた時期は重複する。1960年には「同和对策審議会設置法」が制定され、1965年には「同和对策審議会答申」（同和地区に関する社会的及び経済的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基本方針）がなされた。これは、部落差別の解消が「国民的な課題」であり、「国の責務である」と明記した政府審議会の答申であり、日本政府が「部落問題の解決を国策として取り

組む」ことを初めて確認した歴史的な文書と評価されている¹⁴⁾。1969年には「同和対策事業特別措置法」が10年間の限時法として制定された(1978年に3年間の延長決定)。福岡県では1970年に「福岡県同和対策長期計画及び同和教育基本方針」が策定されたのを皮切りに、「同和問題啓発強調月間」の創設(1981年)、「同和問題啓発活動研究会」の創設(1983年)、「同和問題啓発広報コンクール」の開始(1989年)、「同和問題をはじめとする人権問題に係る啓発・研修講師団講師あつせん事業」の創設(1993年)、「福岡県部落差別事象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条例」の制定(1995年)などの取り組みがなされてきた¹⁵⁾。とりわけ筑豊地方は、この問題と密接に関連する地域である。学校教育においても、教科書に部落問題が採用され、いわゆる同和教育が避けて通れない学習課題になっていった、とA氏が語るように、とくに学習課題と重なるのがこの地域だった。

もちろん、このような問題への関心が高揚した時期だったということのみで、A氏の運動参加の思いを説明するのは難しい。A氏の語りに見られるキーワードは、「共感」である。A氏はこう語る。「褻来善も2回ほど逃亡してね。命がけの逃亡をして、亡くなった遺骨を一心同体の気持ちで、行動しとるんです。それがね、私はもう痛いほど分かるね」。ここで、褻来善の2度にわたる渡日がいわゆる「強制連行」であったかについては、本稿が主眼とするところではない。本稿で着目したいのは、2度にわたって「強制連行」された、命がけの逃亡をした、と語る褻来善への「共感」が、運動参加の原動力となったこと。そしてその「共感」と、A氏のライフヒストリーとは密接な関係があること。そのライ

14) 「部落解放同盟東京都連合会」ホームページ、http://www.asahi-net.or.jp/~mg5s-hsgw/siryou/kiso/doutaisin_tousin.html、(2015年10月11日検索)。同会は「同和問題」を「日本社会の歴史的発展の過程において形成された身分階層構造に基づく差別により、日本国民の一部の集団が経済的・社会的・文化的に低位の状態におかれ、現代社会においても、なおいちじるしく基本的人権を侵害され、とくに、近代社会の原理として何人にも保障されている市民的権利と自由を完全に保障されていないという、もっとも深刻にして重大な社会問題である」と説明する。

15) 「福岡県人権啓発情報センター」ホームページ、<http://www.fukuokaken-jinken.or.jp/chronologies/>、(2015年10月11日検索)

フヒストリーの中でもとくにA氏は、運動の動機を「底辺の生活への共感」、具体的には、炭坑、被差別部落、在日韓国・朝鮮人への共感と関連させている。

この点は、A氏とは世代が異なるB氏にも共通する。B氏は、労働問題、男女雇用機会の問題に取り組んで来た。先に1960年代から1990年代にかけて、同和問題に関する法案および取り組み等がなされてきたことを確認したが、男女の労働格差を是正しようとする動きもまた、この人権への取り組みの一連の流れの中に含まれるものである。「女子に対するあらゆる形態の差別の撤廃に関する条約」（女子差別撤廃条約）（1985年締結）、「男女雇用機会均等法」（1985年制定）、また「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1999年制定）などがそれである。福岡県でも「福岡県男女共同参画推進条例」（2001年）が制定された¹⁶⁾。つまり、両氏の共通項は「人権」なのである。

B氏にもまた、「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そして「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に関わる契機には、妻来善への共感があった。B氏はなぜ、妻来善に共感したか。その背景には、自身の生活の中にながらも、隣にいるという在日韓国・朝鮮人の存在があった。B氏の語りからは、戦後、日本社会で生きてきた在日韓国・朝鮮人の置かれた状況を問題視する意識と、それを改善の方向へと導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が窺える。そして、それは日本人が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識も見られる。その思いが、「筑豊在日コリア建立実行委員会」での運動、そして妻来善が亡きあとも「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に積極的に関わり、「無窮花堂」を守るという行動へとつながっている。

IV. おわりに

以上、本稿では「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を事例に、在日韓国・朝鮮人がリーダーとなった運動に日本人

16) 同上。

メンバーがどのような思いで関わったかを、会の中で中心的な役割を担った日本人メンバー2名への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明らかにすることを試みた。インタビューから、両氏は人権への関心が極めて高いことが共通して窺えた。そして、彼らが取り組んできたテーマは、当時の日本社会で人権問題として括られながら、取り上げられてきたものであった。彼らにとって、追悼碑建立運動は、この延長線上に位置づけられるものと考えられる。

B氏は、本論で記したようにインタビューの中で、日本において在日韓国・朝鮮人が置かれている状況と問題は、「歴史問題」であると語った。なぜ韓国・朝鮮人である彼らが、日本社会で暮らしているのかという経緯を遡れば、たしかにそれは「歴史問題」として括られよう。しかし、B氏が実際に生きた時代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無窮花堂」が完成して15年が経過したいまなお、褒来善の意思を守ろうとする固い決意とも言える思いの裏には、日本社会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の境遇に対する共感、そして日本人としてそれを改善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が垣間見えた。つまり、B氏にとってもまた、植民地支配に対する謝罪および反省を刻んだ追悼碑を建て、守っていくという運動は、「歴史問題」であると同時に「人権問題」でもある。すなわち、過去に起こった出来事ではなく、いまも改善すべき課題がある、現在進行中の問題であり、その意味において、追悼碑建立運動は「歴史問題」と「人権問題」の範疇の両方に属するものと言える。したがって、1990年代前後に市民の間においても見られた、植民地支配を反省の歴史として記憶しようとする動きが生じた一つの国内要因は、人権意識の高揚として説明されよう。そしてこの事例が指し示すことは、「加害国」の国民、すなわち「日本人」という一つの範疇のみをもって、一枚岩的な見方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当然ながら「日本人」の中に分け入って見れば、人によって考え方は異なる。その考えの違いは、彼ら／彼女らがいかなる環境で、どのような人との出会いの中で人生を送ってきたのか、つまりライフヒストリーから読み解かれるものである。

九州大学比較社会文化研究院特別研究者
ソウル大学アジア研究所東北アジアセンター客員研究員
yumikoyamato@hotmail.co.jp

キーワード(Key Words) :

追悼碑建立運動(the Building of a Memorial Movement), 日本市民
(Japanese Citizens), 動機(the Motivation), 日本の朝鮮半島に對する
植民地支配(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투고일: 2015. 10. 19, 심사일: 2015. 11. 07, 게재확정일: 2015. 11. 13)

<국문초록>

일본시민에 의한 식민지 지배 기억의 고찰
: 「재일지꾸호코리아강제연행희생자납골식추도비건립
실행위원회」를 사례로

야마토 유미코

이 글은 1990년대부터 일본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식민지기 일본에서 노동을 하던 중 죽음을 맞은 한국·조선인들을 위한 추도비 건립 운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일지꾸호코리아강제연행희생자납골식추도비건립 실행위원회(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라는 이름의 단체의 활동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운동을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실천’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재일한국인 조선인이 리더가 된 이 운동에 일본인 멤버들이 어떤 내적 동기에서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고찰의 대상인 “재일지꾸호코리아강제연행희생자납골식추도비건립 실행위원회”는 2000년 재일코리아인 배래선씨의 주도로 후쿠오카현 중부 탄광지대인 지꾸호 지방의 재일 한국·조선인 무연고 사망자를 봉안한 납골식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 건립 후 이 단체는 “무궁화당 우호 친선 모임”(無窮花堂友好親善の会)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건립한 추도비의 유지 보존, 강제노동과 피해 등에 대한 조사 활동, 추도식 개최 등의 활동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추도비 건립 이후 활동을 지속해 온 일본인 멤버들 가운데 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온 2명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이다. 2명에 대한 구술인터뷰의 결과 참여자들은 현재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무궁화당”이 완성된 지

15년이 경과하고 주도자인 배래선씨가 타계한 지금도 추도비를 지키고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결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지의 이면에는 일본 사회에서의 제일 한국·조선인의 낮은 처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내적 동기가 존재한다.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 해왔던 활동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 피차별 부락 문제, 제일 한국·조선인 문제, 노동의 남녀 격차 문제 등 - 추도비가 세워지던 2000년 무렵 일본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파악된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추도비 건립 운동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당대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Building of a Memorial in Japanese Society
: Through The Case in Fukuoka Prefecture

Yumiko YAMAT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some memorial-building movements in Japanese society as remembrance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focusing in the case. The case is the Mugunghwa Friendship (Mugunghwa Yuko Shinzen no Kai 「無窮花友好親善の会」) in Fukuoka Prefecture.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harnel-type memorial for Koreans who were drawn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in Chikuho district (ZainichiChikuhoKoriaKyoseiRenkoGiseishaNokotsushikiTsuitoHi KonryuJikkoinkai 「在日筑豊コリア強制連行犠牲者納骨式追悼碑建立実行委員会」) was a predecessor of the Mugunghwa Friendship. It was set up in 1996 and they built the memorial in 2000 in Izuka City, Fukuoka Prefecture.

In this paper, the author interviewed two members and asked the reasons why they are involved in the memorial-building movements. The interviewees had some views in common like the following:

1. They related that their motivation for joining the movements is born out of their childhood experience.
2. They talked about their childhood experience, focusing on the memories of Zainichi Koreans (they are residents in Japan, not including new comers).
3. They have strong emotion about human rights.

Accordingly,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ir motivations relate to their childhood experience, and they feel sympathize with the leader, Bae Raeseong(裴来善).

호모미그란스 휘보

I. 연구회 일정

■ 2014년 하반기 콜로키움

- 일시: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소회의실
- 발표
발표1. 조원(서울대), 몽골제국시기 色目人들의 중원 이주와 정착
발표2. 야마토 유미코(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일본시민에 의한 조선 인을 위한 추도비건립운동 :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사례로
통역 : 한혜인 (성균관대)
발표3. 김진영(서강대), 프랑스 1927년 국적법을 통해 본 인구증진 담론과 외국인 혐오다

■ 2014년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시민성: 탈경계 시대의 국민국가와 이주자의 권리

- 일시: 2014년 12월 19-20일
- 장소: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강의실

개회사 (12월 19일 13:00-13:20)

사회: 신동규(창원대)

축사: 이찬규(창원대 총장)

제1부: 국민국가의 경계와 이민자 (12월 19일 13:20-18:20)

사회: 박현숙(서강대)

1. 신동규(창원대) - 국민경제부흥과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 '영광의 30년'의 노동력

2. 박단(서강대) -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정의: 알제리인의 유입과 국적법의 변화

3. 문종현(한양대) - 국민국가와 집시: 19-20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4. 홍용진(고려대) - 국적과 인권: 1932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인들

토론: 임승휘(선문대), 김용우(한국기술교대), 이용일(대구교대)

제2부: 이민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평등을 위한 교육모델의 탐색 (12월 20일 09:00-12:00)

사회 문경희(창원대)

1. 윤용선(한성대) - 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서양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2. 박단(서강대) - 신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3. 문종현(한양대) - 탈자문화중심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4. 홍용진(고려대) - 역사 속 이주를 통한 국제교류 증진 사례 소개의 필요성과 교수법

5. 이찬행(성균관대) - 인종차별 사례 및 처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6. 오영인(성균관대) -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제3부: 이주와 통합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12월 20일 13:30-17:00)

사회: 양재혁(중앙대)

1. 이찬행(성균관대) - 192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귀화 판례에 대한 검토: 담론적 실재로서의 백인성

2. 오영인(성균관대) - 미국 이민 행정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간기 이민국의 자율성확대와 이민자들

3. 윤용선(한성대) - 이주민 통합에 있어 문화와 경제의 의미: 독일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

☞ 토론: 황혜성(한성대), 권은혜(한양대), 이민경(서강대)

4부 종합토론 (12월 20일 17:00-17:30)

사회: 박지현

폐회사

사회: 신동규(창원대)

폐회사: 박단(이주사학회 회장)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반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태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 (3) 『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 (4) □ □ (전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2),√12.

(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 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 Controversies

√(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 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Imperialism√under

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

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

ss,√1994),√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저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

(예2) 木畑洋一,√『帝□의타そがれ:√冷□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出版□,√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誌』,√3□√(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 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Chica

go√University√ Press,√ 1951),√9.

(예2) 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se-
De√la√Raison√à√l’Etre√ Suprême √(Paris: √Galli-

- mard,√1988),√12-13.
-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des√Kampfes√um√Arbeitszeitverkürzung√in√Deutschland√(Köln:√S uhrkamp,√1984),√15.
-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 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lish√Agrar ians”,√Canadian√Journal√of√Economic√and√Political√Scien ce,√18-3(1952),√287.
- (예2)Sergey√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r ançaise.”√Annales√Historiques√de√la√Révolution√Françai se,√249(1982),√364.
-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und√Gesellschaft,√10(1984),√395-408. z
-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 (예) 홍길동,√『서양√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 동,√같은√책,√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 (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 age√of√Labor √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 ity√Press,√1980), √120.
- Ibid.
- Ibid.,√130.
-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 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 다.
- (예1)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15.
-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 uage√of√Labor √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 ity√Press,√1980) ,√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122.
-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 하지 않는다.
-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 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
-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 년 11월 14일)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 1장 편집위원회

- 제 1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 제 2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 제 4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 제 5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 제 6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 제 7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 제 8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9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0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수정 후 재심사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 17조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